2019년도 국정감사
요 구 자 료

2019. 11

청 와 대

대통령비서실

목 차

• 김정호 의원

1. 최근 3년간 주요사업 현황, 진행경과, 성과 ····· 3

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 수(성별구분), 휴가기간, 대체인력 운영기간, 급여액, 휴가 전 부서, 휴가 후 부서 ····· 3

3.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카드 사용 내역 ····· 4

43.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특활비 배부내역, 금액, 사용목적 ····· 4

59.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4

4.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일자, 국가, 내용, 인원, 소요비용, 지출예산코드 ····· 5

5.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시 분담금 납부 내역 ····· 5

6.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내역, 구매품목, 구매비용 ····· 6

7. 최근 3년간 계약,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내역(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구분, 품목, 금액, 수행자/기업, 수의계약 사유)? ····· 7

8.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 8

9. 최근 3년간 퇴직 직원의 이직한 현황(성명, 퇴직전 직급 및 부서, 이직처, 직급) ····· 8

19.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공무원 및 직원 재취업현황(성명, 퇴직전 직급 및 부서, 이직처, 직급) ····· 8

10.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 9

17.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 9

28. 최근 3년간 법률자문현황, 지출금액, 자문계약 상세내역 ····· 9

51.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 처리현황(수사기관별, 고발일자, 대상기관 및 개인명, 주요 고발내용, 처리내용) ····· 9

11.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외부 강연 내용, 장소, 강연료 내역 ····· 9

12. 최근 3년간 검경에서 통보된 비위내역(일시, 수사개시 통보내용, 처분결과 통보내용, 성명, 직급, 내부징계 내역) ····· 10

13. 최근 3년간 해킹 및 전산사고 내역 ····· 10

14. 최근 3년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일체 ····· 10

15. 최근 3년간 소속 위원회 및 위원장에 대한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 27

1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역,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 27

18.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 등 정부위원회의 판결, 권고, 시정, 제재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 ····· 28

20.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내역과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 ····· 28

2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 29

2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9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리스트 ····· 37

2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안건, 이에 따른 징계결과 ··· 37

25. 최근 3년간 직원 복리 후생비 현황, 복리후생 지원별 내용, 목적, 금액, 수혜직원 수 분류 ····· 37

26.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사업 현황 ····· 38

27.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현재기준 비정규직 현황 (인원, 직급, 업무부서, 업무내용 등) ····· 38

29. 최근 3년간 자체 연구보고서 리스트 및 설문조사 리스트(일시, 작성목적, 작성자 등) ····· 39

30. 최근 3년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 41

31.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금액 등) ····· 41

32. 최근 3년간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위원회 직급, 부서, 파견부처, 부서, 직급) ····· 41

33.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직급별 인원, 금액 분류) ····· 42

34. 최근 3년간 예결산 자료 일체 ····· 42

34. 최근 3년간 결산자료 일체 ····· 43

50.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 및 불용률, 불용 사유 ····· 43

35.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실시한 교육・홍보내역(기간, 내용, 비용, 주요 효과 또는 성과, 미흡점) ····· 44

3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연도별 법인카드 현황 (개수, 사용처, 소지자/부서, 예산코드 등) ····· 45

37. 최근 3년간 각 실(처)의 클린카드 발급 현황 및 지출규정 ····· 45

38. 과거 정직, 파면 및 해임 된 소속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복직현황(정직・파면・해임 사유 구체적 명기, 당시 근무부서, 복직사유, 복직 시 근무부처, 부서 및 직책) ····· 46

39. 최근 3년간 기관 산하 위원회 활동(설치근거, 설치 날짜, 설치 목적, 활동(회의) 내역,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내역/ 1회 1인당 지급내역, 운영비 지출내역, 위원(내/외부) 명단(약력 포함)) ····· 46

40. 최근 3년간 추진 사업 중 내외부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 3건, 가장 미흡한 사업 3건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자료 ····· 46

41. 현재기준 직원의 전과 기록 : 벌금형 이상(범죄이력, 현재 근무 부서, 직급) ····· 47

42. 최근 3년간 정부부처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성명, 직급, 현부서, 전 소속 부처, 부서, 직급) ····· 47

44.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홍보비 사용 금액, 지출처, 효과평가 내역 ····· 47

45.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 및 사유 ····· 48

46. 최근 3년간 인턴관련 자료(연별 인원, 목적, 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부서, 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발급건수) ····· 48

47. 최근 3년간 퇴직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등의 기타 혜택를 지급한 내역 ····· 48

48. 관용차량 보유 및 운용 현황(관련 법령 등 근거, 리스 및 유류비 등 사용 예산금액, 사용대상) ····· 49

49.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 제기한 인사소청 현황, 소청사유 및 결과 ····· 49

52.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 현황(목적, 인원, 부서, 직급, 사용금액, 사용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 50

53. 최근 3년간 직원 연가 사용 현황 ····· 51

54. 최근 3년간 비서실장의 취임사 및 이임사 ····· 51

55.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 52

5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조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 52

57. 최근 3년간 직원 초과근무 현황 ····· 53

58. 최근 3년간 부서의 법인·클린카드 부적절 사용 적발 현황, 처리결과 상세 내역 ····· 53

60. 최근 3년간 연도별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목록, 수여 대상, 수여 사유, 수여 시기, 취소 여부, 취소 시 사유 ····· 54

61. 최근 3년간 "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청와대, 전수조사 추진 결과 ···· 54

62. 최근 3년간 연별, 각 부처소관분류별 제개정된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건수 ····· 55

63. 최근 3년간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별 이관 후 조치결과 ····· 55

64. 최근 3년간 연별 비서실 직제표(성명, 직급, 부서 등-연말 혹은 최근 작성된 기준, 정원, 현원, 미충원 인원 현황 및 미 충원사유) ····· 56

65. 현재기준 5급이상(비서관, 수석비서관 등 포함) 신규 임용현황 소속, 성명, 직급, 주요경력, 주요업무 ····· 59

66. 최근 3년간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 61

67. 최근 3년간 대통령 기념품 구입 및 배부 현황(연별 예산, 품목, 계약업체, 구입일자, 수량, 단가, 배부내역), 관련 운영관리방안 내규 등 근거 규정 ····· 61

68.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 62

69. 최근 3년간 비서관, 행정관 등 소속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상세내역 ····· 63

70. 최근 5년간 예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63

• 김현아 위원

1.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감사 결과 ····· 67

2.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 67

3.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 현황 ····· 68

4. 자체 여론조사 현황(결과) 및 연구용역 보고서 ····· 68

5. 청와대 및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 ····· 70

6. 법적소송 현황 및 판결 결과 ····· 71

7. 공문 수·발신 목록 ····· 72

8.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관련 규정 ····· 72

9. 2017년 5월~2019년 현재, 정무직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현황 ····· 73

10.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74

11. 20만명 이상 참여, 청와대 청원 및 답변 주요 내용 ····· 74

12.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현황 ····· 74

13.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75

14.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 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 75

15. 외부 강의한 직원 현황 (강의일자, 강의장소, 직원명단, 주제, 대상, 강의료) ····· 75

16.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 76

17.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76

• 나경원 위원

1. 국정감사 및 감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79

2.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 87

3.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 88

4.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88

5.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 현황 ····· 89

6.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징계사유, 징계결과 내역 포함) ····· 89

7. 법적소송 현황 및 판결 결과 ····· 90

11.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인사검증시스템) 관련 규정 ····· 90

8. 외부 강의한 직원 현황(강의일자, 강의장소, 직원명단, 주제, 대상, 강의료) ····· 91

9. 자체 여론조사 현황(결과) 및 연구용역 보고서 ····· 92

10. 청와대 및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 ····· 94

12.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현황 ····· 94

13.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94

14. 20만명 이상 참여, 청와대 청원 및 답변 주요 내용 ····· 95

15.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위원장 방한대비 준비사항 ····· 95

• 박경미 위원

1.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 99

2.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 100

3.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청와대 감찰 관련 ····· 100
4.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감찰 관련 ····· 101
5.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 101
6.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관련 ····· 101
8.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의 범죄수사개시 통보 관련 ····· 102
9.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 103
10.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 징계 현황 ····· 103
11.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소송 현황 ····· 104
12.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청와대 정책연구용역 현황 ····· 105
13. 2018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이사회 현황 ····· 107
14. 2015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감사 현황 ····· 107
15.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서 목록 ····· 107
16. 2018년~ 2019.9 현재까지 월례 간부회의 자료 ····· 108
17. 2018년~2019. 9월 현재까지 기관장 지시사항 (일자, 내용, 처리현황) ··· 108
18. 최근 업무보고 자료 ····· 108
19. 2016년~2019. 9월 현재까지 도서발간 및 도서구입 목록 ····· 125
20. 2015년 ~ 2019년 9월 현재까지 정관 ····· 125
21. 2018년~2019년 9월 현재까지 법률자문 현황 ····· 126
22. 2018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 내역 ····· 126
23. 2016년~2019년 9월 배상 및 보상 현황 ····· 126
24.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 127

• 서삼석 위원

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조직 구성 (조직, 정원, 예산 등 개편 있을 때마다 날짜와 함께 새로운 조직, 정원 명기 요망) ····· 131

2. 기관에서 운영 중인 내규, 지침, 규정, 훈령 등 일체 ····· 134

3.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직원의 징계내역,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임직원 수사내역 및 징계내역 (징계사유 및 징계처리결과,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명기할 것) ····· 134

4.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 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 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 134

5. 최근 3년간(2017년 5월~ 현재까지)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원 조사 개시 통보서 ····· 135

6.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 144

7. 2019년 연초 실국별 업무계획 ····· 146

8.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 163

9.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지침 하달 내용 ····· 163

10.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 163

11.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 사본 ····· 164

12. 최근 3년간(2017년～현재) 비품 구매내역(구매품목, 구매금액) ····· 164

13.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고유 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 ····· 165

• 송언석 위원

1. 2017년 8월~2019년 10월, 청와대 1급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의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수령 내역 ····· 169

1. 회의, 전문가 자문 비용 관련 규정 전문 ····· 170

2. 2016년~2019.7월 기간의, 회의 개최와 관련된 비용 지급 현황 ····· 170

3. 2016년~2019.7월 기간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급 현황 ····· 170

4. 연구용역, 물품제공, 용역제공 등 계약 관련 규정 전문(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71

5. 2016년~2019.7월 기간의 물품 및 용역제공 수의계약 현황(계약 상대방과의 연도별 계약/거래 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171

6. 2016년~2019.7월 기간의 물품 및 용역제공 입찰계약 현황(계약 상대방과의 연도별 계약/거래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171

7. 2016년~2019.7월 기간의. 연구용역 발주/계약 현황 ····· 173

8. 여비 관련 규정 전문 ····· 175

9. 2016년~2019.7월 기간의, 여비 지급자 명단,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여비사용 세부내역 및 영수증 사본 제출 ····· 175

10. 휴대폰 운용 및 요금 관련 규정 전문 ····· 176

11. 2016년~2019.7월 기간의, 휴대폰 요금 및 구매비 지급자 명단 ····· 176

12. 직원포상 관련 규정 전문 ····· 177

13. 2016년~2019.7월 기간의, 직원포상 관련 예산 내역 ····· 177

14. 2016년~2019.7월 기간의, 직원포상 관련 사업계획서, 포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책, 포상 선정사유, 지급액, 지급방법 ····· 177

15. 차량운용 규정 전문 ····· 178

16. 2016년~2019.7월 기간의 운용한 차량 현황(운용했던 차량 포함) ····· 178
17. 렌트, 리스의 형태로 운용 중인 차량 관련 사항 ····· 178
18. 구매하여 운용 중인 차량 관련 사항 ····· 178
19. 2016년~2019. 7월 기간의 공용차량의 범칙금 납부내역 ····· 178
20. 2016년~2019.7월 기간의 공용차량별 유류비 집행 일지 ····· 178
21. 2016년~2019.7월 기간의 공용차량의 운용일지 ····· 178
22.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관련 규정 전문 ····· 179
23. 2016년~2019년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관련 예산 내역 ····· 179
24. 2016년~2019.7월 기간의,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관련 사업계획서, 구입 목적, 지급 대상(사용처) 및 지급 사유 ····· 179
25. 축·부의금 관련규정 전문 ····· 180
26. 2016～2019년 축·부의금 관련 예산 현황 ····· 180
27. 2016～2019. 7월 기간의 축·부의금 관련 사업계획서, 목적, 지급대상, 지급사유 ····· 180
28. 도서구입비 관련 규정 전문 ····· 180
29. 2016년~2019.7월 기간의 도서구입비 내역 ····· 181
30. 직원 근태 및 징계 관련 규정 전문 ····· 182
31. 2016년~2019.7월 기간의, 직원 근태현황 자료 및 징계현황 ····· 182
32.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기간제, 파견직 등) ·· 183
33.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 내역(부서별) ····· 184
34. 의약품 구매 지출 내역 ····· 184

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직원 비위발생, 징계, 수사개시통보 현황 및 내역 ····· 185

3.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지난 3년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임명 및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계획은? ····· 185

4.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에 대한 입장은? ····· 185

8.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조사, 적폐청산 추진 경과 및 실적 ····· 185

2. 10월 15일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는 그나마 튼튼한 편”이라고 언급한 근거 통계 및 자료 일체 ····· 186

5. 전현직 판사 및 검사의 청와대 근무현황 및 내역 ····· 187

6.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 내역(일정, 국가, 규모) 및 비용 일체 ····· 187

7. NSC 개최내역 및 대통령 참석 내역, 안건 일체 ····· 189

9. ‘제2대통령기록관’ 논란 및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경위 ····· 189

10.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및 지출부 일체 ····· 190

11. 대통령경호처, ‘미래대응업무 관련 연구’ 사업설명자료 및 집행내역 ··· 190

• 오신환 위원

1.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 193

2.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 193

3. 문재인정부 직제(조직도) 및 인원현황 ····· 193

4. 박근혜정부 직제(조직도) 및 인원현황(2017.5 기준) ····· 195

5.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 195

6. 감사원 및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이행 내역 ····· 205
7. 최근 5년간 문서 수발신 대장('19년 9월말까지) ····· 205
8. 최근 5년간 결재 문서 목록('19년 9월말까지) ····· 205
9.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목록 ····· 205
10.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목록 ····· 205
11.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보고서, 참석자 ····· 206
12. 최신 업무보고서 ····· 206
13. 최신 예산현황 ····· 223

• 이규희 위원

1. 직원 징계 현황(음주, 뺑소니, 성범죄 등, 2015년~2019 상반기) ····· 239
1-1. 사내 성범죄 신고 현황(성폭력, 성희롱 등 2015년~2019년 상반기) ··· 239
2. 2019년 주요 현안 3가지 ····· 239
3.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7년부터 2018년) ····· 256
4. 홍보비 집행 내역(2015~2018년) ····· 263
5. 연도별 여성채용 목표 대비 실적(2014~2018년) ····· 263
6.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2014~2018년) ····· 263
7.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연도별, 성별) (2014~2018년) ····· 264
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현황(2009~2018년) ····· 264
9. 부서별 여성 관리자 인원 및 비율 현황(2015~2018년) ····· 265
10. 직원 징계 후 타 소속기관 인사발령 현황 ····· 265

11. 어플리케이션 현황과 일평균 접속자 수 (2016~2019년 현재) ····· 265

12. 식당 현황 및 식당 내 사고 및 민원 사항(고객, 종사자 구분)(식중독, 화상, 미끄러짐, 사고 등)(2015~2019년 현재) ····· 266

13. 전기등록차량 대수 및 친환경 차량 대수 ····· 266

14. 국민청원 20만 건 이상 의 청원수, 답변한 국민청원의 수, 답변하지 않은 청원의 수와 그 사유 ····· 267

15. 2019 국정 목표 및 달성 정도 ····· 267

• 이만희 위원

1. 기관 개요 -업무보고 및 예산 현황, 조직구성 현황(정원 및 현원 등) ·· 271

2.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09월까지) 공문수발신 내역 ····· 288

3. 공직기강 등과 관련 ····· 288

15.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인사검증시스템) 관련 규정 ····· 288

4. 최근 3년간(2017년~2019.09월까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목록(담당과 기재) ····· 289

5. 소관 법령 위반 관련 ····· 289

6. 국정과제 및 대통령공약 사항 이행 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재) ····· 289

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90

8.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 298

9.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발주 현황(진행중/완료 구분, 용역과제명, 담당부처, 담당자, 용역수행기관,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포함) ····· 298

10. 2016~2018년 성과보고서 및 성과 미달성 과제 ····· 300

11. 최근 3년간 각 실의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 301

12. 최근 3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 330

13. 일본수출규제 대응성과 ····· 331

14. ASF 원인규명 진행상황, 양돈농가 대책 등 진행경과 ····· 331

• 이양수 위원

1. 기관 기본 현황 자료 ····· 337

2. 대통령비서실 각 수석급 이상, 국가안보실 차장급 이상, 대통령 경호처 각 실장급이상 명단 및 학력, 주요 경력 등 ····· 355

3.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국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58

3-3. 자체감사결과 ····· 366

4.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계약현황 ····· 367

5.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고위직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 368

6.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용역업체, 비정규직 현황자료 일체 ····· 368

7.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공문 수발신 목록 369

8.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 집행 현황 ····· 369

9. 2017년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 및 처리현황 목록 ·· 369

10. 현재(2019년 10월)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 370

11.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직원 징계 및 경찰·검찰 수사 현황 ····· 372

• 이인영 위원

1. 부처 업무보고서 및 예산 현황 자료 ····· 375

2. 대통령비서실 직제(조직도) 및 인원 현황 ····· 392

3. 최근 3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 396

4.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 396

5. 최근 3년간 청와대 직원 훈장, 포상, 표창 내역 ····· 398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99

7.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 407

8.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발주현황 ····· 407

9.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유형, 징계사유, 징계처분 일시 포함) ····· 409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 409

10. 최근 3년간 각 실의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 410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및 발간한 연구보고서 일체 ····· 439

12. 최근 3년간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 내용 및 소관부처별 이관후 조치 결과 ····· 441

13. 최근 3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 441

15. 최근 3년간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 442

16. 일본수출규제 대응성과 ····· 442

17. ASF 원인규명 진행상황, 양돈농가 대책 등 진행경과 ····· 443

• 임종성 위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44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456

3. 퇴직 임직원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부처 재취업 현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 연도별) ····· 457

4.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 연도별) ····· 457

5. 2015~2019.9 연도별 보직자 징계 현황 (징계사유 명시, 처분결과) ····· 458

6. 최근 3년 간 체결된 수의계약 세부현황 (계약명, 수의계약사유 등 명시) ····· 45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목록 ····· 459

8. 현재기준 직원의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 ····· 461

9. 최근 3년 간 여성, 장애인 등 고용 현황 (전체 정원 대비 현원, 법정기준 준수 여부 명시) ····· 461

10. 청와대 등 대통령 업무시설 EMP, 드론 방호대책 구축 현황 관련 설명자료 ····· 462

11. 각 기관 별 최근 5년 간 연도별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 ····· 462

12. 각 기관 별 최근 5년 간 연도별 주당 평균 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 462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성희롱, 성평등 교육 개최 현황 및 수료 현황 ····· 463

14. 최근 3년간('19년 9월말까지) 연도별 직급별 연차 사용률 ····· 463

• 정유섭 위원

1.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현황 및 관리 카드 사본 ····· 467

2.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날짜, 금액, 사유, 수령자 이름 등 ····· 467

20.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 내역 ····· 467

3. 회의 참석수당, 정책 자문료 지급 내역 (17년 5월 ~ 19년 현재까지) ·· 468

4. 특별감찰관 임명 계획 ····· 469

10.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 469

14.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법정소송 현황 및 판결 결과(현재 진행중인 소송 현황 포함) ····· 469

16.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인사검증시스템) 관련 규정 ····· 469

24.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 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 469

5.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휴직기간 및 업무복귀 기재) ····· 470

6.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현황 ····· 471

7.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운영현황 (유지보수횟수, 비용, 유지보수업체) ····· 471

8.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춘추관이 소비한 전력량 및 전기요금 (월별기재) ····· 471

9.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17년 5월 이후) ····· 472

11.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 472

12. 자체 여론조사 현황(결과) 및 연구용역 보고서 ····· 473

13. 설문조사 발주 현황 ····· 475

15. 공문 수·발신 목록 ····· 475

17. 정무직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현황 ····· 476

18.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017년 5월~2019년 현재) ····· 476

19.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참여, 청와대 청원명 및 답변 주요내용? ····· 477

21.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위원장 방한 대비 준비 사항 ····· 477

22.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현황 ····· 477

23.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478

25. 2017년 5월~2019년 현재, 외부 강의한 직원 현황 (강의일자, 강의장소, 직원명단, 주제, 대상, 강의료) ····· 478

• 조배숙 위원

1. 최근 5년간 국회운영위 업무보고/현안 보고자료 ····· 481

2. 2017, 2018회계연도 결산 세부 내역 ····· 498

3. 최근 3년간 출장비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498

4. 업무추진비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499

16.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499

5. 클린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500

6.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민원 및 민원 처리 현황(각 민원별 공문 사본 첨부) ····· 501

7.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501

8.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502

14.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감찰반 구성 현황 및 감찰반원에 대한 징계 현황 ····· 502

19. 청와대 공직감찰반 개편 및 쇄신안 발표 이후 현재 진행 상황(감찰반 업무내규 개정현황, 청와대 감찰반 직제령 개정 현황 등) ····· 502

9.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용차량 유류비/운영일지 (차종 및 공용차량 세부현황 첨부) ····· 503

10.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직원 포상 현황 ····· 504

11.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의계약 현황? ····· 504

12.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5급 행정관 이상 공무원 인사 현황 ····· 505

13.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 507

15.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현황(지원예산 첨부) ····· 507

17.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발언, 민정수석 발언, 대변인 명의 발언 및 관련 보도자료? ····· 508

18.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보도자료 전체 ····· 508

20.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 검찰, 경찰 및 외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현황 ····· 508

21.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입시정책 관련 대통령발언, 민정수석 발언, 대변인 명의 성명 또는 보도자료? ····· 509

22. 2019.10.25.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장관회의 안건 및 회의록 ····· 509

23. 최근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 현황(방문국, 체류일수, 순방시 대통령 발언) ····· 510

24.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해외정상과의 공동선언문, 공동회견문 ····· 511

25. 수소차량 도입시기 및 주행거리 ····· 511

• **별 첨** ····· 513

김 정 호 위원

1. 최근 3년간 주요사업 현황, 진행경과, 성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공통 붙임자료 2019년 주요 업무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 수(성별구분), 휴가기간, 대체인력 운영기간, 급여액, 휴가 전 부서, 휴가 후 부서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 총 3명(17년 1명, 19년 2명 / 女)

○ 출산휴가 : 총 3명(17년 1명, 19년 2명 / 女)　　* 휴가기간 90일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7월 5월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한 모든 인원에게 휴직과 휴가를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카드 사용 내역

43.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특활비 배부내역, 금액, 사용목적

59.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 (5.10. 이후)	12,488	5,850	3,711	663	7,194	4,500
'18년	9,650	9,650	1,521	1,407	7,194	7,106
'19년 (9월말 기준)	9,650	7,480	1,521	1,042	7,194	5,285

□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o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일자, 국가, 내용, 인원, 소요비용, 지출예산코드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시 분담금 납부 내역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19.10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19년 현재)

- 정원 : 490명 / 장애인공무원 : 18명(3.6%), 중증 1명 포함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분담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내역, 구매품목, 구매비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19. 9월말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물품납품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도별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5월 이후)	사무용품 등 16건	93.5
2018년	청소용역 등 33건	296.3
2019년(9월말)	사무용품 등 21건	112.8

7. 최근 3년간 계약,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내역(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구분, 품목, 금액, 수행자/기업, 수의계약 사유)?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용역 수행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 목록과 수행기관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

<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5월 이후)	정책용역 등 7건	65.2
2018년	정책용역 등 12건	225.4
2019년(9월말)	정책용역 등 4건	67.1

8.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o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9. 최근 3년간 퇴직 직원의 이직한 현황(성명, 퇴직전 직급 및 부서, 이직처, 직급)

19.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공무원 및 직원 재취업현황(성명, 퇴직전 직급 및 부서, 이직처, 직급)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17.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28. 최근 3년간 법률자문현황, 지출금액, 자문계약 상세내역
51.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 처리현황(수사기관별, 고발일자, 대상기관 및 개인명, 주요 고발내용, 처리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10번, 28번 및 51번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17번 관련, 감찰 관련 세부적 내용들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외부 강연 내용, 장소, 강연료 내역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최근 3년간 검경에서 통보된 비위내역(일시, 수사개시 통보내용, 처분결과 통보내용, 성명, 직급, 내부징계 내역)

○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이며, 이중 자체 징계는 직권면직 1건입니다.

13. 최근 3년간 해킹 및 전산사고 내역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PC, 통신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최근 3년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일체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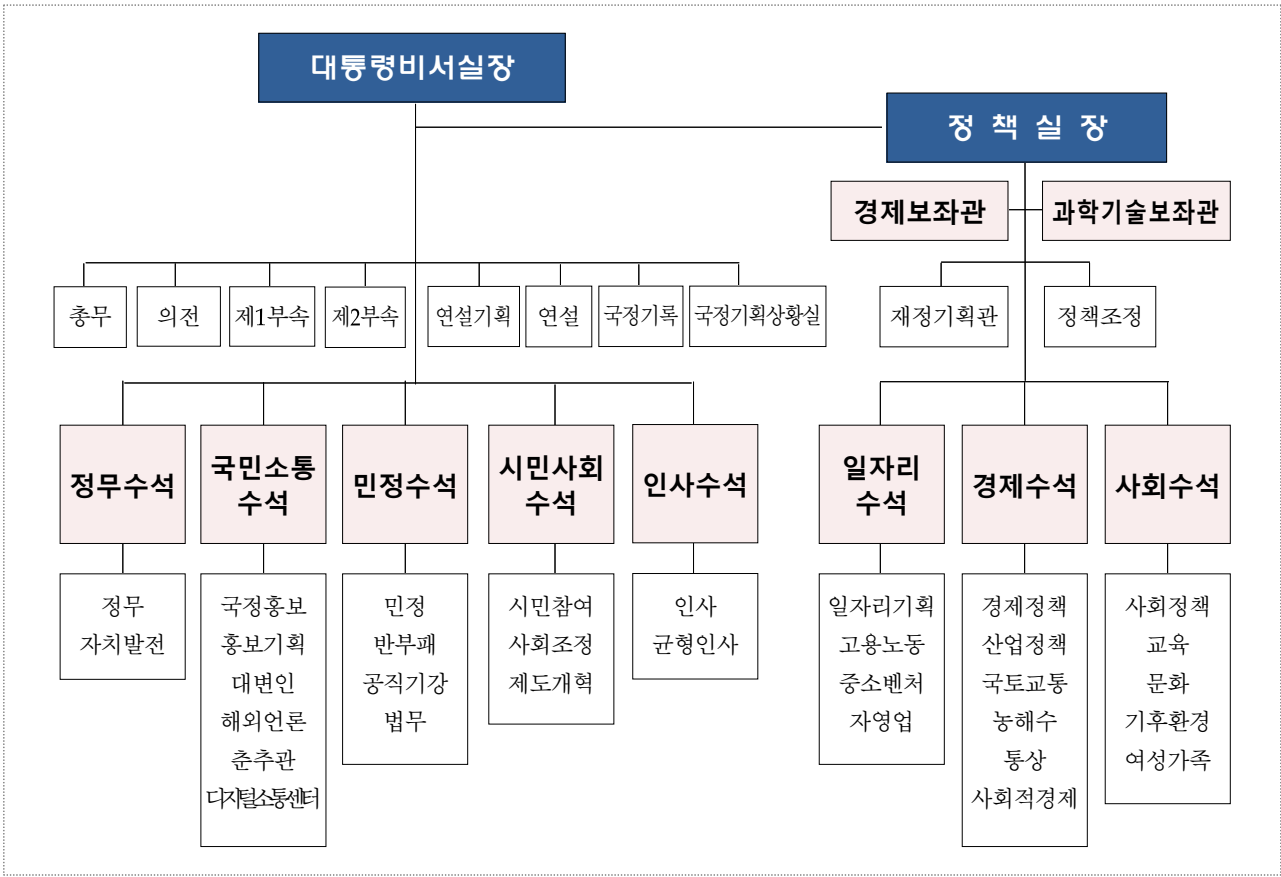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15. 최근 3년간 소속 위원회 및 위원장에 대한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역,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조사개시통보 : 해당사항 없음

18.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 등 정부위원회의 판결, 권고, 시정, 제재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내역과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ㅇ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ㅇ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ㅇ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ㅇ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ㅇ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ㅇ'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ㅇ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 (’ 17.7.19, ’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리스트

□ 첨부 1(보도자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안건, 이에 따른 징계결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 처분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5. 최근 3년간 직원 복리 후생비 현황, 복리후생 지원별 내용, 목적, 금액, 수혜직원 수 분류

□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직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맞춤형 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복리 후생 현황>

종 류	복리 후생비 예산 현황
맞춤형 복지	연간 350백만원
동호회 활동 지원	연간 21백만원
건강검진	연간 77백만원

26.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사업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동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현재기준 비정규직 현황(인원, 직급, 업무부서, 업무내용 등)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9. 최근 3년간 자체 연구보고서 리스트 및 설문조사 리스트(일시, 작성목적, 작성자 등)

□ 대통령비서실이 실시한 설문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30. 최근 3년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 요청하신 대통령비서실의 최근 3년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에 관한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 주요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금액 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 최근 3년간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위원회 직급, 부서, 파견부처, 부서, 직급)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직급별 인원, 금액 분류)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 최근 3년간 예결산 자료 일체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최근 3년간 예산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별첨 : ① 2018년도 예산 개요.
② 2019년도 예산 개요.
③ 2020년도 예산안 개요. 끝

34. 최근 3년간 결산자료 일체

50.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 및 불용률, 불용 사유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결산자료는 [별첨 1]로 제출합니다.
(2016회계연도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구체적인 불용 사유는 [별첨 1] 자료에 기재)

(1) 2017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불용액 (E=C-D)	불용률 (F=E/A)	불용사유
계	88,063	-	88,063	75,126	12,937	14.7.	-
인건비	34,691	-	34,691	33,376	1,315	3.8	집행잔액
기본경비	19,532	-	19,532	16,515	3,017	15.4	인위적 절감
업무지원비	19,856	-	19,856	13,870	5,986	30.1	(특활비,특경비)
국정평가관리	3,868	-	3,868	2,346	1,522	39.3	집행잔액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	4,782	4,205	577	12.1	집행잔액
행정효율성 증진	256	-	256	245	11	4.3	집행잔액
정보화 추진	4,625	-	4,625	4,159	466	10.1	집행잔액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	453	410	43	9.5	집행잔액

(2) 2018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불용액 (E=C-D)	불용률 (F=E/A)	불용사유
계	89,868	-	89,868	86,201	3,667	4.1	-
인건비	37,606	-	37,606	36,848	758	2.0	집행잔액
기본경비	18,518	-	18,518	17,256	1,262	6.8	집행잔액
업무지원비	16,392	-	16,392	16,252	140	0.9	집행잔액
국정평가관리	6,158	-	6,158	5,417	741	12.0	집행잔액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	4,782	4,510	272	5.7	집행잔액
행정효율성 증진	256	-	256	169	87	34.2	집행잔액
정보화 추진	5,680	-	5,680	5,298	382	6.7	집행잔액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	476	453	23	4.9	집행잔액

35.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실시한 교육·홍보내역(기간, 내용, 비용, 주요 효과 또는 성과, 미흡점)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소속직원의 교육프로그램인 상춘포럼을 비롯하여 청렴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내부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연도별 법인카드 현황 (개수, 사용처, 소지자/부서, 예산코드 등)

37. 최근 3년간 각 실(처)의 클린카드 발급 현황 및 지출규정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현재 보유 중인 카드는 모두 336개(농협BC)로서 최근 3년간 사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 실적(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도 (5월 이후)	2018년도	2019년도 (9월말 기준)
신용	3,036	2,896	672
직불	-	1,576	2,523
제로페이	-	-	-
합계	3,036	4,472	3,195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 작성에서 제외

□ 다만,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 행사에 소요되는 식사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세부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과거 정직, 파면 및 해임 된 소속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복직현황(정직・파면・해임 사유 구체적 명기, 당시 근무부서, 복직사유, 복직 시 근무부처, 부서 및 직책)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 최근 3년간 기관 산하 위원회 활동(설치근거, 설치 날짜, 설치 목적, 활동(회의) 내역,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내역/1회 1인당 지급내역, 운영비 지출내역, 위원(내/외부) 명단(약력 포함))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 최근 3년간 추진 사업 중 내외부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 3건, 가장 미흡한 사업 3건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자료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 현재기준 직원의 전과 기록 : 벌금형 이상(범죄이력, 현재 근무 부서, 직급)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소속직원의 전과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2. 최근 3년간 정부부처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성명, 직급, 현부서, 전 소속 부처, 부서, 직급)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홍보비 사용 금액, 지출처, 효과평가 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 및 사유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최근 3년간 인턴관련 자료(연별 인원, 목적, 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부서, 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발급건수)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인턴을 채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7. 최근 3년간 퇴직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등의 기타 혜택를 지급한 내역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 관용차량 보유 및 운용 현황(관련 법령 등 근거, 리스 및 유류비 등 사용 예산금액, 사용대상)

□ 2017년 5월 10일 이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68대이며, 이중 승용차량은 51대, 승합차량 13대, 화물차량 4대입니다.

○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2019)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타 자동차에 대한 세부 정보는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 제기한 인사소청 현황, 소청사유 및 결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 현황(목적, 인원, 부서, 직급, 사용금액, 사용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비 집행 현황(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	국내출장		국외출장		합계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2017년 (5월 10일 이후)	453	238	345	166	798	404
2018년	567	561	330	311	897	872
2019년 (9월말 기준)	570	383	300	203	870	586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공무 출장은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이 대외 공개될 경우 관련 활동이 위축되는 등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최근 3년간 직원 연가 사용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은 '18년은 법정연가일수 20일 중 9일(45%)이며, '19년은 연가사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 최근 3년간 비서실장의 취임사 및 이임사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5월 이후)~2019년(9월말)	시설물보수공사 등 17건	3,854

5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조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 최근 3년간 직원 초과근무 현황

- 전체 직원 초과근무시간, 1인당 평균시간, 부서별 평균시간 등

□ 요청하신 사항 중 **2017.5.9.까지의 자료는** 이전정부 자료로서,「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 현 정부 출범 후(2017.5.10.)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5.10. ~2019.9월까지의 초과근무 현황(5급 이하) >

구 분	연간 인원 (月평균 인원)	초과근무 실적 (월 평균시간)	1인당 평균시간
2017.5.10~12월	1,553 (194)	76,409 (9,551)	49.2
2018.1월 ~ 12월	2,478 (206)	107,468 (8,955)	43.4
2019.1월~ 9월	1,687 (187)	76,531 (8,503)	45.4

58. 최근 3년간 부서의 법인・클린카드 부적절 사용 적발 현황, 처리결과 상세 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 최근 3년간 연도별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목록, 수여 대상, 수여 사유, 수여 시기, 취소 여부, 취소 시 사유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포상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최근 3년간 "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청와대, 전수조사 추진 결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자는 가상통화 보유 사실을 신고토록 하였으나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2. 최근 3년간 연별, 각 부처소관분류별 제개정된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건수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사항과 인사, 조직운영 등 보안 관리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최근 3년간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별 이관 후 조치결과

□ 국민청원 시작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 23일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 수를 받은 청원은 모두 124건이며, 현재 답변된 청원은 모두 120건입니다. 4건은 청원답변 완료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건이며, 11월 22일까지 모두 답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목록을 유첨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 파일명: 국민청원_첨부.hwp

64. 최근 3년간 연별 비서실 직제표(성명, 직급, 부서 등-연말 혹은 최근 작성된 기준, 정원, 현원, 미충원 인원 현황 및 미 충원사유)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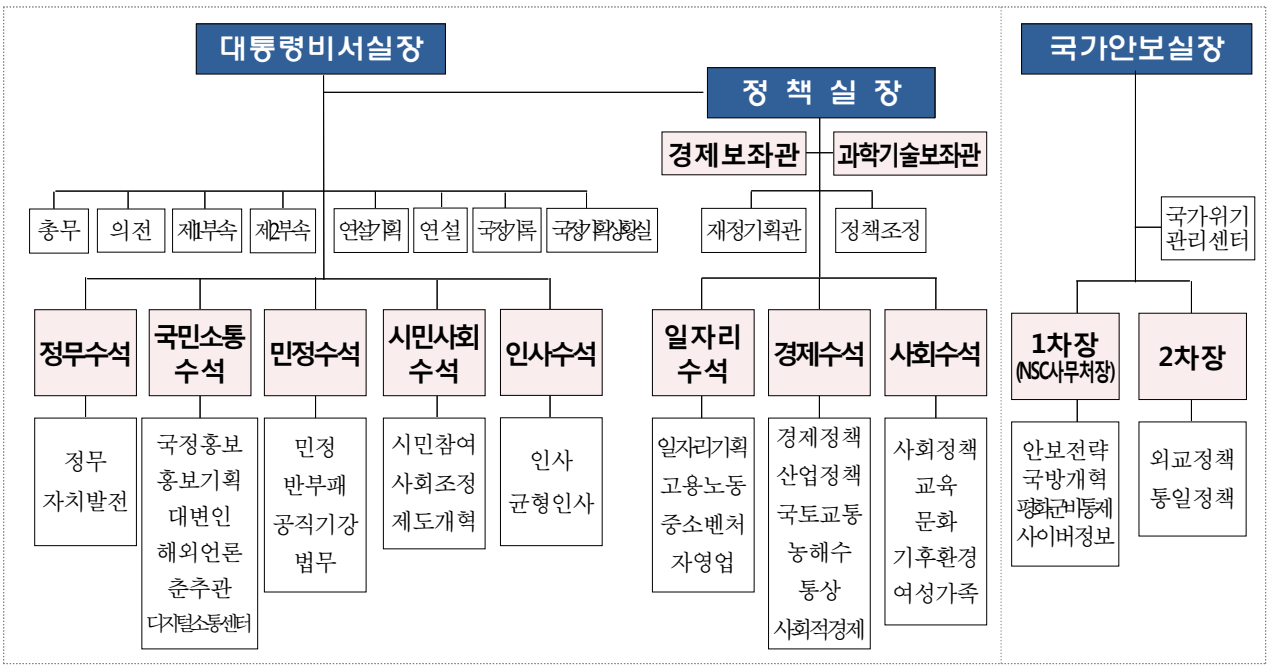
□ 조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NSC 포함)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① 17년 12월 기준



('18. 12월 기준)



('19. 10월 현재)



□ 인원 현황

○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5명을 포함하여 **총 490명**

① 17년 12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0	15	46	245	154
결 원	△30	-	△3	△19	△8

② 18년 12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1	14	46	249	152
결 원	△29	△1	△3	△15	△10

③ 19년 10월 현재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2	15	49	242	156
결 원	△28	-	-	△22	△6

65. 현재기준 5급이상(비서관, 수석비서관 등 포함) 신규 임용현황 소속, 성명, 직급, 주요경력, 주요업무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주요직위 재직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와대 주요 직위 현황 (2019. 10월 현재)

○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책실장	김상조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 법무비서관	김영식
○ 정무수석비서관	강기정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도한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민정수석비서관	김조원	○ 제도개혁비서관	신상엽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거성	○ 인사비서관	권용일
○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 균형인사비서관	권향엽
○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 정책조정비서관	이진석
○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승	○ 재정기획관	박종규
○ 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
○ 경제보좌관	주형철	○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	○ 경제정책비서관	도규상
○ 총무비서관	이정도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의전비서관	박상훈	○ 국토교통비서관	윤성원
○ 제1부속비서관	신지연	○ 농해수비서관	박영범
○ 제2부속비서관	최상영	○ 통상비서관	박진규
○ 연설기획비서관	오종식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연설비서관	신동호	○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문화비서관	양현미
○ 정무비서관	김광진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자치발전비서관	유대영	○ 여성가족비서관	홍승아
○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	○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
○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 대변인	고민정	○ 국방개혁비서관	김현종
○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	○ 사이버정보비서관	윤형중
○ 춘추관장	유송화	○ 평화기획비서관	최종건
○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 외교정책비서관	박철민
○ 민정비서관	이광철	○ 통일정책비서관	김창수

66. 최근 3년간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 대통령 지시사항은「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최근 3년간 대통령 기념품 구입 및 배부 현황(연별 예산, 품목, 계약업체, 구입일자, 수량, 단가, 배부내역), 관련 운영관리방안 내규 등 근거 규정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77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 등에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제작 업체의 정보는 중요 보안 사항**이고,

- 성격상 **대통령의 일정, 국정 수행 활동과 연계**되므로 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단가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면 선물에 대한 현물적 가치평가가 이뤄져 선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기념품은 내부 기준인 **'기념품 관리 운영 방안'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동 방안은 기념품의 단가, 제작 업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최근 3년간 비서관, 행정관 등 소속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상세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 최근 5년간 예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예산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 현 아 위원

1.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감사 결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2018년 3월)의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3.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자체 여론조사 현황(결과) 및 연구용역 보고서

□ 대통령비서실이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5. 청와대 및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

□ 대통령비서실 설문조사 발주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은 각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소송 현황 및 판결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2017. 5월 이전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2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
헌법소송	5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7. 공문 수·발신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8.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관련 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1-8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인사 및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 및 감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9. 2017년 5월~2019년 현재, 정무직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급(국무위원, 장관급), 차관급(차관, 처·청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등 총 142개 직위

- 국무총리 : 1
- 감사원장 : 1
- 장관(급) : 33(장관 18, 장관급 15)
- 차관(급) : 107(차관 23, 차관급 84)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공기업 30개 직위, 준정부기관 37개 직위, 기타공공기관 16개 직위 등 83개 직위

10.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첨1)과 같습니다.

11. 20만명 이상 참여, 청와대 청원 및 답변 주요 내용

□ 국민청원 시작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 18일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 수를 받은 청원은 모두 124건이며, 현재 답변된 청원은 모두 120건입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자료를 엑셀 파일로 유첨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120건의 답변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붙임 국민청원. 끝.

12.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현황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입니다.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 주요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 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이며, 이중 자체 징계는 직권면직 1건입니다.

15. 외부 강의한 직원 현황 (강의일자, 강의장소, 직원명단, 주제, 대상, 강의료)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17.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 (5월 10일 이후)	12,488	5,850	7,194	4,500
'18년	9,650	9,650	7,194	7,106
'19년 (9월말 기준)	9,650	7,480	7,194	5,285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o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 원 위원

1. 국정감사 및 감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국정 감사)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 17.7.19, ’ 17.9.27,’ 18.3.7.) 개최 -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감사원 감사)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3.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4.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 (5.10. 이후)	12,488	5,850	7,194	4,500
‘18년	9,650	9,650	7,194	7,106
‘19년 (9월말 기준)	9,650	7,480	7,194	5,285

□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o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징계사유, 징계결과 내역 포함)

○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이며, 이중 자체 징계는 직권면직 1건입니다.

7. 법적소송 현황 및 판결 결과
11.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인사검증시스템) 관련 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2017. 5월 이전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2번 및 11번 관련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
헌법소송	5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8. 외부 강의한 직원 현황(강의일자, 강의장소, 직원명단, 주제, 대상, 강의료)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자체 여론조사 현황(결과) 및 연구용역 보고서

□ 대통령비서실이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10. 청와대 및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

□ 대통령비서실 설문조사 발주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은 각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현황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입니다.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주요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만명 이상 참여, 청와대 청원 및 답변 주요 내용

□ 국민청원 시작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 18일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 수를 받은 청원은 모두 124건이며, 현재 답변된 청원은 모두 120건입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자료를 엑셀 파일로 유첨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120건의 답변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붙임 국민청원. 끝.

15.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위원장 방한대비 준비사항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국가안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국가안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경 미 위원

1.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2.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 **일자별 조치내역**
- **감사부서에서 통보한 공문서 사본**
- **감사부서로부터 받은 공문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2017. 5월 이전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3.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청와대 감찰 관련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감찰 관련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관련

- 권고목록
-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공문서 사본, 회답한 공문서 사본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관련

- 발생일, 발생내역, 책임사 소속부서 및 직급, 조치내역 및 근거조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8.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의 범죄수사개시 통보 관련

- 통보일자, 통보기관, 통보내용, 이에 대한 기관의 조치일자 및 조치사항

- 관련 수발신 공문서 목록 및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2017. 5월 이전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입니다.

9.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2017. 5월 이전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벌금형 2건입니다.

10.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 징계 현황
- 징계위원회 징계회부, 징계의결일자, 징계내용, 근거규정
- 징계당사자의 당시 부서, 직급
- 기관의 처분일자, 처분사항 등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소송 현황

- 소송제기일자, 기관의 원고/피고 여부, 소송요지, 현재까지의 심급일자별 심급별 승/패소 여부 및 승/패소 사유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2017. 5월 이전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2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
헌법소송	5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12.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청와대 정책연구용역 현황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13. 2018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이사회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2015년~2019년 9월 현재까지 감사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서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16. 2018년~ 2019.9 현재까지 월례 간부회의 자료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 2018년~2019. 9월 현재까지 기관장 지시사항 (일자, 내용, 처리현황)

□ 대통령 지시사항은「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최근 업무보고 자료

□ 대통령비서실의 최근 업무보고자료(주요업무 현황)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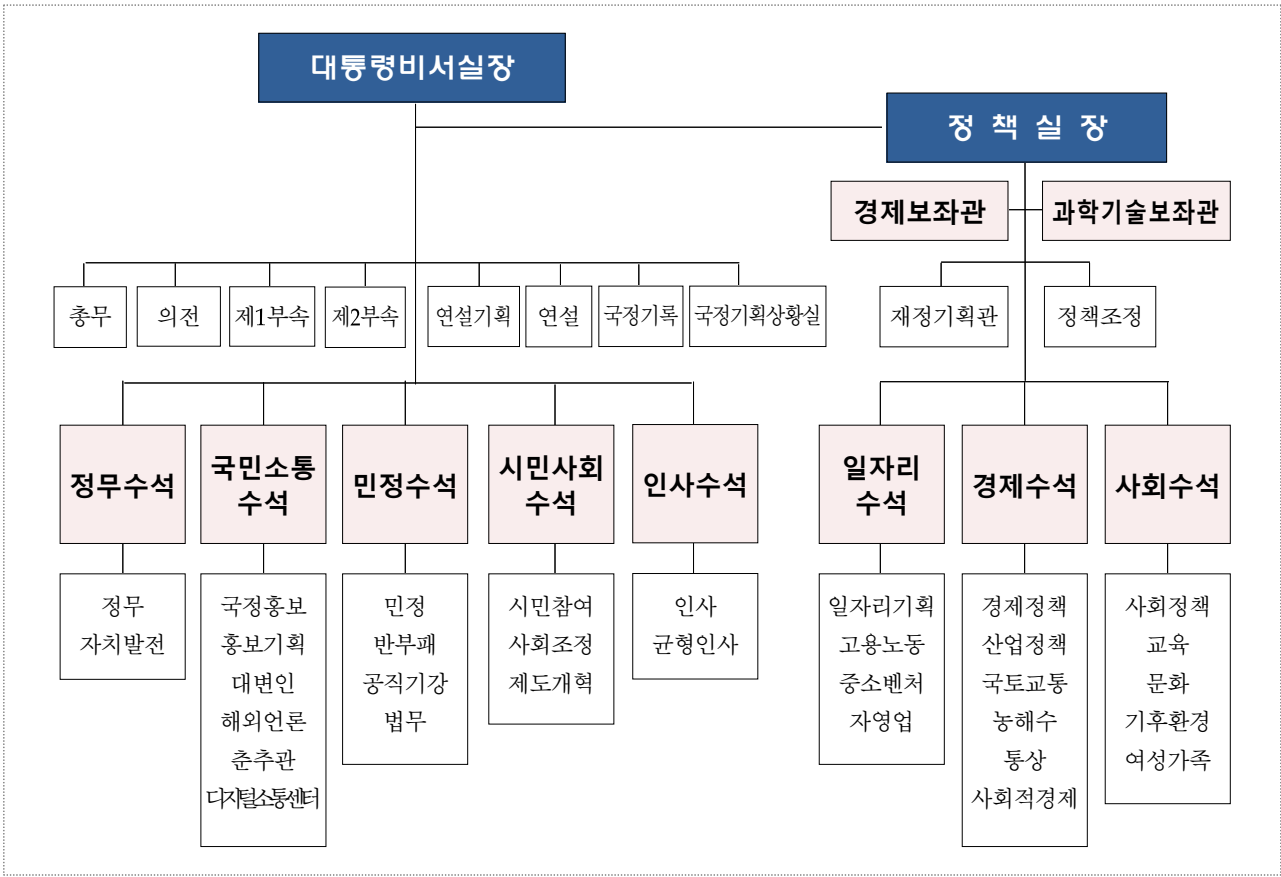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19. 2016년~2019. 9월 현재까지 도서발간 및 도서구입 목록

- 구입도서의 구입일자, 도서제목, 저자명, 출판사명, 구입한 수, 단가, 집행액, 근거규정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및 각종 국정과제 추진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참고용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17년(5월 이후)	2018년	2019년(9월말)	합계
집행액	7,713	16,600	5,232	29,545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불가하여 작성 제외
** (예산과목) 자산취득비. (근거규정)기재부「세출예산 집행지침」

○ 다만, 도서명·저자·출판사 등 세부 사항은 대외 공개 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등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15년 ~ 2019년 9월 현재까지 정관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2018년~2019년 9월 현재까지 법률자문 현황
- 일자, 법률자문 주요내용, 담당과, 자문기관, 자문료
- 법률자문 요구서 및 회신서 사본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2018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 내역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3. 2016년~2019년 9월 배상 및 보상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24. 2016년~2019년 9월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징계 필요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 세부 내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삼 석 위원

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조직 구성 (조직, 정원, 예산 등 개편 있을 때마다 날짜와 함께 새로운 조직, 정원 명기 요망)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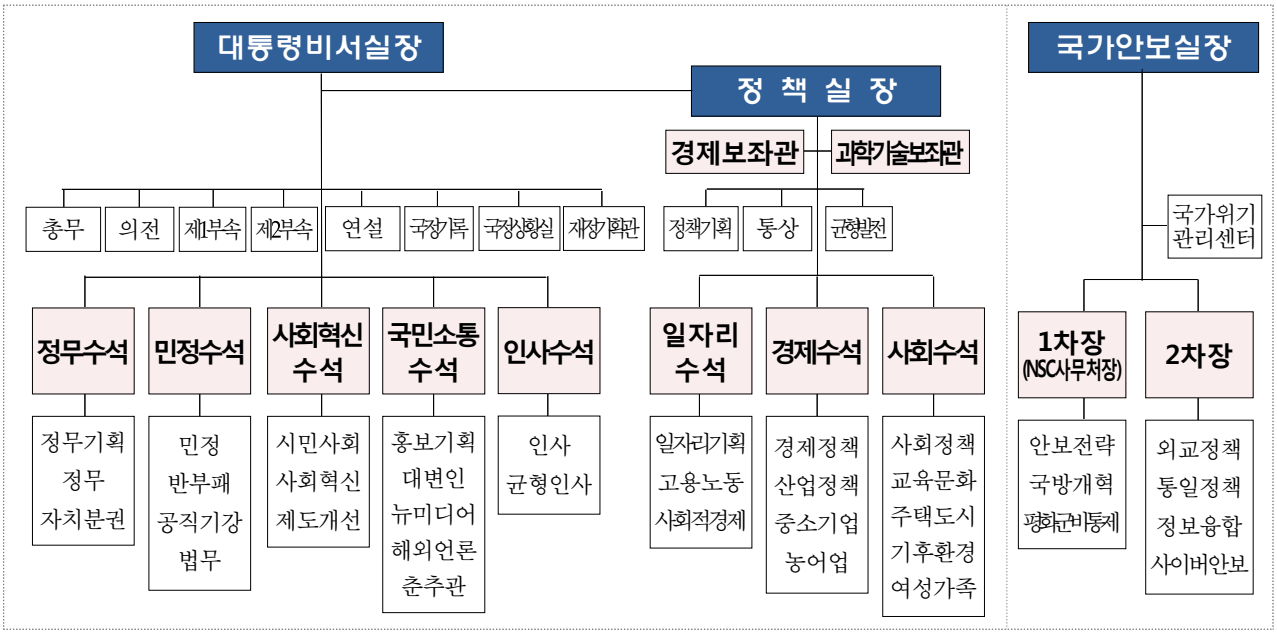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및 정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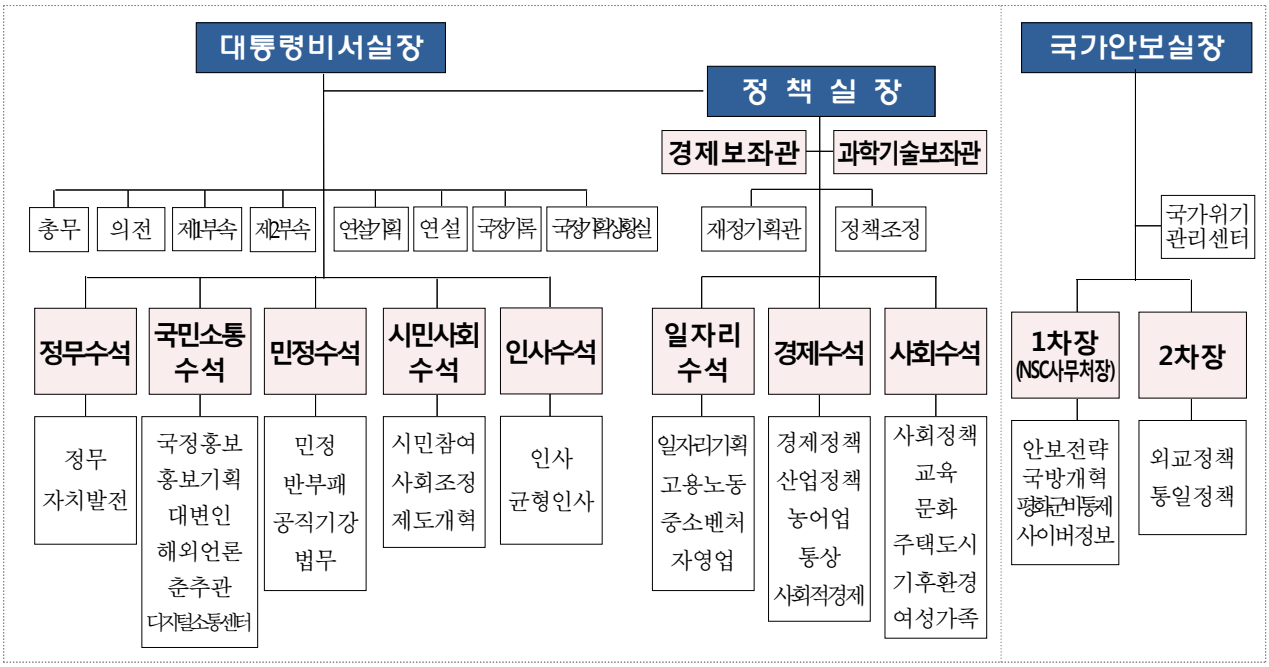
□ 조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NSC 포함)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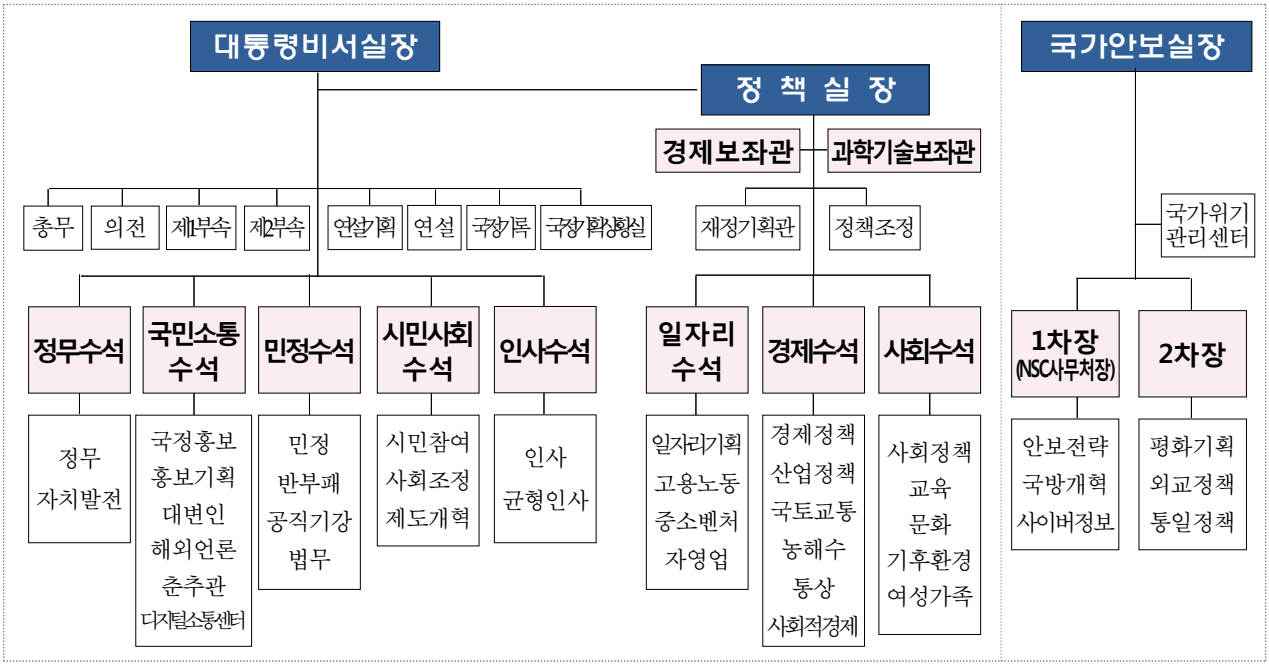
('17. 5월 기준)



('18. 7월 기준)



('19. 3월 기준)



□ 정원 현황

○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5명을 포함하여 **총 490명**(대통령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43명,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4명)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원 변동 사항은 없음**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2. 기관에서 운영 중인 내규, 지침, 규정, 훈령 등 일체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내부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사항과 인사, 조직운영 등 보안 관리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직원의 징계내역,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임직원 수사내역 및 징계내역 (징계사유 및 징계처리결과,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명기할 것)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이관되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3번 관련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이며, 이중 자체 징계는 직권면직 1건입니다.

4.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 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 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1부. 끝.

5. 최근 3년간(2017년 5월~ 현재까지)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원 조사 개시 통보서

(내부 감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내부감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인사 및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 및 감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국정 감사)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ㅇ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ㅇ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ㅇ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ㅇ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ㅇ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ㅇ'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ㅇ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 (’ 17.7.19, ’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감사원 감사)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6.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1) 법률자문 용역내역(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

2) 연구용역 내역(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용역기관, 수행기관, 계약금액 등)

□ 자료요구 6-1번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료요구 6-2번 관련,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7. 2019년 연초 실국별 업무계획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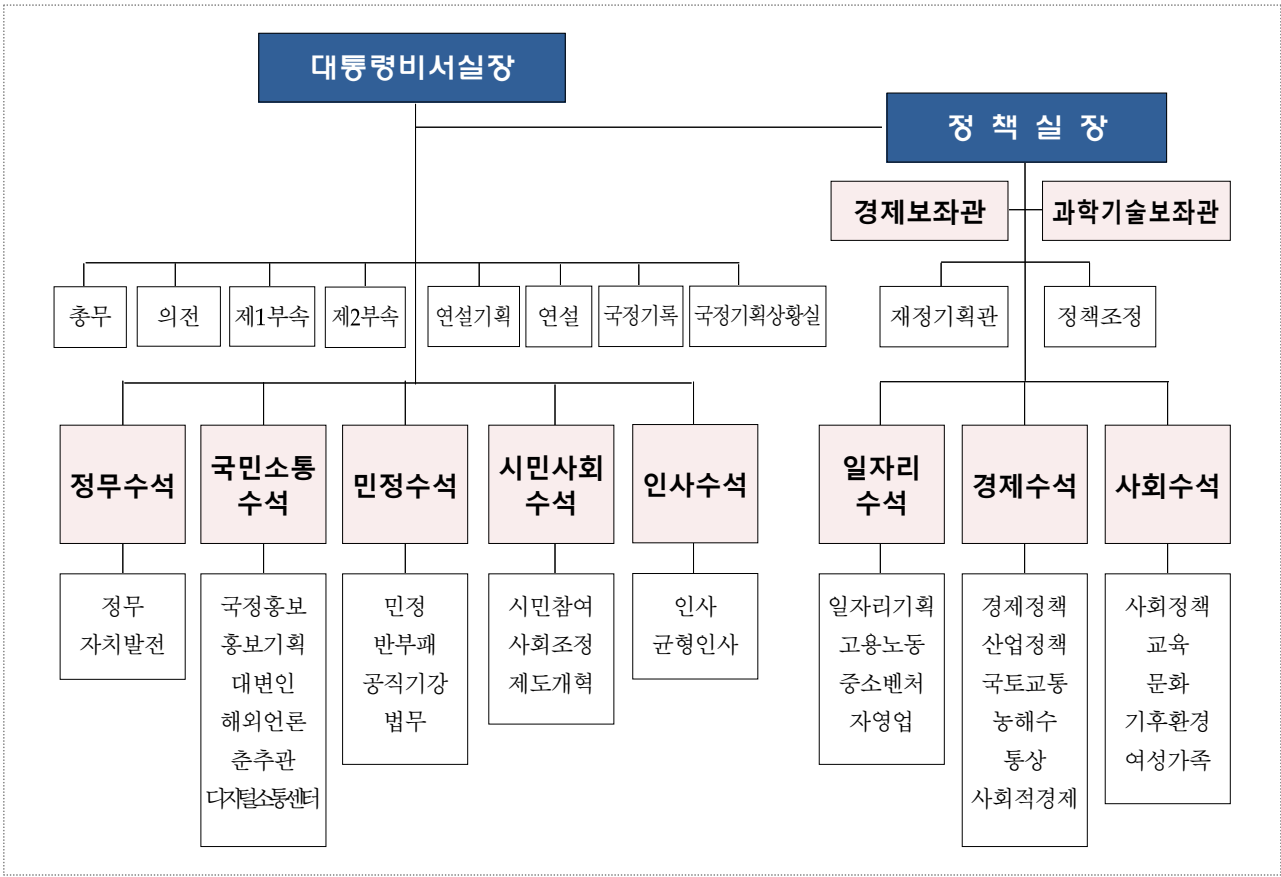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8.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지침 하달 내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 사본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정보공개 처리 결과 1부. 끝.

12. 최근 3년간(2017년～현재) 비품 구매내역(구매품목, 구매금액)

□ 2017년 5월 10일 이전 물품 구입 현황은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5월 10일 이후 구입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주요물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 경호구역 내의 물품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물품 취득 전체 현

황에 대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물품 취득 현황 >

('19. 9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품 종	품종별 세부 품목	취득액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잔디청소기, 주유기, 계수기 등	56
기타잡기기	TV, 선풍기, 속기록 비품, 마이크 등	546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측정용 계수기, 누수탐지기, 온·습도측정기 등	42
사무용기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	3,374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칸막이, 파일서랍, 탁자 등	155
산업기계	터보냉동기, 공기조화기, 냉난방기 등	1,335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차량 및 부속품, 냉장냉동 겸용장치 등	760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카메라 및 렌즈, 카메라받침대 등 부속품	1,039
전기·통신기기	방화벽장치,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1,009
계		8,316

※ 주요물품 : 50만원 이상 내구성물품 및 소프트웨어

13. 최근 3년간(2017년~현재까지) 고유 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송 언 석 위 원

1. 2017년 8월~2019년 10월, 청와대 1급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의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수령 내역

- 성명, 퇴직당시 직책/직급, 수령액(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으로 구분)

□ 공무원의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는 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당 자료가 부존재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1조(퇴직급여청구)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전문가 자문 비용 관련 규정 전문

2. 2016년~2019.7월 기간의, 회의 개최와 관련된 비용 지급 현황

- 회의 개요(일시・장소・목적・참석자・내용),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예산(경비)사용 세부내역

3. 2016년~2019.7월 기간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급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국정과제 등 각종 정책 추진 및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 등 긴급 현안 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691백만원입니다.

※ 지난정부 사항은 관련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곤란하여 작성 제외

□ 다만, 회의 참석수당, 자문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이 대외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자료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용역, 물품제공, 용역제공 등 계약 관련 규정 전문(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2016년~2019.7월 기간의 물품 및 용역제공 수의계약 현황(계약 상대방과의 연도별 계약/거래 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업명,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방 선정 사유, 계약상대방 선정방법, 계약금액

6. 2016년~2019.7월 기간의 물품 및 용역제공 입찰계약 현황(계약 상대방과의 연도별 계약/거래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업명,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 계약 상대방, 입찰방식, 계약 상대방 선정 사유, 계약금액

4. 계약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입찰유의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6~7. 물품 및 용역 계약 현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19. 7월말까지 물품 및 용역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도별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용역 연도별 계약 현황 >

('19.7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연도	계약 내역	계약 금액*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1억이상)	2017년 5월 이후	서비스용역 등 3건	853	보안, 단일 생산
	2018년	노후 기계설비 교체 등 8건	2,216	
	2019년 7월까지	전산시스템, 노후 기계설비 교체 등 6건	2,203	
	합 계		5,272	
경쟁계약 (2억이상)	2017년 5월 이후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등 7건	3,755	
	2018년	정책용역, 정보화용역 등 8건	3,536	
	2019년 7월까지	전산장비 및 유지관리 용역 등 4건	2,664	
	합 계		9,955	

* 계약서 기준

7. 2016년~2019.7월 기간의. 연구용역 발주/계약 현황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8. 여비 관련 규정 전문

9. 2016년~2019.7월 기간의, 여비 지급자 명단,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여비사용 세부내역 및 영수증 사본 제출

- 직급(직위), 성명, 소속 부서, 여비 사용 일시 및 장소, 출장사유 등 기재必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공무 출장 시 출장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국내출장		국외출장		합계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2017년 (5월 10일 이후)	453	238	345	166	798	404
2018년	567	561	330	311	897	872
2019년 (9월말 기준)	570	383	300	203	870	586

※ 지난정부 사항은 관련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곤란하여 작성 제외

□ 다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공무 출장은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이 대외 공개될 경우 관련 활동이 위축되는 등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대폰 운용 및 요금 관련 규정 전문

11. 2016년~2019.7월 기간의, 휴대폰 요금 및 구매비 지급자 명단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용 휴대폰은 141대 운용하고 있으며,

○ 지급 대상자는 업무수행상 보안이 특히 필요한 직원 및 시설관리 등 교대근무자로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직원 등 이며, 월 요금액은 1대당 평균 4만2천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보안 휴대폰 운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내용만 제출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직원포상 관련 규정 전문

13. 2016년~2019.7월 기간의, 직원포상 관련 예산 내역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산출 근거 (사업설명자료 등)

14. 2016년~2019.7월 기간의, 직원포상 관련 사업계획서, 포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책, 포상 선정사유, 지급액, 지급방법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포상은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국정과제 수행 등에 크게 기여한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 수여하였으며,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명	년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본경비-포상금	2017	26,000천원	26,000천원	-	-
	2018	26,000천원	26,000천원	-	-
	2019	26,000천원	-	-	-

□ 다만, 직원 명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포상 수여내역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차량운용 규정 전문

16. 2016년~2019.7월 기간의 운용한 차량 현황(운용했던 차량 포함)

- 차종, 차량번호, 주요 사용목적, 현재 차량상태(폐차 등), 보유형태(구매, 렌트, 리스 등)

17. 렌트, 리스의 형태로 운용 중인 차량 관련 사항

- 차량번호, 계약기간, 보증금/계약금, 월별 렌트/리스 비용, 차량에 투입되는 월별 기타비용(보험료 등)

18. 구매하여 운용 중인 차량 관련 사항

- 차량번호, 구매일시, 구매 당시 차량 금액, 현재 차량 금액, 연도별 차량가액(감가상각비)

19. 2016년~2019. 7월 기간의 공용차량의 범칙금 납부내역

- 차종, 차량번호, 운전자(직책/성명), 법규위반 당시 차량 운용목적, 법규위반 내용, 범칙금액

20. 2016년~2019.7월 기간의 공용차량별 유류비 집행 일지

- 차종, 차량번호, 운전자(직책/성명) 기재하여 해당 차량별 유류비 집행 일지 작성

21. 2016년~2019.7월 기간의 공용차량의 운용일지

- 차종, 차량번호, 운전자(직책/성명), 동승자(직책/성명) 기재하여 차량별 운용 일지 제출

□ 2017년 5월 10일 이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68대이며, 이중 승용차량은 51대, 승합차량 13대, 화물차량 4대입니다.

○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2019)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타 자동차에 대한 세부 정보는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보안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관련 규정 전문

23. 2016년~2019년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관련 예산 내역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산출 근거(사업설명자료 등)

24. 2016년~2019.7월 기간의,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관련 사업계획서, 구입 목적, 지급 대상(사용처) 및 지급 사유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규정」(인사혁신처 예규) 및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180백만원으로 기관 특성상 세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	불용	비고
2017	448	184	49	집행액 : 5~12월
2018	448	387	16	집행액 : 1~12월
2019	448	311	137	집행액 : 1~9월

※ 지난정부 사항은 관련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곤란하여 작성 제외

25. 축・부의금 관련규정 전문

26. 2016～2019년 축・부의금 관련 예산 현황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산출 근거

27. 2016～2019. 7월 기간의 축・부의금 관련 사업계획서, 목적, 지급대상, 지급사유

25. 축・부의금 관련규정은 별도 없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발행)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26. 축・부의금 관련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69	60	60

※ 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직원 경조사비)

27. 축・부의금 관련 별도 사업계획서는 없으며, 직원 경조사 발생시 수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28. 도서구입비 관련 규정 전문

□ 도서구입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을 따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59페이지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29. 2016년~2019.7월 기간의 도서구입비 내역

- 도서명, 저자, 구입권수, 구입목적, 구입부서, 부서별 연간 도서구입비 예산액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및 각종 국정과제 추진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참고용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17년(5월 이후)	2018년	2019년(9월말)	합계
집행액	7,713	16,600	5,232	29,545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불가하여 작성 제외
** (예산과목) 자산취득비. (근거규정) 기재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다만, 도서명·저자·출판사 등 세부 사항은 대외 공개 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등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30. 직원 근태 및 징계 관련 규정 전문

31. 2016년~2019.7월 기간의, 직원 근태현황 자료 및 징계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의 복무 및 징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을 징계 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2.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기간제, 파견직 등)

-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제출

- 파견직의 경우 파견 원 소속 기관 병기, 민간용역업체 파견직원 현황 별도 기제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NSC포함) 정·현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2019. 10월 현재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2	15	49	242	156
결 원	△28	-	-	△22	△6

* 근로자 고용현황 :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5명 고용

○ 아울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 내역(부서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17년 (5월 10일 이후)	12,488	5,850
‘18년	9,650	9,650
‘19년 (9월말 기준)	9,650	7,480

※ 지난정부 사항은 관련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곤란하여 작성 제외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o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의약품 구매 지출 내역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의약품 구매 지출내역’ 은 대통령 경호처 소관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직원 비위발생, 징계, 수사개시통보 현황 및 내역

3.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지난 3년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임명 및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계획은?

4.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에 대한 입장은?

8.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조사, 적폐청산 추진 경과 및 실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1번 관련, 현 정부출범 이후 ’19. 9월말 현재 범죄수사 개시 통보는 14건, 처분결과통보는 33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3번 관련,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차례 임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 국회에서 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지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요구 4번 관련, 감찰 관련 세부적 내용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8번 관련,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요청하신 자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0월 15일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는 그나마 튼튼한 편”이라고 언급한 근거 통계 및 자료 일체

□ 글로벌 경기는 18년부터 둔화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 최근 IMF도 금년도 세계경제가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세계경제 성장률(%, IMF): ('18)3.6 ('19)3.0 ('20^{e})3.4

○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거시경제는 그나마 튼튼한 편”이라는 발언은

○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하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 우리 경제의 성장률, 대외 신인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주요 국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30-50 국가 성장률 비교(%, '17~'18년 실적 '19년은 OECD 9월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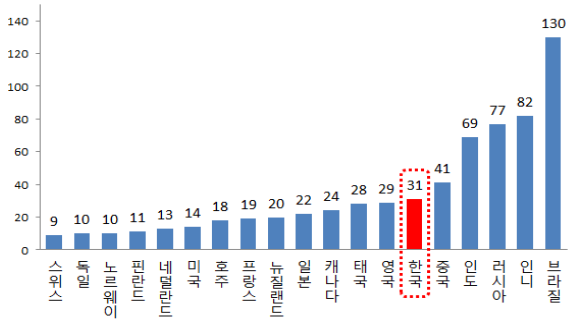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17년(실적)	2.2	3.1 (1위)	2.3	1.8	2.2	1.9	1.7
'18년(실적)	2.9	2.7 (2위)	1.7	1.4	1.4	0.8	0.9
'19년(전망)	2.4	2.1 (2위)	1.3	1.0	0.5	1.0	0.0

< 신용등급 비교 >

	S&P	무디스	피치
AA(Aa2)	한국 영국, 프랑스	한국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AA-(Aa3)			한국
A+(A1)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A(A2)			일본

*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 주요국 CDS 프리미엄(10.18일) >



5. 전현직 판사 및 검사의 청와대 근무현황 및 내역

□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판사, 검사 근무경력이 있는 비서관급 이상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사경력) 김영식 現 법무비서관, 김형연 前 법무비서관,
(검사경력) 박형철 現 반부패비서관

□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 내역(일정, 국가, 규모) 및 비용 일체

□ 해외 순방 내역

- 미국 방문('17.6.28.-7.2.)
- 독일 공식방문 및 G20 정상회의(독일 함부르크) 참석('17.7.5.-10.)
-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러시아 방문('17.9.6.-7.)
- 제72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7.9.18.-22.)
-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APEC 정상회의(베트남 다낭), 한-ASEAN/ASEAN+3/EAS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 참석('17.11.8.-15.)
- 중국 국빈방문('17.12.13.-16.)
- 베트남 국빈방문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공식방문('18.3.22.-28.)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일본 도쿄) 참석('18.5.9.)
- 미국 방문('18.5.21.-24.)
- 러시아 국빈방문('18.6.21.-24.)
-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18.7.8.-13.)
- 제73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8.9.23.-27.)
- 프랑스 국빈방문,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제12차 ASEM 정상회의(벨기에), 제1차 P4G 정상회의(덴마크) 참석 및 덴마크 공식방문 ('18.10.13.-21.)
- ASEAN 정상회의(싱가포르) 및 APEC 정상회의(파푸아뉴기니) 참석('18.11.13.-18.)
-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참석 및 뉴질랜드 국빈방문('18.11.27.-12.4.)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 국빈방문('19.3.10.-16.)
- 미국 방문('19.4.10.-12.)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국빈방문('19.4.16.-23.)
-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국빈방문('19.6.9.-16.)
-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참석('19.6.27.-29.)
- 태국 공식방문, 미얀마 및 라오스 국빈방문('19.9.1.-6.)
- 제74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9.9.22.-26.)

□ 동행 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

o (동행 인원) 대통령 해외순방시 청와대 수행원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및 안보실 직원으로 구성됩니다(대통령 경호처 별도). 수행원 명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예산집행 현황)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o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NSC 개최내역 및 대통령 참석 내역, 안건 일체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국가안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국가안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2대통령기록관’ 논란 및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경위

□ 대통령께서는 9월 11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관련 사항을 인지하셨고,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된 데 대해 당혹감을 표현하신 바 있음

○ 당일(9.11.)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린 대로,

- 대통령께서는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며,
-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0.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및 지출부 일체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근매식비 집행 총액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7년(5월 이후)	2018년	2019년(7월말 까지)
금액	480	723	369

- 다만, 집행내역 및 지출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통령경호처, '미래대응업무 관련 연구' 사업설명자료 및 집행내역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통령경호처 '16-1200-1231-304-260 :
일반행정-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경호행사지원-경호안전교육원 운영-연구용역비(2천만원)의 사업설명자료 및 집행내역,
용역결과물(없을 경우 중간보고서)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신 환 위원

1.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2.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문재인정부 직제(조직도) 및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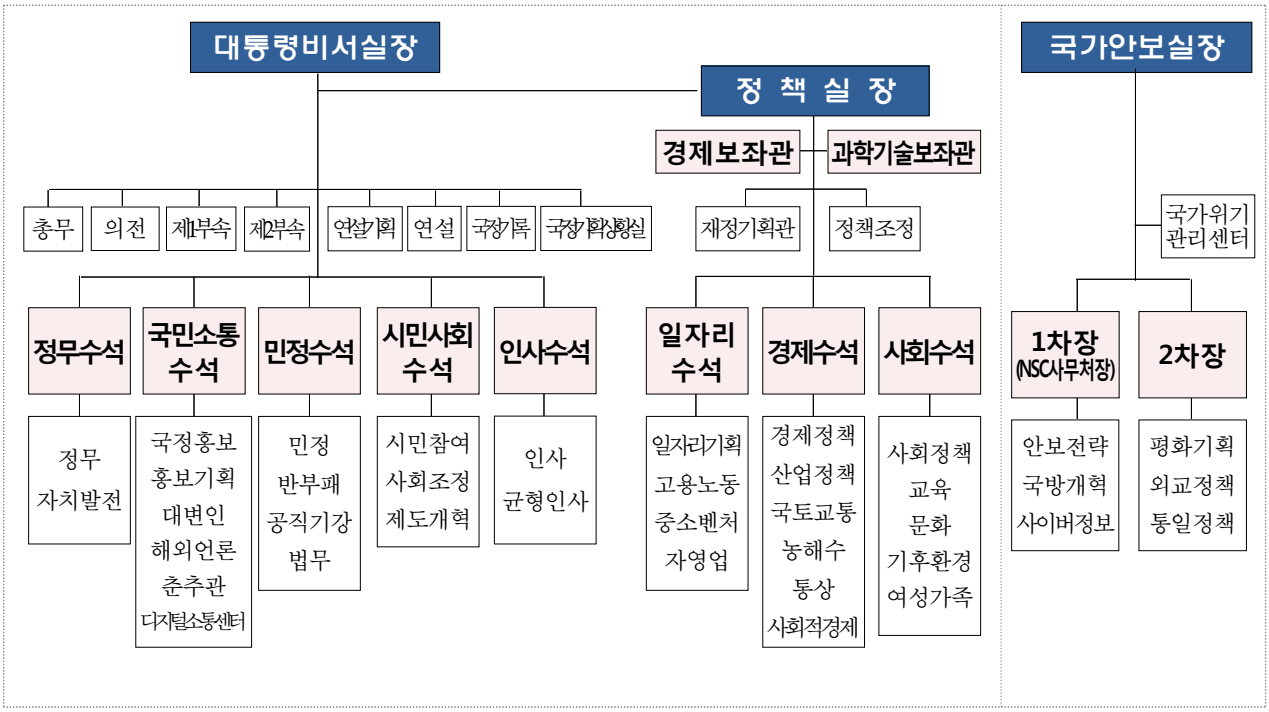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NSC 포함)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장(장), 정책실장(장), 8수석·2보좌관(차), 42비서관,
-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장), 2차장(차), 7비서관으로 구성



□ 인원 현황

○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5명을 포함하여 **총 490명**이며, **현원**은 **453명**임

(2019. 10월 현재)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53	15	49	235	154
결 원	△37	-	-	△29	△8

4. 박근혜정부 직제(조직도) 및 인원현황(2017.5 기준)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 2016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청와대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및 해소 노력을 기울일 것	○ 현재 법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사법절차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됨
2. 사드배치 및 영남권 신공항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검토할 것	**< 사드 배치 관련 >**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 한·미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北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2/3 지역 방어 ○ 다만,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임 **< 신공항 관련 >** ○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방안 확정·발표('16.6)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소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17.6 착수)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17.8 착수) 등 추진 중임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음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지역 의견 등을 적극 수렴 계획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설계('18~'20), 용지보상 및 공사('20~'25), 종합시운전('25) 등을 거쳐 개항 추진 예정임
3. 경제성장률 저하, 가계부채 증가, 수출 부진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현안점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경기회복세 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 추진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17.6.19),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17.7.16),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 추석 민생안정 대책('17.9.2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7.10.18) 등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17.7.25)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 방안 추진 *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중심 및 소득주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성장」,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을 쌍끌이 방식으로 추진하고,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 ○ 가계부채는 취약차주 맞춤형 대책,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가계의 상환능력 제고노력 및 공적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연착륙 유도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민간합동 수출지원협의회('17.9.26), 한중 통상점검 TF회의('17.9.13) 등을 통해 수출상황 지속 점검 및 수출 애로 해소 지원방안 수립.추진 - 이에 따라 최근 수출 호조세 전환하여 '17년 연간 수출실적 3년만에 무역 1조불 회복 전망 - 美 트럼프정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 中 사드 보복조치 등 통상이슈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및 상품 다변화 정책 적극 추진
4. 특별감찰관 면직 이후 사실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감찰관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후임자를 임명하는 등 청와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2인에 대한 추천절차 완료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지명절차를 진행하겠음
5.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것	○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6.2)한 바 있으며, 새만금특별법('16.12), 조세특례제한법('16.12) 개정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 * 사업시행자 인센티브 부여(입지 지원, 세제 지원), 국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입지 지원, 세제 지원), 도시계획·건축 규제 완화, 규제개선 프로세스 도입,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행정구역 조기 확정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새정부 국정과제에 공공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새만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2023 세계 잼버리 행사 유치 지원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ㅇ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ㅇ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ㅇ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ㅇ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 17.7.19, '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6. 감사원 및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이행 내역

□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2)와 같습니다.

7. 최근 5년간 문서 수발신 대장('19년 9월말까지)
8. 최근 5년간 결재 문서 목록('19년 9월말까지)
9.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목록
10.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11.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보고서, 참석자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최신 업무보고서

□ 대통령비서실의 최신업무보고서(주요업무 현황)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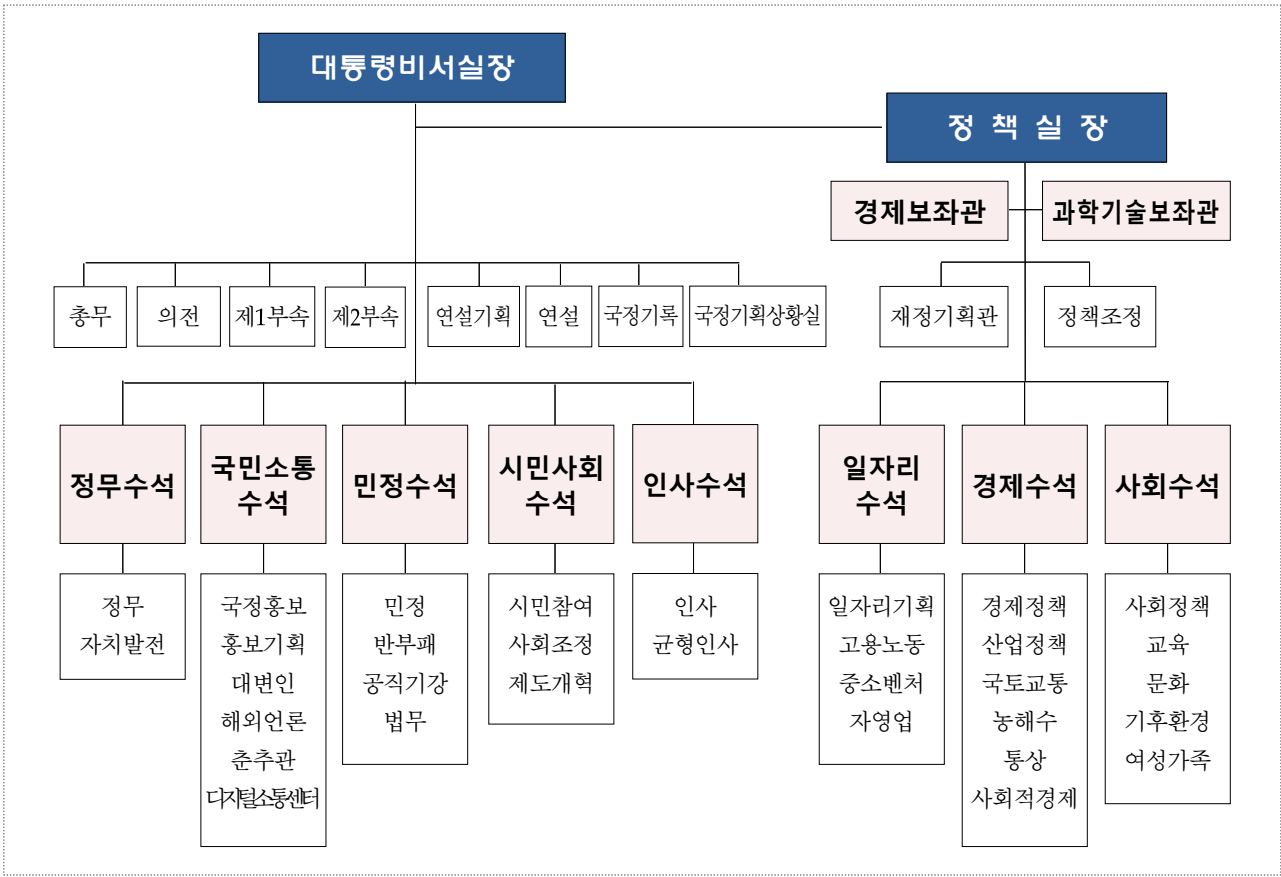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13. 최신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억원)

‘17	‘18	‘19
881	899	937

(별첨 1)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2015회계연도 이전 사안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2018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는 19년 10월 현재까지 미확정.

□ 2016회계연도 (총 4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업무용 승용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필요	○[지적사항]「공용차량관리규정」및「2016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은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량 30대는 블랙박스 설치실적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금지 및 안전운행 유도 등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	제도개선	○ 행사·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설치 완료	조치완료
(2)불필요한 예산 편성 자제 필요	○[지적사항] 신규 무정전전원장치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노후 배터리 교체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18년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 확대 필요 등	○[지적사항]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비율이 낮고, 전체 연구용역 중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정책연구용역의 비율(75%)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주의	○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용역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 중 ○ 17년도에 현 정부가 수행한 연구과제(총 4건)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제시된 공개 기준(1천만원)에는 미달하나 - 국회 지적사항의 취지를 존중, 1건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미 대국민 공개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부득이 비공개하였음	조치완료
(4) 과도한 예산 불용 방지 노력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국정평가관리)은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39억 3,500만원) 대비 16%(6억 6,200만원)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국정평가관리사업의 세부 사업별 담당자 지정, 예산집행계획 제출(1.31), 매월 진도관리 등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조치완료

□ 2017회계연도 (총 10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준수 필요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각 분기별로 6%, 30%, 30%, 34%룰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분기별로 14.5%, 17.6%, 14.2%, 53.7%를 집행하여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에 편중되게 집행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산취득비를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19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말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 연가사용 활성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적정 편성 필요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년도 연가보상비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2,1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8,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43.4%에 불과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수행하기 위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연가사용을 권장하는 문화가 정착 시 향후 연가보상비 집행도 연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직원들의 연가사용일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연가보상비의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 19년도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시 연가보상일수를 작년보다 축소하여 편성하였음(10일→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 국정평가관리 사업 집행실적 부진	○[지적사항] 2017년도 동 사업 예산 38억 6,800만원 중 23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0.7%에 불과하며,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5.4%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2017년도 예산 23억 1,700만원 중 12억 8,1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5.3%에 불과함(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은 78.1%).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등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19년 동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18년 6,158백만원 → '19년 4,491백만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 확대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의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2억 7,0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전 정부가 2,69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 정부는 3,690만원을 집행하여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가 추진한 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1건은 공개하고 있으나, 나머지 3건은 용역 집행내역은 물론 연구과제명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18년도 수행한 총 10건 중 공개 가능한 2건에 대하여 대국민 공개 완료하였으며 - 법령상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국민 공개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 사이버교육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업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교육내용으로 구축된 사이버교육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해 전액 집행하였음. - 2017년 동 사이버교육원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인원이 1,166명으로 월 평균 97명만이 활용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관 내 업무전상망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안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매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직원들에게 안내·홍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시 중에 있음 ※ '18년 연간 이용인원(1,329명)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6)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필요	○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에 2017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러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컨텐츠 업데이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인원과 비교하면 방문인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의 컨텐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18년 12월에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였음 - 상식·과학·문화유산·전래동화 등 어린이 교육용 컨텐츠 및 기능 강화 등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7) 도메인 사용개수 축소에 따른 도메인사용료 적정 편성 필요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터넷 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등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이를 비방·조롱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관련 도메인을 구입·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 및 대통령과 관련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여 관리·운영함. - 2017년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44만원으로 집행률이 34.9%에 불과함. - 이는 당초 예산을 도메인 200개를 1개당 35,000원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관리하는 도메인 수량을 과거 대비 50% 수준인 106개로 축소하였으며 1개당 평균 단가도 23,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지속적인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메인 관리수량 및 단가에 따라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19년도 예산은 변경된 수량과 단가에 맞추어 절감 편성함 (17년·18년 각 700만원 → 19년 350만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8) 국민청원 게시판의 법적성격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게시판에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청원, 민원, 고충민원 등과 혼동의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되는 의견의 법적성격이 타 법령상의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제도개선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신문고(권익위)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청원 제출 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지 않고 제출된 의견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며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만 답변하는 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타 법령에 규정된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나 o 19년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통해, - 타 법령상의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더욱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FAQ메뉴를 신설하여 - 청와대 국민청원의 이용방법과, 운영원칙을 사례를 제시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타 법령상 청원, 민원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있음 - 또한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하여, 법령상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9) 국가안보실의 적정 인력운용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2017년말 기준 국가안보실의 현원(37명)은 정원(43명)대비 6명이 결원상태이나, 실제로는 다수의 파견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견인력 규모는 대략 80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바, 정원의 2배에 이르는 파견인력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확한 기관별 파견인원 현황에 대해 국가기밀, 보안 등의 다루는 대통령비서실 업무 특성상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함.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의 파견인력 운용현황을 소관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한편, 적정한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국가안보실은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긴급현안 대응 및 국가위기관련 상황관리(24시간 근무체계 구축) 등을 위해 최소한의 파견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 파견 인력 직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파견인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의 과정에서 파견인력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 및 설명 실시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th></tr>
<tr><td>(10) 특수활동비 축소 및 내외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td><td>○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124억 8,800만원 중 88억 1,200만원(70.6%)을 집행하였음.

- 특수활동비가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되거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특활비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감액하고, 기밀성이 부족한 사업은 최소화하거나 투명성이 높은 비목으로 전환하는 등 특활비의 불투명성과 오용가능성을 제거할 것</td><td>시정</td><td>○ 현 정부 출범 시 특수활동비 절감계획('17.5.25)을 마련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였음

특수활동비 예산
<table><tr><td>'16년</td><td>'17년</td><td>'18년</td><td>'19년</td></tr><tr><td>147억원</td><td>125억원</td><td>97억원</td><td>97억원</td></tr></table>
○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집행내용을 포함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임</td><td>조치완료</td></tr>
</table>

<별첨 2>

감사원 및 외부기관 감사결과 및 이행 내역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지난 정부 관련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이 규 희 위원

1. 직원 징계 현황(음주, 뺑소니, 성범죄 등, 2015년~2019 상반기)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사내 성범죄 신고 현황(성폭력, 성희롱 등 2015년~2019년 상반기)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2019년 주요 현안 3가지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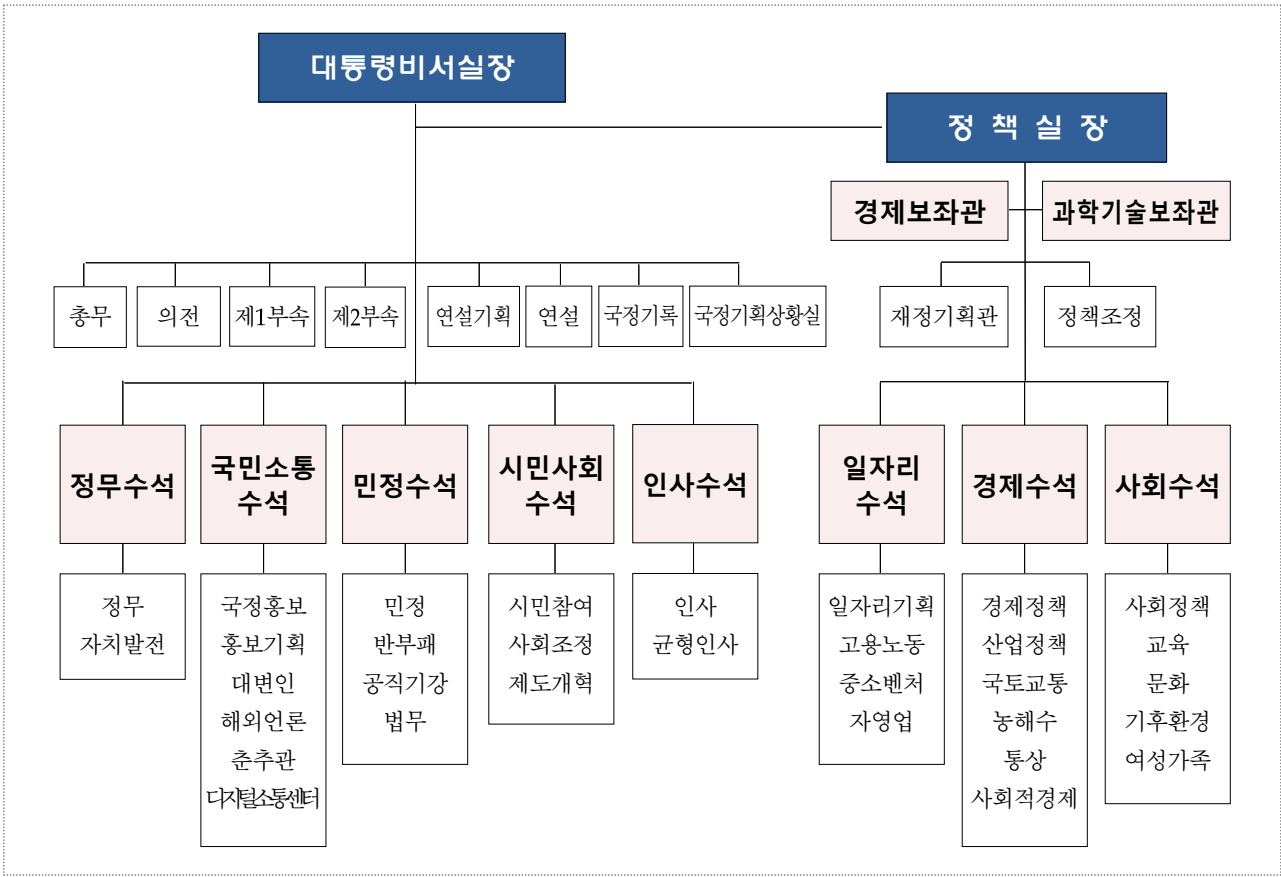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3.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7년부터 2018년)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ㅇ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ㅇ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ㅇ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ㅇ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갔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 (9.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 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4. 홍보비 집행 내역(2015~2018년)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연도별 여성채용 목표 대비 실적(2014~2018년)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2014~2018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19.10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임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현황(’19년 현재)

- 정원 : 490명 / 장애인공무원 : 18명(3.6%), 중증 1명 포함

7.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연도별, 성별) (2014~2018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 총 3명**(17년 1명, 19년 2명)

소속	성별	휴직기간
대통령비서실	여	평균 9개월

○ **출산휴가 : 총 3명**(17년 1명, 19년 2명)

소속	성별	휴가기간
대통령비서실	여	90일

□ 아울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7월 5월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신청한 모든 인원**에게 휴직과 휴가를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현황(2009~2018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9. 부서별 여성 관리자 인원 및 비율 현황(2015~2018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성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기준	계(현원)	남	여	비고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	2017. 12.	61(100%)	52(85%)	9(15%)	
	2018. 12.	60(100%)	53(88%)	7(12%)	
	2019. 10.	64(100%)	54(84%)	10(16%)	

10. 직원 징계 후 타 소속기관 인사발령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어플리케이션 현황과 일평균 접속자 수 (2016~2019년 현재)

□ 청와대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식당 현황 및 식당 내 사고 및 민원 사항(고객, 종사자 구분)(식중독, 화상, 미끄러짐, 사고 등)(2015~2019년 현재)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구내식당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시 설 명	위 치	운 영
여민관식당	여민관	직원 대상
춘추관식당	춘추관	출입기자 대상

- 식당 내 사고 및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13. 전기등록차량 대수 및 친환경 차량 대수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서 보유하는 전기차량은 총 12대*이며, 전체 친환경차량은 총 44대(승용차의 86%)입니다.

* 수소전기차 2대, 전기차 10대

14. 국민청원 20만 건 이상 의 청원수, 답변한 국민청원의 수, 답변하지 않은 청원의 수와 그 사유

□ 국민청원 시작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 23일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 수를 받은 청원은 모두 124건이며, 현재 답변된 청원은 모두 120건입니다. 4건은 청원답변 완료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건이며, 11월 22일까지 모두 답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답변되지 않은 청원의 수는 689,149건이며 청원답변요건(동의 수 20만 돌파)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목록을 유첨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120건의 답변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파일명: 국민청원.xlsx

15. 2019 국정 목표 및 달성 정도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국무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 희 위원

1. 기관 개요

-업무보고 및 예산 현황, 조직구성 현황(정원 및 현원 등)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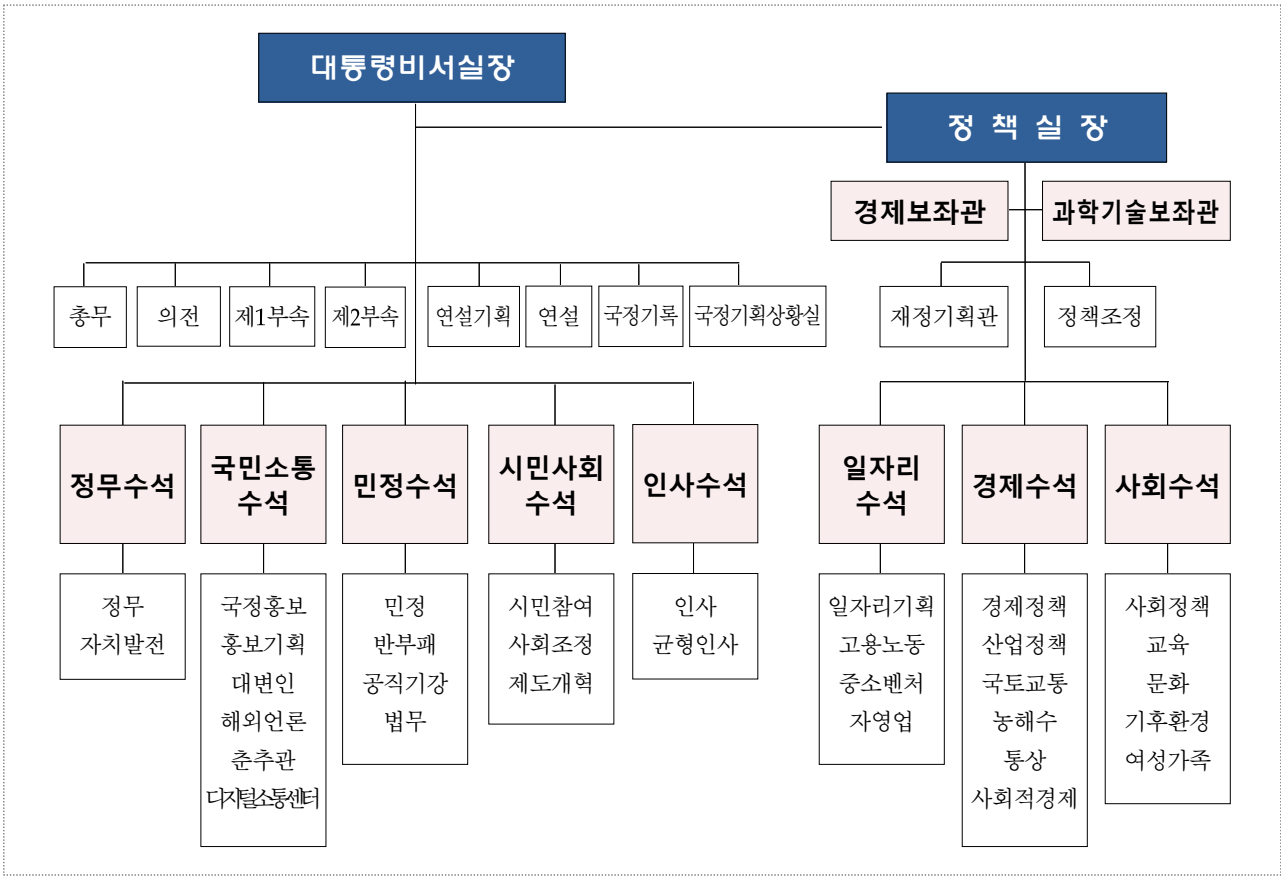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2.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09월까지) 공문수발신 내역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의 공문 수·발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3. 공직기강 등과 관련

1) 2017년~2019.09월까지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최종 처분 결과(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제출)

2) 2017년~2019.09월까지 징계현황

3) 2017년~2019.09월까지 법집행 현황

- 구속, 불구속 등 기소 내용을 구분하고 사유, 성명, 직급, 직위, 당시 해당업무를 기재

15.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인사검증시스템) 관련 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3-1), 3-3)번 관련, 현 정부 출범 이후 '19. 9월 현재 대통령비서실 직원 관련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 처분결과통보는 총 33건이 있었으며, 이 중 벌금형 2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공직선거법 등 위반 1건)이 있었습니다.

○ 15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 번 관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최근 3년간(2017년~2019.09월까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목록(담당과 기재)

□ 첨부 1의 보도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관 법령 위반 관련

1)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한 최근 3년간(2017년~2019.09월까지)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내역 및 미납현황(세부현황자료 제출)

3) 기타 1)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 세부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국정과제 및 대통령공약 사항 이행 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재)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국무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국정감사)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ㅇ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ㅇ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ㅇ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ㅇ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갔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 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감사원)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8.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발주 현황(진행중/완료 구분, 용역과제명, 담당부처, 담당자, 용역수행기관,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포함)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10. 2016～2018년 성과보고서 및 성과 미달성 과제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7 ~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며 성과 미달성 과제는 없습니다.

○ 다만, 이전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된 상태로 2016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제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① 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②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끝.

11. 최근 3년간 각 실의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위원명단, 회의개최 일시, 안건, 근거법령 등)

□ 요청하신 내용 중 국정과제위원회 관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위원회별 회의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실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 주요업무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 근거법령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9.

. 구성현황

- 위원장 :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위원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정과제위원회 위원 등 (10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일자리위원회

. 주요업무 :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

. 근거법령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5.16

. 구성현황

-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이목희 前국회의원
- 위원 :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등 15명
(위촉직) 14명(부위원장 포함)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주요업무 :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

. 근거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8.

. 구성현황

- 위원장 :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CSO
- 위원 : 4차혁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촉직), 과기부장관 등 당연직 6명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 국가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설립일 : '03.4.

. 구성현황

- 위원장 :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 위원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산업부 장관 등 당연직 (34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

□ **자치분권위원회**

. 주요업무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시행 등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설립일 : ‘13.9

. 구성현황

- 위원장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위원 :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3명)
(위촉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24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요업무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설립일 : ‘05.9

. 구성현황

-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공석

- 위원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당연직) 기재부·복지부장관 등 7명
(위촉직)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16명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주요업무 :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근거법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7.8.25)

. 설립일 : ‘17.8

. 구성현황

- 위원장 :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

- 위원 : (당연직) 기재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부장관, 경제보좌관
(위촉직) 총 24명(위원장 포함)

□ 국가교육회의

. 주요업무 : 교육, 학술, 인적자원 개발 정책관련 자문 및 정책 제안

. 근거법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9

. 구성현황

- 의장 : 김진경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 위원 : (당연직 9명) 교육부·기재부장관 등 9명
(위촉직, 의장 포함 12명)「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요업무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일 : '19.4.

. 구성현황

- 위원장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 위원 : (당연직) 기재부·농식품부 장관 등 5명
(위촉직) 농어업인 대표 10, 시민사회·소비자, 학계 등 전문가 대표 12 등 22명

별첨 : 위원회별 위원명단

1. 정책기획위원회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촉	정해구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성공회대 교수 ·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	〃	〃	강태영	▪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문임원	·연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연구교수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	〃	〃	고유환	▪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민주평통 기획조정위원장
〃	〃	〃	〃	곽병창	▪ 우석대학교 부교수	·전주시 전주정신위원회 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	〃	〃	〃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	〃	〃	〃	곽현근	▪ 대전대학교 교수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 ·한국공공행정학회장
〃	〃	〃	〃	권혜원	▪ 동덕여대 부교수	·서울시 다산콜재단 비상근이사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자문위원
〃	〃	〃	〃	김경미	▪ 성균관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재무위원장 ·대한암학회 재무이사
〃	〃	〃	〃	김경희	▪ 중앙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 차별조정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	〃	〃	김국진	▪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미디어리더스포럼 운영위원장
〃	〃	〃	〃	김남준	▪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민성장 검찰 개혁단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기대학교 시간강사 ·해군중령(전역)
〃	〃	〃	〃	김명환	▪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	〃	〃	〃	김성경	▪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싱가폴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	〃	〃	〃	김수연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 센터장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복지부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	〃	〃	〃	김수정	▪ 동아대학교 교수	·現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사 ·한국여성학회 이사
〃	〃	〃	〃	김용기	▪ 아주대학교 교수	·정책공간 국민성장 더좋은더많은 일자리추진단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	〃	〃	김용현	▪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	〃	〃	〃	김우철	▪ 서울시립대 부교수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문위원
〃	〃	〃	〃	김은경	▪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대 교수협의 회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	〃	〃	〃	김인숙	▪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균관대 하이브리드미래문화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폴리텍대학 비상임이사
〃	〃	〃	〃	김인회	▪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	〃	〃	〃	김재훈	▪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정책공간 대경시대' 대표
〃	〃	〃	〃	김정인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 기획위원회 위원장
〃	〃	〃	〃	김좌관	▪ 부산 카톨릭대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 ·국민성장 환경에너지 팀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김지미	▪ 김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	〃	〃	〃	김지윤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후 연구원, 몬트리올대
〃	〃	〃	〃	김창룡	▪ 인제대학교 교수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	〃	〃	〃	김태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포럼지식공감 공동대표 ·해수부 해양문화르네상스위원
〃	〃	〃	〃	김흥규	▪ 아주대학교 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	〃	〃	〃	남찬섭	▪ 동아대학교 교수	·요크대학교 방문교수 ·서울신학대 조교수
〃	〃	〃	〃	류건우	▪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
〃	〃	〃	〃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영국 맨체스터대 객원연구원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	〃	〃	문성종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인사위원
〃	〃	〃	〃	문장렬	▪ 국방대학교 교수	·NSC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담당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	〃	〃	〃	박경환	▪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 지리교육과 부교수 ·전남대 지리교육과 조교수
〃	〃	〃	〃	박복영	▪ 경희대학교 부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	〃	〃	박진희	▪ 동국대학교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학회장
〃	〃	〃	〃	박진희	▪ 우석대학교 부교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사 ·군산의료원 이사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박찬희	▪ 중앙대학교 교수	·MBC라디오 시사프로 진행 ·SKC&C 사외이사
〃	〃	〃	〃	배기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	〃	〃	〃	서복경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	〃	〃	서유경	▪ 경희사이버대 교수	·한국NGO학회 부회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정책위원장
〃	〃	〃	〃	서형원	▪ 청암대학교 총장	·주크로아티아 대사 ·주일본 공사
〃	〃	〃	〃	석재은	▪ 한림대학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	〃	〃	성정현	▪ 특허법인 충정 대표 변리사	·KAIST 지식대산대학원 겸직교수 ·동국대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겸임교수
〃	〃	〃	〃	소순창	▪ 건국대학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위원
〃	〃	〃	〃	소준노	▪ 우석대학교 교수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전북교수연합연구회 고문
〃	〃	〃	〃	손은일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경남 6차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지방분권 경남연대 상임공동대표
〃	〃	〃	〃	심미선	▪ 순천향대학교 교수	·광고자율심의위원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	〃	〃	〃	안종주	▪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대 초빙교수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
〃	〃	〃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	〃	〃	〃	어미정	▪ 경기도시공사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오유석	▪ 상지대학교 교수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비판사회학회 회장
〃	〃	〃	〃	오현석	▪ (주)지역아카데미 대표	·한국농어촌개발전문기관협회 회장 ·지역재단 이사
〃	〃	〃	〃	원희연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경성대학교 부교수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	〃	〃	〃	유남영	▪ 유남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	〃	윤동근	▪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토부 공공재난관리평가단 위원 ·울산과기원 재난관리공학트랙 부교수
〃	〃	〃	〃	윤순진	▪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	〃	〃	〃	이건범	▪ 한신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도서관장, 교무처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	〃	〃	이건세	▪ 건국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실장
〃	〃	〃	〃	이미경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기강 대책마련 TFT위원
〃	〃	〃	〃	이석범	▪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	〃	〃	이소영	▪ 대구대학교 교수	·연세대 BK21 사업단 연구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	〃	〃	이원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	〃	〃	〃	이윤석	▪ 계명대학교 조교수	·행자부 인구감소지역발전자문단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
〃	〃	〃	〃	이장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고려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이재원	▪ 부경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	〃	〃	〃	이진	▪ 건양대학교 교수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	〃	〃	〃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교수	·세종시복지재단 이사장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
〃	〃	〃	〃	임지봉	▪ 서강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	〃	〃	임채원	▪ 경희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	〃	〃	장영수	▪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수산경영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	〃	〃	〃	장준호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장 ·덴마크 코펜하겐 UCC대 교환교수
〃	〃	〃	〃	정대영	▪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우리술문화원 이사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금융팀장
〃	〃	〃	〃	정상호	▪ 서원대학교 부교수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한국NGO학회 이사
〃	〃	〃	〃	정승연	▪ 인하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가나자와대 경제학부 조교수
〃	〃	〃	〃	정태호	▪ 경희대학교 교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	〃	〃	〃	정희정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	〃	〃	조수진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	〃	〃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조원희	▪ 국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	〃	〃	〃	조의연	▪ 동국대학교 교수	·새로운 불교포럼 고문 ·동국대학교 경영관리실장
〃	〃	〃	〃	조재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민주당 정책비전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
〃	〃	〃	〃	조정아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	〃	〃	〃	진시원	▪ 부산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부교수
〃	〃	〃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	〃	〃	최성숙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시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	〃	〃	〃	최현선	▪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이사
〃	〃	〃	〃	한귀영	▪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경희대 미래시민리더십학과 겸임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	〃	〃	〃	허문경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종합연구소 연구교수	·국정과제평가지원단 위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
〃	〃	〃	〃	홍기원	▪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인사처 고위공무원임용승진 심사위원회 위원
〃	〃	〃	〃	홍선미	▪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 ·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총괄 위원회 평가위원

2. 일자리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050호)	당연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위촉 (부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제17·19대 국회의원
				당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당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당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당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당연	성윤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당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당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당연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당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연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	
				당연	황덕순	일자리 수석비서관	
				당연	최정표	한국개발연구 원장	
				당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 원장	
				당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	
				위촉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위촉	김명환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위촉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위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CJ그룹 회장
				위촉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위촉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
				위촉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사)여성벤처협회 이사
				위촉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상무
				위촉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크루셜텍(주), 삼우엠스(주) 대표
				위촉	김수영	양천구청장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3.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4차산업혁명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촉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본엔젤스벤처 파트너스 고문
〃	〃	〃	당연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	〃	당연	성윤모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	〃	〃	당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	〃	당연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	〃	〃	당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	〃	당연	이공주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보좌관	
〃	〃	〃	위촉	고진	한국모바일 산업연합회 회장	갤럭시아커뮤니케이 션즈(주)대표이사
〃	〃	〃	위촉	김흥수	현대차 선행상품 기획실장	Arthut D. Little(ADL) 컨설턴트
〃	〃	〃	위촉	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이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산부인과 조교수
〃	〃	〃	위촉	이나리	(주)플래너리 대표이사	제일기획 제일이노베이션 센터장
〃	〃	〃	위촉	표철민	㈜체인 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벤처기업 협회 이사
〃	〃	〃	위촉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위촉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	〃	〃	위촉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	위촉	문희리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現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	〃	〃	위촉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
〃	〃	〃	위촉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現 한국노인복지 학회 회장
〃	〃	〃	위촉	이경환	전남대 바이오시스템 공학과 교수	美 플로리다대학교 연구원
〃	〃	〃	위촉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사
〃	〃	〃	위촉	이예경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교육공학학회 부회장
〃	〃	〃	위촉	임춘성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美 Rutgers대 산업공학과 조교수
〃	〃	〃	위촉	장명희	한성대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	위촉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평가 전문위원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법 제23조	위촉직	–	–	–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화여대 초빙교수 (사)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시민복지 위원회 돌봄 분과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이원재	LAB2050 대표	(재)여시재 기획이사 희망제작소 소장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국여성학회 회장
				〃	제현주	㈜멜로우독 대표 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
				〃	조소담	미디어닷페이스 대표 (CEO)	온라인 미디어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르포 청춘의 집 프로젝트 총괄팀장
				〃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3선)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4선)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동 공공연맹 조직실장
				〃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에너지자원실장
				〃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 실장
				〃	유은혜	교육부 장관	19,20대 국회의원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17,18,19,20대 국회의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대학교 교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구 카톨릭대 교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7,19,20대 국회의원

5. 자치분권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치분권 위원회	자문	자치분권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위촉)	김순은	서울대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위원 (위촉)	강인호	조선대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원 (위촉)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원 (위촉)	김상미	지방의회발전 연구원 원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자문위원
				위원 (위촉)	김윤식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경기도 시흥시장
				위원 (위촉)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위원 (위촉)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한국사회서비스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장
				위원 (위촉)	신윤창	강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안성민	울산대 교수	울산대 연구부처장
				위원 (위촉)	안성호	충북대 명예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양선숙	경북대 교수	한국여성철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육동일	충남대 교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대표
				위원 (위촉)	윤순영	(사)여성과도시 이사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위원 (위촉)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위원 (위촉)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위원 (위촉)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위원 (위촉)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조승현	전북대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위원 (위촉)	최근열	경일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원 (위촉)	최상명	우석대 교수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 전략연구재단 정책위원장
				위원 (위촉)	최승범	한경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최윤재	고려대 명예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당연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원 (당연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위원 (당연직)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당연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조정실 실장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제19, 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
	〃	〃	〃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제18대~20대 국회의원
	〃	〃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	〃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 차관
	〃	〃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25대 특허청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책기획관
	〃	〃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	〃	〃	〃	조명래	환경부장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가능위원회 위원장
	〃	〃	〃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한국여성학회 이사 · 대구카톨릭대학 사회학과 교수
	〃	〃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세계해사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20대 국회의원
	〃	〃	〃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	·제18대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구시장(현)
〃	〃	〃	〃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경기도 수원시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	〃	〃	〃	위촉직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소장
〃	〃	〃	〃	위촉직 (위원)	강태호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경북정책연구원 원장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
〃	〃	〃	〃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	〃	〃	〃	〃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및 수석부회장
〃	〃	〃	〃	〃	김영화	대구 사회서비스원 원장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문 ·대구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
〃	〃	〃	〃	〃	김향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본부장	·경기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시 미래문화전략TF위원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	나종만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학장	·제19대 대선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국가정보원 원장 정책특별보좌관
〃	〃	〃	〃	〃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방송통신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	〃	〃	〃	〃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제19대 대선 사법개혁특보 ·인천발전연구원 이사
〃	〃	〃	〃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울도시공사 사장 ·(사)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	〃	〃	〃	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 평가단 단장	·한국지역정책학회 부회장 ·지방과학기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
〃	〃	〃	〃	〃	이기원	한림대 금융정보통계학과 교수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강원랜드 하이원희망재단 이사
〃	〃	〃	〃	〃	이병택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UC버클리대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	〃	〃	〃	이은정	나주골 참살이농장 대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여성국장 ·에코왕곡권역 농촌마을추진위원회 사무장
〃	〃	〃	〃	〃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	〃	〃	〃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한국보건복지개발원 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소 소장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	〃	〃	〃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	〃	〃	〃	〃	한승희	한경대 부교수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사장 · 주OECD 대표부 경제공사

7. 국가교육회의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위원장은 별도표시 바람)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경범	서울대 교수	서울대 입학본부 전형위원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대현	부산대 교수	부산대 교육대학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용준	정읍중 운영위원장	정읍시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류방란	한국교육개발 원선임연구위 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이사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박인현	대구교육대학 교수	대구 효목초, 계성초 교사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경기 보평초등학교 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손지희	증산중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 과 교수	특허청 창의적영재기업인육성 기획단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한승희	광주과학기술 원지구환경공 학부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부학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위원장은 별도표시 바람)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김헌영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회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이기우	전문대학교육 협의회 회장	

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촉 위원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IMF 모스크바사무소 부소장
				위촉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위촉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
				위촉	김태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위촉	성원용	인천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북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위촉	권순엽	법무법인광장	SK 주식회사 정보통신담당임원
				위촉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세계은행(World Bank)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위촉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임연구원
				위촉	조민행	법무법인민행	법무법인 민행 대표변호사
				위촉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장
				위촉	김민기	서울의료원	서울시립대 운영위원
				위촉	이건기	서울시립대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위촉	박종환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찰종합학교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위촉	김광길	법무법인(유) 지평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법무팀장
				위촉	김효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한국가스공사 경영 연구소 책임연구원
				위촉	이해정	현대경제 연구원	통일부 교류협력국 정책자문위원
				위촉	강윤희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
				위촉	권영경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교수
				위촉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위촉	박미옥	부경대학교	한국해양학회 부회장
				위촉	서정경		성균관대 성균중국 연구소 연구교수
				위촉	장병균	서울대학교	IMF 선임이코노미스트
				위촉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금융학회 회장
				위촉	류혜정	법무법인(유) 지평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위원
				당연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당연	강경화	외교부장관	
				당연	김연철	통일부장관	
				당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	주형철	경제보좌관	

9.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촉	박진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 지역재단 이사장 · 전 충남대학교 교수 · 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	〃	〃	김병원	▪ 농협중앙회장	· 현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 현 국제협동조합연맹 글로벌 이사 · 전 남평농협 조합장(13,14,15대)
〃	〃	〃	〃	임준택	▪ 수협중앙회장	· 현 대진수산, ㈜미광냉동 대표 · 현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 ·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	〃	〃	〃	이석형	▪ 산림조합중앙회장	· 전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전 제41~43대 전남 함평군 군수 · 전 KBS 한국방송공사 피디(PD)
〃	〃	〃	〃	김영재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전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
〃	〃	〃	〃	김홍길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현 전국한우협회장 · 전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 전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	〃	〃	〃	김동현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현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위원 · 전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 전 한국해조류 산업발전협회 이사
〃	〃	〃	〃	강선아	▪ 청년, 귀농인	· 현 청년농업인연합회 초대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주)우리원 대표 · 현 보성전농회 대표
〃	〃	〃	〃	김옥임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 전 상모리(이교동) 부녀회장 · 전 제주여성농민회연합회장 · 전 대정읍여성농민회 회장
〃	〃	〃	〃	곽금순	▪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 현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 · 전 한살림전국연합회 회장
〃	〃	〃	〃	강애심	▪ 제주해녀협회장	· 현 제주해녀문화보존·전승위원 · 전 제주 법환해녀학교 교장
〃	〃	〃	〃	오현석	▪ 지역아카데미 고문	· 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	〃	〃	〃	황수철	▪ 농정연구센터 소장	· 현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 · 현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사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이시재	▪ 가톨릭대 명예교수	· 현 두레 생협연합회 부회장 ·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전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	〃	〃	〃	정구용	▪ 상지대 명예교수	· 현 한국식품냉동기술협의회장 · 전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공인학회 회장
〃	〃	〃	〃	정은조	▪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 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 현 영농법인 윤제림 대표 · 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	〃	〃	〃	김윤식	▪ 경상대 교수	· 현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 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FTA 수입기여도 검증위원
〃	〃	〃	〃	양준일	▪ ㈜새한농 대표	· 전 팜한농 전략지원실장 · 전 팜한농 업무영업본부장
〃	〃	〃	〃	이춘우	▪ 부경대 교수	· 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 · 현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회장 · 전 한국수산정책 CEO포럼 이사
〃	〃	〃	〃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현 한국식생활교육학회 회장 · 현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집위원장 ·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	〃	강경심	▪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	· 전 충남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 · 전 어촌6차산업화시범사업 심의위원
〃	〃	〃	〃	김영란	▪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전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전 농경연 미래농정포럼 위원
〃	〃	〃	〃	오형은	▪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 현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위원 · 전 농어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	〃	당연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	〃	〃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	〃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	〃	〃	〃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12. 최근 3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3. 일본수출규제 대응성과

□ 수출규제 3개 품목은 **일본 外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능력 조기 확충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 유지 중

○ 정부는 **공장 신·증설 인허가 신속 진행, 특별근로시간 인정** 등을 통해 국내 생산확대 및 대체 수입품 테스트 등을 지원

* (인허가)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 단축(75일→30일) 등 화관법 고시 개정(9.2 시행)

* (특별근로시간)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9개 사업장, 600명)

□ 백색국가 제외 영향 품목은 日 **수출규제 전후 큰 변화없이 정상 수입 중**

○ **25개** 품목에 대해 **추경사업**(2,732억원*)으로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실증·양산 테스트** 등을 진행중

○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위해 1.9조원 규모의 **예타면제**(8.20)도 완료

*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 지원) 1,275억원, (운전자금·설비투자 지원) 500억원

□ 부품소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특별법 개정**도 추진중임

* 경쟁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9.17 시행),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10.11)

*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9.30)

14. ASF 원인규명 진행상황, 양돈농가 대책 등 진행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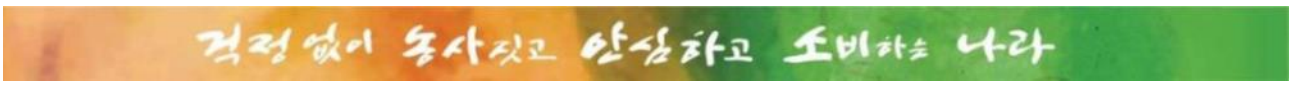
□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양돈 농가 대책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10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정책과 과장 김상경(044-201-2511), 서기관 정재환(2515), 사무관 박경일(2519)
구제역방역과 과장 김대균(044-201-2531), 서기관 이제용(2541)
축산정책과 과장 박정훈(044-201-2311), 서기관 박홍진(2318) / 제공일: 10월 15일(총 2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후 지원

②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③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 농가당 지원한도 :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 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양 수 위원

1. 기관 기본 현황 자료

□ 대통령비서실의 기본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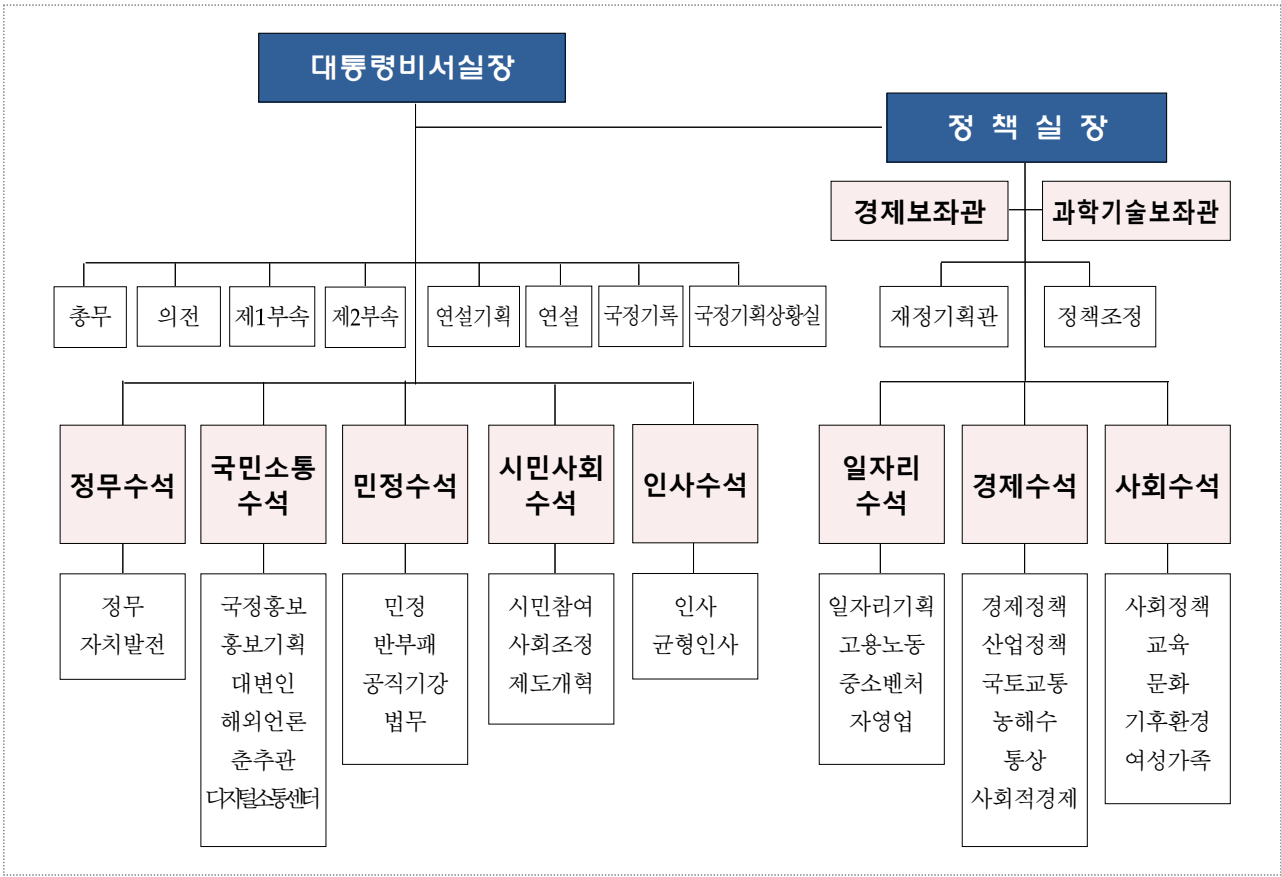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최근 3년간 예결산)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6회계연도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1) 2017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E=D/C)	불용액 (F=C-D)
계	88,063	-	88,063	75,126	85.3	12,937
인건비	34,691	-	34,691	33,376	96.2	1,315
기본경비	19,532	-	19,532	16,515	84.6	3,017
업무지원비	19,856	-	19,856	13,870	69.9	5,986
국정평가관리	3,868	-	3,868	2,346	60.7	1,522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	4,782	4,205	87.9	577
행정효율성 증진	256	-	256	245	95.7	11
정보화 추진	4,625	-	4,625	4,159	89.9	46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	453	410	90.5	43

(2) 2018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E=D/C)	불용액 (F=C-D)
계	89,868	-	89,868	86,201	95.9	3,667
인건비	37,606	-	37,606	36,848	98.0	758
기본경비	18,518	-	18,518	17,256	93.2	1,262
업무지원비	16,392	-	16,392	16,252	99.1	140
국정평가관리	6,158	-	6,158	5,417	88.0	741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	4,782	4,510	94.3	272
행정효율성 증진	256	-	256	169	65.8	87
정보화 추진	5,680	-	5,680	5,298	93.3	382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	476	453	95.1	23

2. 대통령비서실 각 수석급 이상, 국가안보실 차장급 이상, 대통령 경호처 각 실장급이상 명단 및 학력, 주요 경력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경호처 실장급 이상 명단은 경호처 소관입니다.

붙임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駐중국대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 제17,18,19대 국회의원	
김상조	정책실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강기정	정무수석	•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제17,18,19대 국회의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 MBC 논설위원 • 문화방송 LA특파원 • 보도국 문화과학부장 • 보도국 법조팀장	
김조원	민정수석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감사원 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사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김외숙	인사수석	• 법제처장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황덕순	일자리수석	•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 고용노동연구원 고용보험평가센터 소장 • 빈부격차및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 고용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실 연구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IMF(국제통화기금) 선임자문관	
김연명	사회수석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NHN NEXT 교수 • (주)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제17대 국회의원 • 駐제네바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駐이스라엘대사	
김유근	제1차장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합동참모본부 차장 • 육군 참모차장 • 육군 제8군단 군단장	
김현종	제2차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외교통상부 駐유엔대표부 대사	

3.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국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국회)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갔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 (’ 17.7.19, ’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별첨 1]
(2)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아래 표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3. 자체감사결과

(자체감사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3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4.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계약현황

(날짜, 계약내용,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유형, 담당부서, 수의계약의 경우 근거)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19. 7월말까지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도별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계약 현황 >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5월 이후)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71건	9,685
2018년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114건	11,835
2019년(9월말)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105건	11,866

* 계약서 기준

5.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고위직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목적, 국가, 인원, 비용, 일정 등) 및 출장 후 결과보고서 일체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국외출장 관련 사항은 국가안보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용역업체, 비정규직 현황자료 일체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공문 수발신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8.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 집행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2017년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 및 처리현황 목록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0. 현재(2019년 10월)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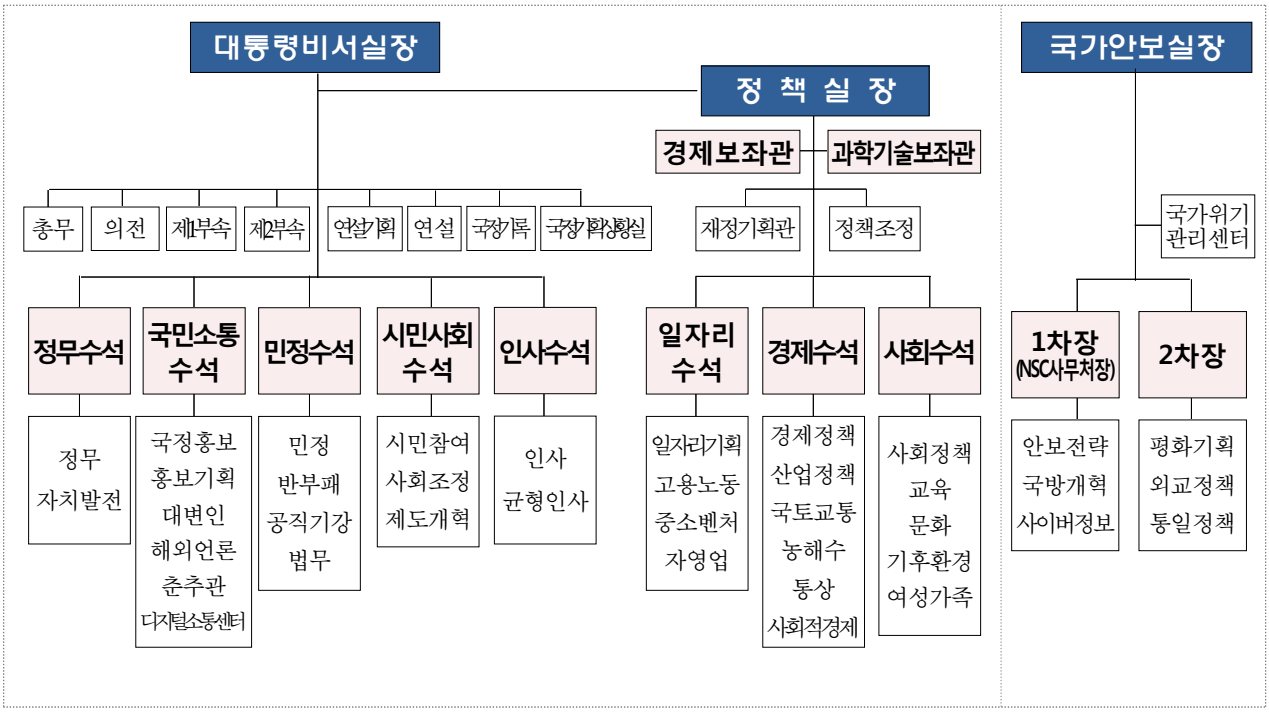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 및 인원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NSC 포함)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장(장), 정책실장(장), 8수석·2보좌관(차), 42비서관,
-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장), 2차장(차), 7비서관으로 구성



□ 인원 현황

○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5명을 포함하여 **총 490명**이며, **현원**은 **462명**임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2	15	49	242	156
결 원	△28	-		△22	△6

* 근로자 고용현황 :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5명 고용

11.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직원 징계 및 경찰·검찰 수사 현황

□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이며, 이중 자체 징계는 직권면직 1건입니다.

이 인 영 위원

1. 부처 업무보고서 및 예산 현황 자료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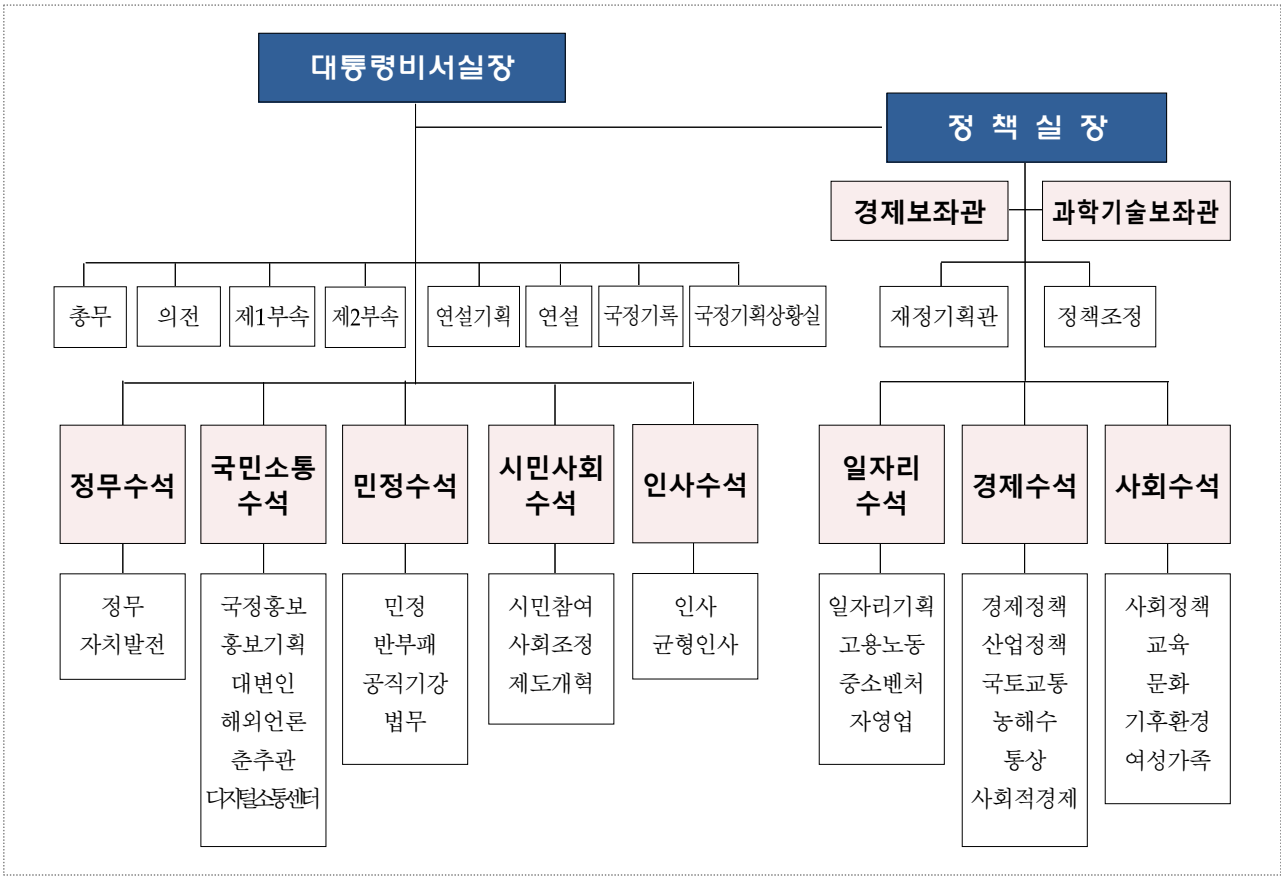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2. 대통령비서실 직제(조직도) 및 인원 현황

- 주요 간부현황 및 상세 프로필(청와대 직책별 담당현황)
- 직급별 여성 공무원 현황

□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원 현황 및 수석급 이상 직위자 주요 약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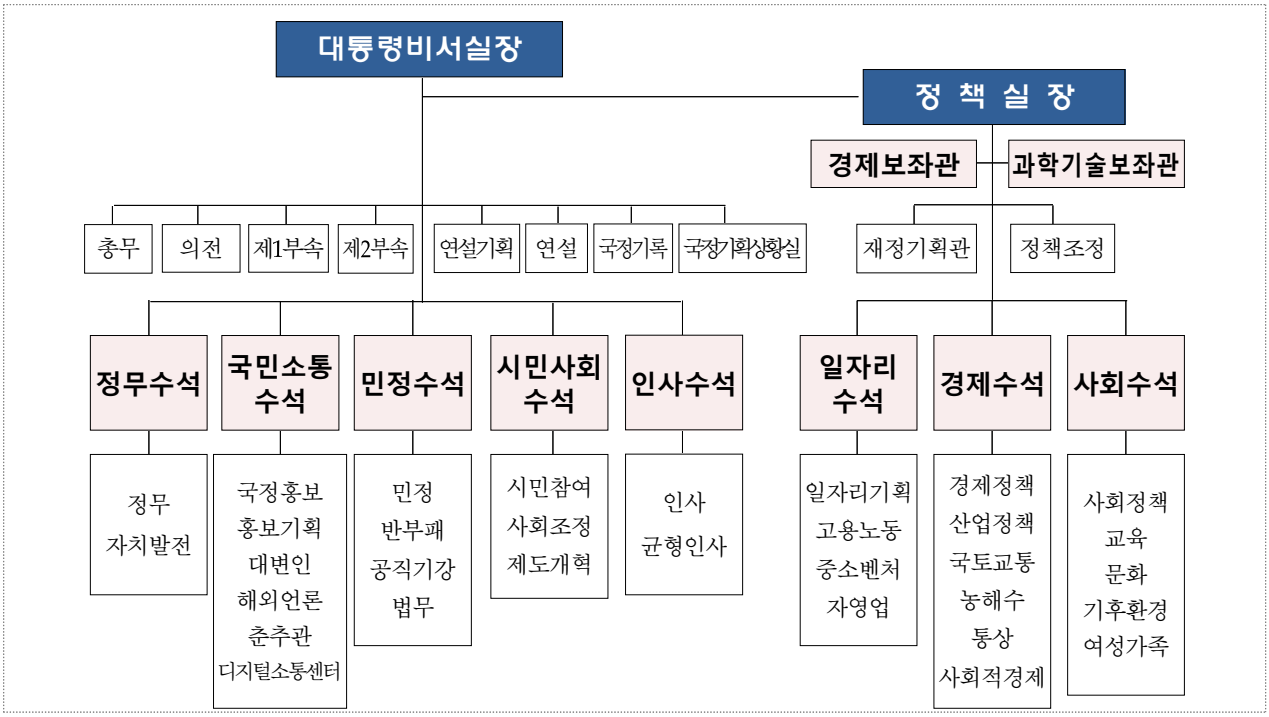
구분	기준	계(현원)	남	여	비고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	2017. 12.	50(100%)	41(82%)	9(18%)	
	2018. 12.	50(100%)	43(86%)	7(14%)	
	2019. 10.	54(100%)	44(81%)	10(19%)	

붙임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장(장), 정책실장(장), 8수석·2보좌관(차), 42비서관으로 구성



□ 인원 현황

○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4명**임

(2019. 10월 현재)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4	12	42	219	151
결 원	△19	-	-	△15	△4

붙임2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약력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駐중국대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 제17,18,19대 국회의원	
김상조	정책실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강기정	정무수석	•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제17,18,19대 국회의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 MBC 논설위원 • 문화방송 LA특파원 • 보도국 문화과학부장 • 보도국 법조팀장	
김조원	민정수석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감사원 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사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김외숙	인사수석	• 법제처장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황덕순	일자리수석	•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 고용노동연구원 고용보험평가센터 소장 • 빈부격차및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 고용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실 연구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IMF(국제통화기금) 선임자문관	
김연명	사회수석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NHN NEXT 교수 • (주)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3. 최근 3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9.10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임용·운용 중입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19년 현재)

- 의무고용인원 : 17명 / 장애인공무원 : 18명 * 중증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고용현황('19년 현재)

- 의무고용인원 : 7명 / 취업지원대상자 등 채용 공무원 : 7명

4.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19년 10월 현재)

o 비 서 실 장	노영민	o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o 정 책 실 장	김상조	o 민정비서관	이광철
o 정 무 수 석	강기정	o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o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o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o 민 정 수 석	김조원	o 법무비서관	김영식
o 시민사회수석	김거성	o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o 인 사 수 석	김외숙	o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o 일자리수석	황덕순	o 제도개혁비서관	신상엽
o 경 제 수 석	이호승	o 인사비서관	권용일
o 사 회 수 석	김연명	o 균형인사비서관	권향엽
o 경제보좌관	주형철	o 재정기획관	박종규
o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o 정책조정비서관	이진석
o 총무비서관	이정도	o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
o 의전비서관	박상훈	o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o 제1부속비서관	신지연	o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o 제2부속비서관	최상영	o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o 연설기획비서관	오종식	o 경제정책비서관	도규상
o 연설비서관	신동호	o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o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o 국토교통비서관	윤성원
o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o 농해수비서관	박영범
o 정무비서관	김광진	o 통상비서관	박진규
o 자치발전비서관	유대영	o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o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	o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
o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o 교육비서관	이광호
o 대 변 인	고민정	o 문화비서관	양현미
o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	o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o 춘 추 관 장	유송화	o 여성가족비서관	홍승아

5. 최근 3년간 청와대 직원 훈장, 포상, 표창 내역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포상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국정감사)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17.5.10.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ㅇ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ㅇ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ㅇ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ㅇ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ㅇ'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 (’ 17.7.19, ’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대통령비서실> 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가안보실> 5.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7.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발주현황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9.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유형, 징계사유, 징계처분 일시 포함)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9번 중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관련, 현 정부출범 이후 '19. 9월말 현재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 처분결과통보는 33건이 있었습니다.

○ 자료요구 14번 관련,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
헌법소송	5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처분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최근 3년간 각 실의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위원명단, 회의개최 일시, 안건, 근거법령 등)

□ 요청하신 내용 중 국정과제위원회 관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위원회별 회의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실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 주요업무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 근거법령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9.

. 구성현황

- 위원장 :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위원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정과제위원회 위원 등 (10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일자리위원회

. 주요업무 :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

. 근거법령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5.16

. 구성현황

-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이목희 前국회의원
- 위원 :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등 15명
(위촉직) 14명(부위원장 포함)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주요업무 :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

. 근거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8.

. 구성현황

- 위원장 :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CSO
- 위원 : 4차혁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촉직), 과기부장관 등 당연직 6명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 국가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설립일 : '03.4.

. 구성현황

- 위원장 :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 위원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산업부 장관 등 당연직 (34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

□ **자치분권위원회**

. 주요업무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시행 등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설립일 : ‘13.9

. 구성현황

- 위원장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위원 :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3명)
(위촉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24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요업무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설립일 : ‘05.9

. 구성현황

-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공석

- 위원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당연직) 기재부·복지부장관 등 7명
(위촉직)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16명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주요업무 :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근거법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7.8.25)

. 설립일 : ‘17.8

. 구성현황

- 위원장 :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

- 위원 : (당연직) 기재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부장관, 경제보좌관
(위촉직) 총 24명(위원장 포함)

□ 국가교육회의

. 주요업무 : 교육, 학술, 인적자원 개발 정책관련 자문 및 정책 제안

. 근거법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일 : '17.9

. 구성현황

- 의장 : 김진경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 위원 : (당연직 9명) 교육부·기재부장관 등 9명
(위촉직, 의장 포함 12명)「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요업무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일 : '19.4.

. 구성현황

- 위원장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 위원 : (당연직) 기재부·농식품부 장관 등 5명
(위촉직) 농어업인 대표 10, 시민사회·소비자, 학계 등 전문가 대표 12 등 22명

별첨 : 위원회별 위원명단

1. 정책기획위원회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촉	정해구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성공회대 교수 ·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	〃	〃	강태영	▪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문임원	·연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연구교수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	〃	〃	고유환	▪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민주평통 기획조정위원장
〃	〃	〃	〃	곽병창	▪ 우석대학교 부교수	·전주시 전주정신위원회 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	〃	〃	〃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	〃	〃	〃	곽현근	▪ 대전대학교 교수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 ·한국공공행정학회장
〃	〃	〃	〃	권혜원	▪ 동덕여대 부교수	·서울시 다산콜재단 비상근이사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자문위원
〃	〃	〃	〃	김경미	▪ 성균관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재무위원장 ·대한암학회 재무이사
〃	〃	〃	〃	김경희	▪ 중앙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 차별조정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	〃	〃	김국진	▪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미디어리더스포럼 운영위원장
〃	〃	〃	〃	김남준	▪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민성장 검찰 개혁단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	·경기대학교 시간강사 ·해군중령(전역)
〃	〃	〃	〃	김명환	▪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	〃	〃	〃	김성경	▪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싱가폴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	〃	〃	〃	김수연	▪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 센터장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복지부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	〃	〃	〃	김수정	▪ 동아대학교 교수	·現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사 ·한국여성학회 이사
〃	〃	〃	〃	김용기	▪ 아주대학교 교수	·정책공간 국민성장 더좋은더많은 일자리추진단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	〃	〃	김용현	▪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	〃	〃	〃	김우철	▪ 서울시립대 부교수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문위원
〃	〃	〃	〃	김은경	▪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대 교수협의 회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	〃	〃	〃	김인숙	▪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균관대 하이브리드미래문화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폴리텍대학 비상임이사
〃	〃	〃	〃	김인회	▪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	〃	〃	〃	김재훈	▪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정책공간 대경시대' 대표
〃	〃	〃	〃	김정인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 기획위원회 위원장
〃	〃	〃	〃	김좌관	▪ 부산 카톨릭대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 ·국민성장 환경에너지 팀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김지미	▪ 김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	〃	〃	〃	김지윤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후 연구원, 몬트리올대
〃	〃	〃	〃	김창룡	▪ 인제대학교 교수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	〃	〃	〃	김태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포럼지식공감 공동대표 ·해수부 해양문화르네상스위원
〃	〃	〃	〃	김흥규	▪ 아주대학교 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	〃	〃	〃	남찬섭	▪ 동아대학교 교수	·요크대학교 방문교수 ·서울신학대 조교수
〃	〃	〃	〃	류건우	▪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
〃	〃	〃	〃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영국 맨체스터대 객원연구원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	〃	〃	문성종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인사위원
〃	〃	〃	〃	문장렬	▪ 국방대학교 교수	·NSC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담당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	〃	〃	〃	박경환	▪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 지리교육과 부교수 ·전남대 지리교육과 조교수
〃	〃	〃	〃	박복영	▪ 경희대학교 부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	〃	〃	박진희	▪ 동국대학교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학회장
〃	〃	〃	〃	박진희	▪ 우석대학교 부교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사 ·군산의료원 이사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박찬희	▪ 중앙대학교 교수	·MBC라디오 시사프로 진행 ·SKC&C 사외이사
〃	〃	〃	〃	배기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	〃	〃	〃	서복경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	〃	〃	서유경	▪ 경희사이버대 교수	·한국NGO학회 부회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정책위원장
〃	〃	〃	〃	서형원	▪ 청암대학교 총장	·주크로아티아 대사 ·주일본 공사
〃	〃	〃	〃	석재은	▪ 한림대학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	〃	〃	성정현	▪ 특허법인 충정 대표변리사	·KAIST 지식대산대학원 겸직교수 ·동국대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겸임교수
〃	〃	〃	〃	소순창	▪ 건국대학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위원
〃	〃	〃	〃	소준노	▪ 우석대학교 교수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전북교수연합연구회 고문
〃	〃	〃	〃	손은일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경남 6차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지방분권 경남연대 상임공동대표
〃	〃	〃	〃	심미선	▪ 순천향대학교 교수	·광고자율심의위원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	〃	〃	〃	안종주	▪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대 초빙교수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
〃	〃	〃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	〃	〃	〃	어미정	▪ 경기도시공사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오유석	▪ 상지대학교 교수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비판사회학회 회장
〃	〃	〃	〃	오현석	▪ (주)지역아카데미 대표	·한국농어촌개발전문기관협회 회장 ·지역재단 이사
〃	〃	〃	〃	원희연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경성대학교 부교수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	〃	〃	〃	유남영	▪ 유남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	〃	윤동근	▪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토부 공공재난관리평가단 위원 ·울산과기원 재난관리공학트랙 부교수
〃	〃	〃	〃	윤순진	▪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	〃	〃	〃	이건범	▪ 한신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도서관장, 교무처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	〃	〃	이건세	▪ 건국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실장
〃	〃	〃	〃	이미경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기강 대책마련 TFT위원
〃	〃	〃	〃	이석범	▪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	〃	〃	이소영	▪ 대구대학교 교수	·연세대 BK21 사업단 연구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	〃	〃	이원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	〃	〃	〃	이윤석	▪ 계명대학교 조교수	·행자부 인구감소지역발전자문단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
〃	〃	〃	〃	이장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고려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이재원	▪ 부경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	〃	〃	〃	이진	▪ 건양대학교 교수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	〃	〃	〃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교수	·세종시복지재단 이사장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
〃	〃	〃	〃	임지봉	▪ 서강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	〃	〃	임채원	▪ 경희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	〃	〃	장영수	▪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수산경영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	〃	〃	〃	장준호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장 ·덴마크 코펜하겐 UCC대 교환교수
〃	〃	〃	〃	정대영	▪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우리술문화원 이사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금융팀장
〃	〃	〃	〃	정상호	▪ 서원대학교 부교수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한국NGO학회 이사
〃	〃	〃	〃	정승연	▪ 인하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가나자와대 경제학부 조교수
〃	〃	〃	〃	정태호	▪ 경희대학교 교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	〃	〃	〃	정희정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	〃	〃	조수진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	〃	〃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조원희	▪ 국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	〃	〃	〃	조의연	▪ 동국대학교 교수	·새로운 불교포럼 고문 ·동국대학교 경영관리실장
〃	〃	〃	〃	조재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민주당 정책비전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
〃	〃	〃	〃	조정아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	〃	〃	〃	진시원	▪ 부산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부교수
〃	〃	〃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	〃	〃	최성숙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시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	〃	〃	〃	최현선	▪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이사
〃	〃	〃	〃	한귀영	▪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 센터장	·경희대 미래시민리더십학과 겸임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	〃	〃	〃	허문경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종합연구소 연구교수	·국정과제평가지원단 위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
〃	〃	〃	〃	홍기원	▪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인사처 고위공무원임용승진 심사위원회 위원
〃	〃	〃	〃	홍선미	▪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 ·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총괄 위원회 평가위원

2. 일자리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050호)	당연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위촉 (부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제17·19대 국회의원
				당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당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당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당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당연	성윤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당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당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당연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당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연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	
				당연	황덕순	일자리 수석비서관	
				당연	최정표	한국개발연구 원장	
				당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 원장	
				당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	
				위촉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위촉	김명환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위원장	
				위촉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위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CJ그룹 회장
				위촉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위촉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
				위촉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사)여성벤처협회 이사
				위촉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상무
				위촉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크루셜텍(주), 삼우엠스(주) 대표
				위촉	김수영	양천구청장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3.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4차산업혁명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촉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본엔젤스벤처 파트너스 고문
〃	〃	〃	당연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	〃	당연	성윤모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	〃	〃	당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	〃	당연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	〃	〃	당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	〃	당연	이공주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보좌관	
〃	〃	〃	위촉	고진	한국모바일 산업연합회 회장	갤럭시아커뮤니케이 션즈(주)대표이사
〃	〃	〃	위촉	김흥수	현대차 선행상품 기획실장	Arthut D. Little(ADL) 컨설턴트
〃	〃	〃	위촉	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이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산부인과 조교수
〃	〃	〃	위촉	이나리	(주)플래너리 대표이사	제일기획 제일이노베이션 센터장
〃	〃	〃	위촉	표철민	㈜체인 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벤처기업 협회 이사
〃	〃	〃	위촉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위촉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	〃	〃	위촉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	위촉	문희리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現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	〃	〃	위촉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
〃	〃	〃	위촉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現 한국노인복지 학회 회장
〃	〃	〃	위촉	이경환	전남대 바이오시스템 공학과 교수	美 플로리다대학교 연구원
〃	〃	〃	위촉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사
〃	〃	〃	위촉	이예경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교육공학학회 부회장
〃	〃	〃	위촉	임춘성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美 Rutgers대 산업공학과 조교수
〃	〃	〃	위촉	장명희	한성대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	위촉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평가 전문위원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 제23조	위촉직	–	–	–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장	이화여대 초빙교수 (사)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 정책연구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위원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서울시 시민복지 위원회 돌봄 분과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이원재	LAB2050 대표	(재)여시재 기획이사 희망제작소 소장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국여성학회 회장
				〃	제현주	㈜멜로우독 대표 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조소담	미디어닷페이스 대표 (CEO)	온라인 미디어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르포 청춘의 집 프로젝트 총괄팀장
				〃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3선)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4선)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동·공공연맹 조직실장
				〃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에너지자원실장
				〃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서울시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 실장
				〃	유은혜	교육부 장관	19,20대 국회의원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17,18,19,20대 국회의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대학교 교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구 카톨릭대 교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7,19,20대 국회의원

5. 자치분권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치분권 위원회	자문	자치분권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위촉)	김순은	서울대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위원 (위촉)	강인호	조선대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원 (위촉)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원 (위촉)	김상미	지방의회발전 연구원 원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자문위원
				위원 (위촉)	김윤식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경기도 시흥시장
				위원 (위촉)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위원 (위촉)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한국사회서비스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장
				위원 (위촉)	신윤창	강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안성민	울산대 교수	울산대 연구부처장
				위원 (위촉)	안성호	충북대 명예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양선숙	경북대 교수	한국여성철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육동일	충남대 교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대표
				위원 (위촉)	윤순영	(사)여성과도시 이사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위원 (위촉)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위원 (위촉)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위원 (위촉)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위원 (위촉)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조승현	전북대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위원 (위촉)	최근열	경일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원 (위촉)	최상명	우석대 교수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 전략연구재단 정책위원장
				위원 (위촉)	최승범	한경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원 (위촉)	최윤재	고려대 명예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당연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원 (당연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위원 (당연직)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당연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조정실 실장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제19, 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
	〃	〃	〃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제18대~20대 국회의원
	〃	〃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	〃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 차관
	〃	〃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25대 특허청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책기획관
	〃	〃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	〃	〃	〃	조명래	환경부장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가능위원회 위원장
	〃	〃	〃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한국여성학회 이사 · 대구카톨릭대학 사회학과 교수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세계해사대 교수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7~20대 국회의원
	〃	〃	〃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제18대국회의원 · 서울시 정무부시장 · 대구시장(현)
〃	〃	〃	〃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경기도 수원시장 ·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	〃	〃	〃	위촉직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소장
〃	〃	〃	〃	위촉직 (위원)	강태호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 (사)경북정책연구원 원장 ·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
〃	〃	〃	〃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 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	〃	〃	〃	〃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및 수석부회장
〃	〃	〃	〃	〃	김영화	대구 사회서비스원 원장	·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문 · 대구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 경기관광공사 비상임이사 · 서울시 미래문화전략TF위원
〃	〃	〃	〃	〃	나종만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학장	· 제19대 대선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 국가정보원 원장 정책특별보좌관
〃	〃	〃	〃	〃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 방송통신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	〃	〃	〃	〃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19대 대선 사법개혁특보 · 인천발전연구원 이사
〃	〃	〃	〃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서울도시공사 사장 · (사)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	〃	〃	〃	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 평가단 단장	· 한국지역정책학회 부회장 · 지방과학기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
〃	〃	〃	〃	〃	이기원	한림대 금융정보통계학과 교수	·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이사장 · 강원랜드 하이원 희망재단 이사
〃	〃	〃	〃	〃	이병택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UC버클리대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	〃	〃	〃	이은정	나주골 참살이농장 대표	·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여성국장 · 에코왕곡권역 농촌마을추진위원회 사무장
〃	〃	〃	〃	〃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 한국사회학회 회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한국보건복지개발원 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	〃	〃	〃	〃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소 소장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	〃	〃	〃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	〃	〃	〃	〃	한승희	한경대 부교수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사장 ·주OECD 대표부 경제공사

7. 국가교육회의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위원장은 별도표시 바람)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경범	서울대 교수	서울대 입학본부 전형위원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대현	부산대 교수	부산대 교육대학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김용준	정읍중 운영위원장	정읍시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류방란	한국교육개발 원선임연구위 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이사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박인현	대구교육대학 교수	대구 효목초, 계성초 교사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경기 보평초등학교 교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손지희	증산중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 과 교수	특허청 창의적영재기업인육성 기획단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위촉	한승희	광주과학기술 원지구환경공 학부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부학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위원장은 별도표시 바람)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김헌영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회장	
	자문	국가교육회의	대통령령	당연	이기우	전문대학교육 협의회 회장	

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촉 위원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IMF 모스크바사무소 부소장
				위촉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위촉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
				위촉	김태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위촉	성원용	인천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북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위촉	권순엽	법무법인광장	SK 주식회사 정보통신담당임원
				위촉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세계은행(World Bank)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위촉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임연구원
				위촉	조민행	법무법인민행	법무법인 민행 대표변호사
				위촉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장
				위촉	김민기	서울의료원	서울시립대 운영위원
				위촉	이건기	서울시립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기관 명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위촉	박종환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찰종합학교장
				위촉	김광길	법무법인(유)지평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법무팀장
				위촉	김효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위촉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부 교류협력국 정책자문위원
				위촉	강윤희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위촉	권영경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교수
				위촉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위촉	박미옥	부경대학교	한국해양학회 부회장
				위촉	서정경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위촉	장병균	서울대학교	IMF 선임이코노미스트
				위촉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금융학회 회장
				위촉	류혜정	법무법인(유)지평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위원
				당연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당연	강경화	외교부장관	
				당연	김연철	통일부장관	
				당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	주형철	경제보좌관	

9.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촉	박진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 지역재단 이사장 · 전 충남대학교 교수 · 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	〃	〃	김병원	▪ 농협중앙회장	· 현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 현 국제협동조합연맹 글로벌 이사 · 전 남평농협 조합장(13,14,15대)
〃	〃	〃	〃	임준택	▪ 수협중앙회장	· 현 대진수산, ㈜미광냉동 대표 · 현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 ·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	〃	〃	〃	이석형	▪ 산림조합중앙회장	· 전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전 제41~43대 전남 함평군 군수 · 전 KBS 한국방송공사 피디(PD)
〃	〃	〃	〃	김영재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전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
〃	〃	〃	〃	김홍길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현 전국한우협회장 · 전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 전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	〃	〃	〃	김동현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현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위원 · 전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 전 한국해조류 산업발전협회 이사
〃	〃	〃	〃	강선아	▪ 청년, 귀농인	· 현 청년농업인연합회 초대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주)우리원 대표 · 현 보성전농회 대표
〃	〃	〃	〃	김옥임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 전 상모리(이교동) 부녀회장 · 전 제주여성농민회연합회장 · 전 대정읍여성농민회 회장
〃	〃	〃	〃	곽금순	▪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 현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 · 전 한살림전국연합회 회장
〃	〃	〃	〃	강애심	▪ 제주해녀협회장	· 현 제주해녀문화보존·전승위원 · 전 제주 법환해녀학교 교장
〃	〃	〃	〃	오현석	▪ 지역아카데미 고문	· 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	〃	〃	〃	황수철	▪ 농정연구센터 소장	· 현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 · 현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사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	〃	〃	이시재	▪ 가톨릭대 명예교수	· 현 두레 생협연합회 부회장 ·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전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구분 (행정, 자문)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현황			
			구분 (당연, 위촉)	이름	現 소속	주요경력
〃	〃	〃	〃	정구용	▪ 상지대 명예교수	· 현 한국식품냉동기술협의회장 · 전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공인학회 회장
〃	〃	〃	〃	정은조	▪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 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 현 영농법인 윤제림 대표 · 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	〃	〃	〃	김윤식	▪ 경상대 교수	· 현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 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FTA 수입기여도 검증위원
〃	〃	〃	〃	양준일	▪ ㈜새한농 대표	· 전 팜한농 전략지원실장 · 전 팜한농 업무영업본부장
〃	〃	〃	〃	이춘우	▪ 부경대 교수	· 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 · 현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회장 · 전 한국수산정책 CEO포럼 이사
〃	〃	〃	〃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현 한국식생활교육학회 회장 · 현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집위원장 ·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	〃	강경심	▪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	· 전 충남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 · 전 어촌6차산업화시범사업 심의위원
〃	〃	〃	〃	김영란	▪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전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전 농경연 미래농정포럼 위원
〃	〃	〃	〃	오형은	▪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 현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위원 · 전 농어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	〃	당연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	〃	〃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	〃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	〃	〃	〃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및 발간한 연구보고서 일체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12. 최근 3년간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 내용 및 소관부처별 이관후 조치 결과

□ 국민청원 시작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 18일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 수를 받은 청원은 모두 124건이며, 현재 답변된 청원은 모두 120건입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자료를 엑셀 파일로 유첨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120건의 답변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붙임 국민청원. 끝.

13. 최근 3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5. 최근 3년간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문서 수발신 목록 일체. 끝.

16. 일본수출규제 대응성과

□ 수출규제 3개 품목은 **일본 外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능력 조기 확충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 유지 중

○ 정부는 **공장 신·증설 인허가 신속 진행, 특별근로시간 인정** 등을 통해 국내 생산확대 및 대체 수입품 테스트 등을 지원

* (인허가)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 단축(75일→30일) 등 화관법 고시 개정(9.2 시행)

* (특별근로시간)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9개 사업장, 600명)

□ 백색국가 제외 영향 품목은 日 **수출규제 전후 큰 변화없이 정상 수입 중**

○ **25개** 품목에 대해 **추경사업**(2,732억원*)으로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실증·양산 테스트** 등을 진행중

○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위해 1.9조원 규모의 **예타면제**(8.20)도 완료

*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 지원) 1,275억원, (운전자금·설비투자 지원) 500억원

□ 부품소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특별법 개정**도 추진중임

* 경쟁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9.17 시행),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10.11)

*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9.30)

17. ASF 원인규명 진행상황, 양돈농가 대책 등 진행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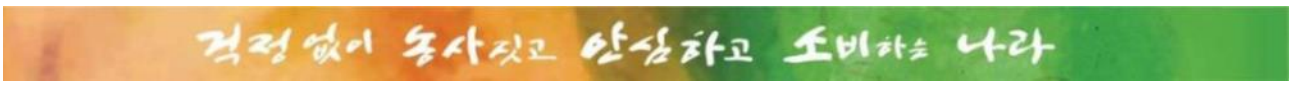
□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양돈 농가 대책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10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정책과 과장 김상경(044-201-2511), 서기관 정재환(2515), 사무관 박경일(2519)
구제역방역과 과장 김대균(044-201-2531), 서기관 이제용(2541)
축산정책과 과장 박정훈(044-201-2311), 서기관 박홍진(2318) / 제공일: 10월 15일(총 2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후 지원

②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③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 농가당 지원한도 :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 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하 대통령경호처 (1~15) 와 국가안보실(1~16)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각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안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안보실에서 답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 종 성 위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017년~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임>

□ **'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ㅇ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ㅇ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全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ㅇ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북한 및 주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을 공식 문서로 회람을 기 추진. - 주유엔 남북대사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회람 요청(9.6) - 유엔 사무국은 9.10자로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A/72/109) 및 안보리(S/2018/820) 문서로 회람 * 단, 당시 평양정상회담, 북미 고위급대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결의 문안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식문서 회람으로 갈음하였음.
2.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가안보실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 - ’18.11.5.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합의문 제8항) 합의. - ’19.1.15. 국가안보실장,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통해 협상 진행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 o 향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화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원 감사)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자체 감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3. 퇴직 임직원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부처 재취업 현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 연도별)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 연도별)

□ 현 정부출범 이후 '19. 9월말 현재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 처분결과 통보는 33건이 있었습니다.

5. 2015~2019.9 연도별 보직자 징계 현황 (징계사유 명시, 처분결과)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 처분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최근 3년 간 체결된 수의계약 세부현황 (계약명, 수의계약사유 등 명시)?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용역 수행, 물품납품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 목록과 수행기관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약 내역	계약 금액	수의계약 사유
2017년(5월이후) ~2019년(9월말)	시설물공사, 노후장비 교체, 정보화사업 등 139건	11,072	보안, 소액 등

* 계약서 기준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목록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8. 현재기준 직원의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소속직원의 전과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9. 최근 3년 간 여성, 장애인 등 고용 현황 (전체 정원 대비 현원, 법정기준 준수 여부 명시)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 여성현황

구분	기준	계(현원)	남	여	비고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	2017. 12.	61(100%)	52(85%)	9(15%)	
	2018. 12.	60(100%)	53(88%)	7(12%)	
	2019. 10.	64(100%)	54(84%)	10(16%)	

○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를 제외한 세부적인 인사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고용현황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9.10월 현재 의무고용인원이상을 임용·운용 중입니다.

※ 의무고용인원 : 17명(정원 490명의 3.4%) / 장애인공무원 : 18명(3.6%)

10. 청와대 등 대통령 업무시설 EMP, 드론 방호대책 구축 현황 관련 설명자료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입니다.

11. 각 기관 별 최근 5년 간 연도별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7월 5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모든 인원(3명)에게 휴직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관리하지 않아, 총원 표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각 기관 별 최근 5년 간 연도별 주당 평균 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성희롱, 성평등 교육 개최 현황 및 수료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7년 5월 이후 총 13회 교육 실시

14. 최근 3년간('19년 9월말까지) 연도별 직급별 연차 사용률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은 '18년은 법정연가일수 20일 중 9일(45%)이며, '19년은 연가사용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 유 섭 위원

1.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현황 및 관리 카드 사본

□ 대통령 지시사항은「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날짜, 금액, 사유, 수령자 이름 등
20.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 내역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 (5.10. 이후)	12,488	5,850	7,194	4,500
'18년	9,650	9,650	7,194	7,106
'19년 (9월말 기준)	9,650	7,480	7,194	5,285

□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o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 참석수당, 정책 자문료 지급 내역 (17년 5월 ~ 19년 현재까지)
- 날짜, 금액, 사유, 수령자 이름 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국정과제 등 각종 정책 추진 및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 등 긴급 현안 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정책 자문료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691백만원입니다.

□ 다만, 회의 참석수당, 정책 자문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이 대외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자료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감찰관 임명 계획

10.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14.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법정소송 현황 및 판결 결과(현재 진행중인 소송 현황 포함)

16.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인사검증시스템) 관련 규정

24.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 현황 및 자체 징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4번 관련 국회에서 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지명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자료요구 10번 및 16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인사 및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 및 감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자료요구 14번 관련,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
헌법소송	5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 자료요구 24번 관련, 범죄수사개시 통보는 14건이며, 이중 자체 징계는 직권면직 1건입니다.

5.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휴직기간 및 업무복귀 기재)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 아래와 같이 현황을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 **총 3명**(17년 1명, 19년 2명) / 평균 휴직기간 9개월

- 17년 휴직자 1명은 복직 후 업무수행하고 있으며, 19년 휴직자 2명은 현재 휴직중임

○ **출산휴가** : **총 3명**(17년 1명, 19년 2명) / 평균 휴가기간 90일

□ 아울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7월 5월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한 모든 인원**에게 휴직과 휴가를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현황
7.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운영현황 (유지보수횟수, 비용, 유지보수업체)
8.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춘추관이 소비한 전력량 및 전기요금 (월별기재)

□ 2017년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기구 4기는 자체 전문 인력이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량 105,576kWh는 경내 전력시설물 가동에 주 전력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태양광 발전기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내용만 제출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17년 5월 이후)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11.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직원을 징계처분 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자체 여론조사 현황(결과) 및 연구용역 보고서

□ 대통령비서실이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연구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청와대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 연구결과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책연구과제 현황

□ 2019년도(9월 현재)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방안	수의	'19.5~11	29.0	
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	'19.5~9	18.6	
3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	'19.2~6	9.7	
4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19.9~11	9.75	

□ 2018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경쟁	'18.5~8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18.6~9	18.99	
3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	'18.7~12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비교 분석	"	'18.7~10	9.5	공개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	'18.10~12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	'18.10~12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	'18.10~12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	'18.10~12	9.0	
9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	'18.10~12	9.5	
10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	'18.11~12	9.46	공개
11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	'18.6~10	27.1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	'18.6~8	9.5	

□ 2017년도

구분	과제명	계약방법	연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7.11~12	9.0	공개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	'17.11~1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17.12	9.2	
4	2018년 정무 기조 및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	"	'17.12	9.2	
5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	'17.10~12	9.7	
6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	'17.11~12	9.3	
7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	'17.11~12	9.3	

13. 설문조사 발주 현황

□ 대통령비서실 설문조사 발주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문 수・발신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17. 정무직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급(국무위원, 장관급), 차관급(차관, 처·청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등 총 142개 직위

- 국무총리 : 1
- 감사원장 : 1
- 장관(급) : 33(장관 18, 장관급 15)
- 차관(급) : 107(차관 23, 차관급 84)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공기업 30개 직위, 준정부기관 37개 직위, 기타공공기관 16개 직위 등 83개 직위

18.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017년 5월~2019년 현재)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첨1)과 같습니다.

19. 2017년 5월~2019년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참여, 청와대 청원명 및 답변 주요내용?

□ 국민청원 시작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 18일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 수를 받은 청원은 모두 124건이며, 현재 답변된 청원은 모두 120건입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자료를 엑셀 파일로 유첨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120건의 답변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붙임 국민청원. 끝.

21.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위원장 방한 대비 준비 사항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국가안보실 소관입니다. 국가안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현황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무회의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 주요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2017년 5월~2019년 현재, 외부 강의한 직원 현황 (강의일자, 강의장소, 직원명단, 주제, 대상, 강의료)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배 숙 위원

1. 최근 5년간 국회운영위 업무보고/현안 보고자료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8.

대 통 령 비 서 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2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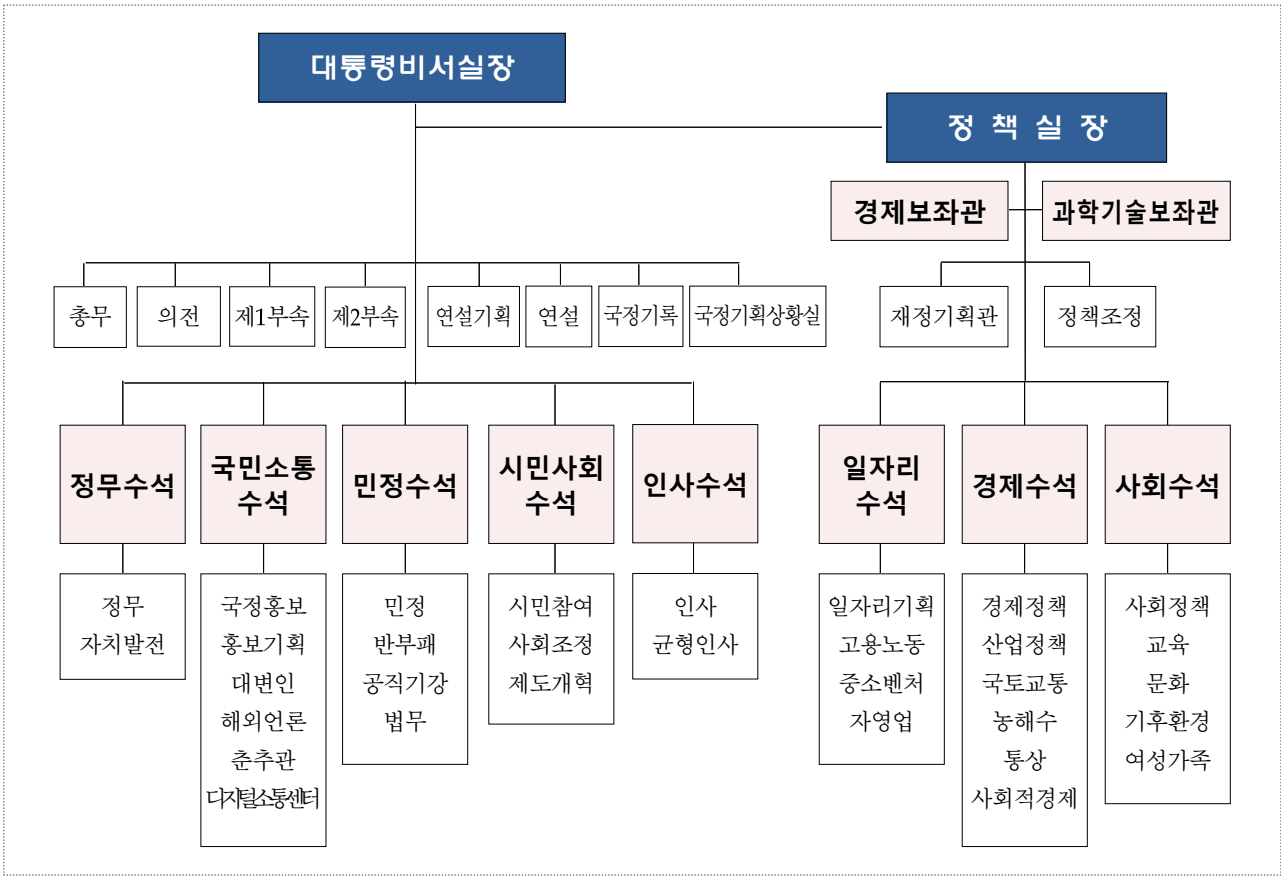
1. 100대 국정과제

2. 예산 및 시설 현황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2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7. 31.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2	12	41	225	144
결 원	△21	-	△1	△9	△11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1.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1) 일본의 조치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조치내용)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로 전환**(7.4 시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前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 각의 결정 → 8.7 공포 → 8.28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3년간 유효) 사용 불가,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허가 필요

□ **(국내 영향)**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 증대

○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

-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D램은 전 세계 시장의 72.4%('18년)를 한국 기업이 점유

○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 우려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조치사항

□ **정부 대응체계 구축**

○ 일본의 조치시행 후 「**민관 협의채널**」 및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 등을 구축하여 **정부-경제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민관 협의채널) 주요 기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협의채널 가동

*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7.12 이후 8차례 회의 개최)

-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732억원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7.29)

□ 對일본 협의·대응

○ 한-일 양자협의(7.12), RCEP 계기 고위급 회담(7.27), 외교장관 회담(8.1) 등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국제기구 검증제안(NSC, 7.12), 전략물자 국장급 협의 요청(7.16), WTO 일반이사회 1:1 대화 제안(7.24), RCEP 장관회담 제안(7.27)에 대해 일측이 거절

○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민간 의견서 제출**(7.24)

○ **일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

□ 국제공조 아웃리치 추진

○ **안보 2차장**(7.10~14) 및 **통상교섭본부장**(7.23~25) **訪美**,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지지 확보 추진**

*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7.11),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 등 병행

○ **국제기구, 외국 투자은행・신평사** 등에 우리 정부 입장 전달

* (국제기구) WTO 일반이사회(7.24), RCEP 장관회의(8.2~3) 등 논의

* (투자은행·신평사) 3대 신평사 면담(7.22~23), 투자은행 등 해외 투자자 400명 메일 전송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 규제 대상품목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

- 日 수출규제 대상품목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 74) 중 **159개**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식별

-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애로 해결** 등 **종합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구성·운영(7.22~)

* 품목별 재고 현황 및 수입동향 점검, 기업의 사전대비 지원, 원스톱 애로해결 등 수행

*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7.15~), 20개 업종별·8개 지역별 설명회 개최(7.29~8.9)

(3) 향후 대응계획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총력 지원**

○ **재고물량 확보**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물량확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일본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CP)* 활용 지원**** 등

  * Compliance Program 기업 : 백색국가 제외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 품목별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8월중)

- **(대체 수입)**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40%p이내), 수입자금 대출 일괄 보증(무보)

○ **신속한 국산화 개발 및 국내 생산확대 지원**

-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75→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생산 지원**

  * '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M&A, R&D 등 소요자금 10조원 이상 지원(산은·기은 등)

○ **피해기업 발생시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정책금융기관, 6조원), **국세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 **對日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 **다각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성 확보**

  * 추경 예산(2,732억원)을 활용하여 20개 품목 초단기 R&D 지원,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지원

- **①수입국 다변화**, **②단기 집중개발**, **③국내 생산설비 확충**, **④기술제휴 및 M&A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방안별 특단의 지원* 추진**

  * 해외기술 도입형 R&D 지원, M&A 자금지원(2.5조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향(30→40%)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test-bed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추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규제 특례 등 원스톱 지원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17.12), 혁신창업('17.11, '18.5), 뿌리산업('18.5), 소프트웨어('18.9), 신산업('18.10), 보건의료('18.12), 청년('18.3), 여성('17.12), 신중년('17.8, '18.8) 등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광주**('19.1.31)·**구미**('19.7.25) 등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분위기 조성

□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 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 **'제2벤처붐'** 확산, 스케일업 촉진 등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 자영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등 추진

(2) 경제정책

□ 19년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가계부채,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

○ **데이터·네트워크·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확대**

○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및 **아동수당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19.7),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건보 보장성 강화** 이행, **청년세대 일반검진**('19.1), **국가폐암검진**('19.7) 실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건강투자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호**

□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학력 보장,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근절 추진**

○ 관광벤처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 대한민국관광혁신전략**('19.4)**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혁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마련**('19.9)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19.10)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익년 3월)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저감정책 마련·추진

○ 인천 수돗물 사고('19.6)를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저출산 정책 로드맵**('18.12)에 따라 핵심정책 추진

○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고용 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센터 설치로 **보편적 가족 정책 추진**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예·결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비 고
	예산	결산		
총 계	79	410	94	
건물대여료	48	117	53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	1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49	21	명퇴수당 환수금, 맞춤형 복지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31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예산
	예산	결산	
총 계	89,868	86,201	93,669
인 건 비	37,606	36,847	40,443
기 본 경 비	18,518	17,256	19,431
사 업 비	33,744	32,097	33,795

2. 시설 현황

□ 토 지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 물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2. 2017, 2018회계연도 결산 세부 내역

□ 요구하신 사항은 [별첨 1]과 같습니다.

3. 최근 3년간 출장비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비 집행 현황(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	국내출장		국외출장		합계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2017년 (5월 10일 이후)	453	238	345	166	798	404
2018년	567	561	330	311	897	872
2019년 (9월말 기준)	570	383	300	203	870	586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공무 출장은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이 대외 공개될 경우 관련 활동이 위축되는 등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추진비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6.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 (5.10. 이후)	12,488	5,850	7,194	4,500
'18년	9,650	9,650	7,194	7,106
'19년 (9월말 기준)	9,650	7,480	7,194	5,285

□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o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클린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현재 보유 중인 카드는 모두 336개(농협BC)로서 최근 3년간 사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사용 실적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도 (5월 이후)	2018년도	2019년도 (9월말 기준)
신용	3,036	2,896	672
직불	-	1,576	2,523
제로페이	-	-	-
합계	3,036	4,472	3,195

□ 다만,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 행사에 소요되는 식사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세부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민원 및 민원 처리 현황(각 민원별 공문 사본 첨부)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7.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관련 사항은 국가안보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4.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감찰반 구성 현황 및 감찰반원에 대한 징계 현황

19. 청와대 공직감찰반 개편 및 쇄신안 발표 이후 현재 진행 상황(감찰반 업무내규 개정현황, 청와대 감찰반 직제령 개정 현황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자료요구 8번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감찰반 관련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7조(감찰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2018.12.24.일 개정 이후) >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등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체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8.12.24 신설)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18.12.24 신설)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18.12.24 신설)

-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안보,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특성상 직제 외의 내부 규정은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8년 12월에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감찰반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o 또한, 특별감찰반의 업무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행정부 소속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내에 한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감찰 관련 세부적 사항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여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용차량 유류비/운영일지 (차종 및 공용차량 세부현황 첨부)

□ 자동차에 이용에 대한 세부 정보는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직원 포상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의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포상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의계약 현황?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용역 수행, 물품납품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 목록과 수행기관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5월 이후)	시설물공사, 노후장비 교체, 정보화사업 등 29건	2,078
2018년	시설물공사, 노후장비 교체, 정보화사업 등 51건	4,041
2019년(9월말)	시설물공사, 노후장비 교체, 정보화사업 등 59건	4,953

* 계약서 기준

12.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5급 행정관 이상 공무원 인사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주요직위 재직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와대 주요 직위 현황 (2019. 10월 현재)

○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책실장	김상조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 법무비서관	김영식
○ 정무수석비서관	강기정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도한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민정수석비서관	김조원	○ 제도개혁비서관	신상엽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거성	○ 인사비서관	권용일
○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 균형인사비서관	권향엽
○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 정책조정비서관	이진석
○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승	○ 재정기획관	박종규
○ 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
○ 경제보좌관	주형철	○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	○ 경제정책비서관	도규상
○ 총무비서관	이정도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의전비서관	박상훈	○ 국토교통비서관	윤성원
○ 제1부속비서관	신지연	○ 농해수비서관	박영범
○ 제2부속비서관	최상영	○ 통상비서관	박진규
○ 연설기획비서관	오종식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연설비서관	신동호	○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문화비서관	양현미
○ 정무비서관	김광진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자치발전비서관	유대영	○ 여성가족비서관	홍승아
○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	○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
○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 대변인	고민정	○ 국방개혁비서관	김현종
○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	○ 사이버정보비서관	윤형중
○ 춘추관장	유송화	○ 평화기획비서관	최종건
○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 외교정책비서관	박철민
○ 민정비서관	이광철	○ 통일정책비서관	김창수

13.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 인사위원회 관련 세부자료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 공정성 저해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현황(지원예산 첨부)

□ 대통령비서실은「대통령비서실 직제」제8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비 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홍석현	해촉
대통령 외교(UAE 특임) 특별보좌관	임종석	
대통령 외교(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	한병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이정동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유홍준	해촉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	

○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발언, 민정수석 발언, 대변인 명의 발언 및 관련 보도자료?

○ (대통령, 민정수석)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요구하신 내용은 별첨자료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보도자료 전체

□ 첨부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 검찰, 경찰 및 외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현황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입시정책 관련 대통령발언, 민정수석 발언, 대변인 명의 성명 또는 보도자료?

○ (대통령 발언)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입시정책 관련 대변인 명의 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2. 2019.10.25.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장관회의 안건 및 회의록

□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은 11월에 교육부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최근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 현황(방문국, 체류일수, 순방시 대통령 발언)

□ 해외 순방 내역

- 미국 방문('17.6.28.-7.2.)
- 독일 공식방문 및 G20 정상회의(독일 함부르크) 참석('17.7.5.-10.)
-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러시아 방문('17.9.6.-7.)
- 제72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7.9.18.-22.)
-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APEC 정상회의(베트남 다낭), 한-ASEAN/ASEAN+3/EAS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 참석('17.11.8.-15.)
- 중국 국빈방문('17.12.13.-16.)
- 베트남 국빈방문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공식방문('18.3.22.-28.)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일본 도쿄) 참석('18.5.9.)
- 미국 방문('18.5.21.-24.)
- 러시아 국빈방문('18.6.21.-24.)
-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18.7.8.-13.)
- 제73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8.9.23.-27.)
- 프랑스 국빈방문,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제12차 ASEM 정상회의(벨기에), 제1차 P4G 정상회의(덴마크) 참석 및 덴마크 공식방문 ('18.10.13.-21.)
- ASEAN 정상회의(싱가포르) 및 APEC 정상회의(파푸아뉴기니) 참석('18.11.13.-18.)
-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참석 및 뉴질랜드 국빈방문('18.11.27.-12.4.)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 국빈방문('19.3.10.-16.)
- 미국 방문('19.4.10.-12.)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국빈방문('19.4.16.-23.)
-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국빈방문('19.6.9.-16.)
-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참석('19.6.27.-29.)
- 태국 공식방문, 미얀마 및 라오스 국빈방문('19.9.1.-6.)
- 제74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9.9.22.-26.)

24. 최근 3년간(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해외정상과의 공동선언문, 공동회견문

□ 해외순방시 대통령 발언은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의 말과 글 (www1.president.go.kr/c/president-speeches)」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 수소차량 도입시기 및 주행거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서 도입한 수소차는 2대입니다.

※ 도입시기 : ‘18년 5월, ’19년 3월

□ 자동차에 대한 상세 운용내역은 각종 중요 행사의 일정, 동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보안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별첨 자료 목록

○ 주요 업무현황

○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2018년도 예산개요

○ 2019년도 예산개요

○ 2020 예산개요

○ 국민청원 답변 현황

○ 감사원 및 외부기관 감사결과 및 이행 내역

○ 검찰 개혁 대통령, 민정수석, 대변인 명의 발언 및 관련

제371회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9. 11.

대통령비서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각 수석실 업무

Ⅱ.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1. 국정과제 추진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3. 헌법상 자문기구 등 회의체 운영

〈붙임〉

1. 100대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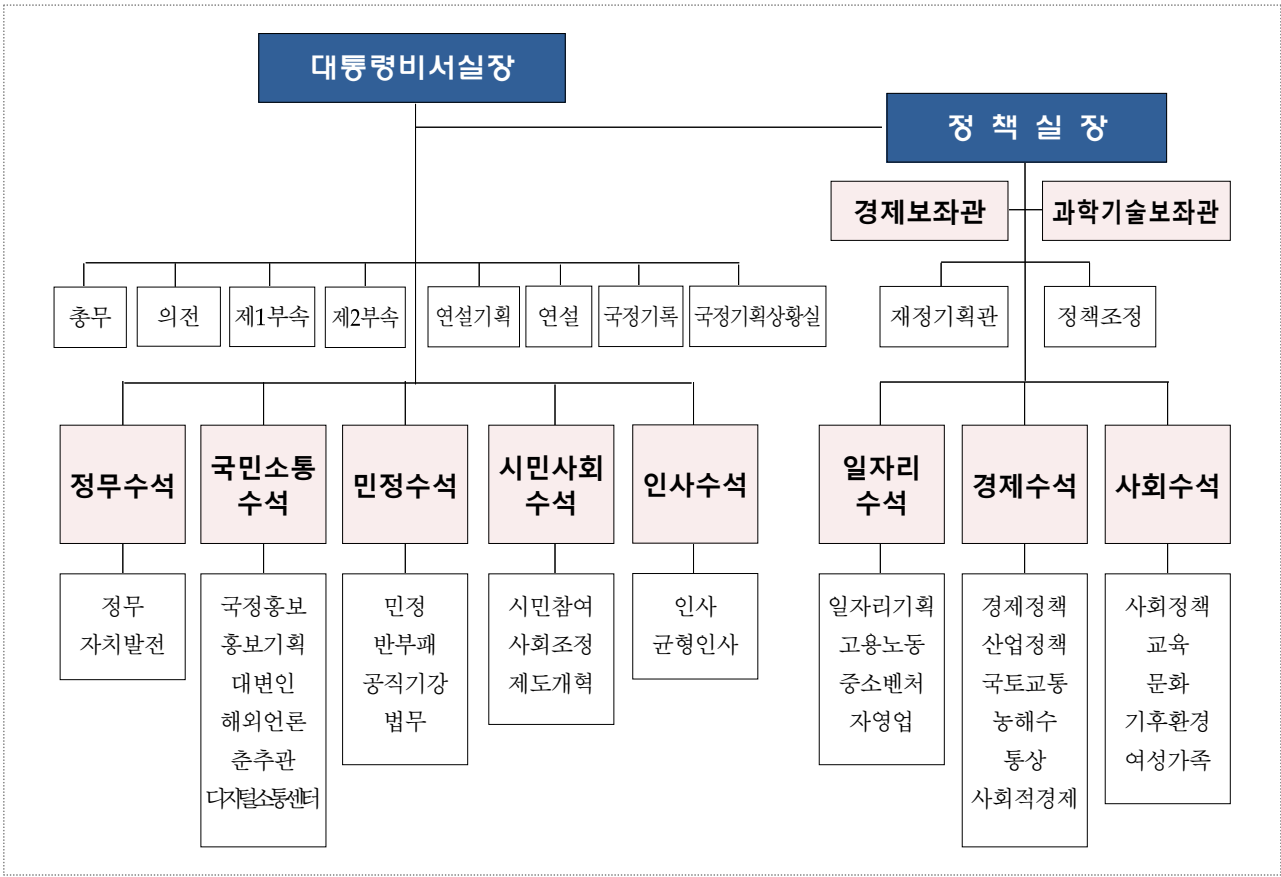
2. 예산 및 시설 현황

3. 기타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4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9. 10월 현재)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4	12	42	219	151
결 원	△19	-	-	△15	△4

2. 각 수석실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 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주택·도시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Ⅱ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1. 국정과제 추진

(1) 그간의 국정과제 추진 평가

○ 국민소득 3만불 진입, 교육·보육·안전·환경 분야의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 사람 중심의 공정 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중**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및 일자리 질 개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 마련**

-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제조업 르네상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투자 강화 등 **혁신성장 역량 강화**

(2) 향후 국정과제 추진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및 민생경제·안정에 역점을 두며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

-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한 **더 많은 국민의, 더 높은 삶의 질 제고**

○ 혁신·창업, 성장동력 강화, 사회안전망 보강, 국민통합, 좋은 일자리 확충 등 **'혁신'·'포용'·'공정'·'평화'**에 기반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

- 경제·사회 전반의 공정성 구축 및 개혁의 지속적 추진, 핵심정책의 소통과 홍보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2. 주요 정책 추진 지원

(1) 일자리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바탕으로 **분야별·계층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

- **과학기술, 건설산업, 뿌리산업, 소프트웨어, 신산업**(미래차,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및 **문화서비스, 환경, 디자인** 산업 대책('19.9) 등 **민간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 **청년**('18.3). **신중년**('17.8, '18.8), **여성**('17.12), **저소득층**('18.7) 등 계층별 일자리 대책 마련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19.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19.6)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돌봄·건강** 등 다양한 **개인적 수요**와 **문화·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19.9)

○ **광주**('19.1.31)·**구미**('19.7.25)·**군산**('19.10.24) 등 6개 지역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19.2)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산

□ **노동여건 개선**과 **일·생활 균형**으로 **노동존중**의 **포용성장** 기반 마련

○ **'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결정체계개편** 추진

* ('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2.87% 인상), 월 환산 1,795,310원(월 209시간 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18.7.1 시행) **단계적 현장 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 **(시행시기)** ▲ ('18.7월) 300인 이상 기업 (특례제외업종은 주68시간제), ▲ ('19.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20.1월) 50~299인 ▲ ('21.7월) 5~49인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 안전한 일터 조성 추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단계적 추진과 **채용절차법**('19.7.17 시행)을 통한 **공정한 고용관행** 확산

* '19.6월말 기준 1단계 18만 5천명, 2단계 4천 5백명 전환 결정

□ **혁신창업·성장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 우수인력이 창업하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Scale-up)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창업 붐 조성**

* 투자자금 확대(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등), 우수인재 창업촉진(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사내벤처 지원), 회수·재도전 환경개선(코스닥 특례상장 요건 완화 등)

○ **지역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19.7.24)

*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접수(10.11), 특구위원회(국무총리주재, 11.12)에서 최종 지정 여부 결정 예정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확산 및 산단 고도화,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 추진**

○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보급, 백년가게 및 명문소공인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권르네상스 확산**을 통한 **골목 상권 활력 제고**,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및 재기 지원 강화**

(2) 경제정책

□ 세계경제 둔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기조 지속**

○ **세계경제 대부분의 성장둔화,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에 대응하여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에 역점

○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

□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예산의 법정기한내 국회 통과** 및 **연초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부동산,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관리에 만전**

□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하고, **규제 입증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환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및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을 거점으로 **혁신의 성과 가시화**

○ 일괄담보제 도입,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가속화**

□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등 **포용성을 강화**

○ 하도급·유통·가맹점 분야의 **갑을관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확충**

○ 의료·교육·주거 등 **필수생계비 경감**, EITC·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3) 사회정책

□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필수의료·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추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 추진**

□ **교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교육 지방분권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관광·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함께 누리는 **보편적 문화정책 확대**

○ 지역·콘텐츠·산업혁신 등을 내용으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발표**('19.4) **및 추진**

○ 모험투자펀드 신설, 실감콘텐츠 육성, 신한류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19.9) **및 추진**

○ 문화시설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19.7),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 스포츠혁신위 운영(19.2~)을 통한 개혁과제 발굴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추진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9.7),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19.8),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9.10) 개최 등 국제협력 강화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수질 관리,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 겨울·봄철(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 수립·추진('19.11) 지원

○ 인천 수돗물 사고('19.6) 등을 계기로 **수돗물 관리체계 전반 점검 실시** 및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1) 지원

○ 전국 불법 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19.9월 발생) 대응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강화** 및 잔반 급여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상황 점검·관리**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강화 및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추진

○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19.4) 및 지급**연령 확대**('19.9, 만6세→만7세)**로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저소득 한부모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와 가족센터 설치('20년~, 61개소)로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젠더 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여 **여성 인권보호 및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안('19.2) 마련

3. 헌법상 자문기구 등 회의체 운영

(1) 자문 회의체 현황

□ 헌법상 자문기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등

○ 전문적 정책 심의 등 **특정 분야 기능 수행 위원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2) 주요 위원회 운영 성과

□ 정책기획위원회

○ 국정과제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 지원,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19.2) 및 '19년 시행계획 수립·점검 등

□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정책 로드맵, 청년일자리대책, 사람투자 과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등 마련

□ 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마련 권고', 디지털헬스케어 정책방안 마련 등

□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자치경찰 도입방안 발표('19.2),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등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신북방정책 비전·추진전략 마련, 한-러 간 9개다리 행동계획 서명('19.2) 등

붙임1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안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2 예산 및 시설 현황

1. 2019년 예산 및 집행현황

□ 세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결산	'19 예산	'19 집행 (9월말)	비 고
총 계	410	94	312	
건물 대여료	117	53	189	경내 입점업체 임대료 (은행, 매점 등)
위약금	13	-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249	21	103	명퇴수당 환수금 등
잡수입	31	20	2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결산	'19 예산	'19 집행 (9월말)
총 계	86,201	93,669	65,362
인 건 비	36,848	40,443	29,033
기 본 경 비	17,256	19,431	13,783
사 업 비	32,097	33,795	22,546

2. 2020년 예산안 개요

□ 세입 예산안

○ '20년 세입 예산안은 **243백만원**으로 '19년 세입 예산 94백만원 대비 158.5%(149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94**	**243**	**149**	**158.5**
관유물 대여료	53	202	149	281.1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1	-	-
잡수입	20	20	-	-

□ 세출 예산안

○ '20년 세출 예산안은 **99,063백만원**으로 '19년 세출 예산 93,669백만원 대비 5.8%(5,394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93,669	99,063	5,394	5.8
인 건 비	40,443	42,066	1,623	4.0
기 본 경 비	19,431	20,197	766	3.9
사 업 비	33,795	36,800	3,005	8.9

3. 시설현황

□ 토지 현황 : 총 262,167㎡

○ 청와대 내 부지 238,882㎡

○ 실장공관 등 청와대 외 부지 23,285㎡

□ 건물 현황 : 총 42,172㎡

○ 청와대 내 본관, 여민관, 춘추관 등 25동 38,792㎡

○ 청와대 외 실장공관, 어린이집 등 4동 3,380㎡

붙임3 기타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 2017년 5월 이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 2019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 등을 운영 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 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旣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상황하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별첨 2)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2015회계연도 이전 사안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2018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는 19년 10월 현재까지 미확정.

□ 2016회계연도 (총 4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업무용 승용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필요	○[지적사항]「공용차량관리규정」및「2016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은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량 30대는 블랙박스 설치실적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금지 및 안전운행 유도 등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	제도개선	○ 행사·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설치 완료	조치완료
(2)불필요한 예산 편성 자제 필요	○[지적사항] 신규 무정전전원장치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노후 배터리 교체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18년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 확대 필요 등	○[지적사항]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비율이 낮고, 전체 연구용역 중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정책연구용역의 비율(75%)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주의	○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용역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 중 ○ 17년도에 현 정부가 수행한 연구과제(총 4건)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제시된 공개 기준(1천만원)에는 미달하나 - 국회 지적사항의 취지를 존중, 1건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미 대국민 공개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부득이 비공개하였음	조치완료
(4) 과도한 예산 불용 방지 노력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국정평가관리)은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39억 3,500만원) 대비 16%(6억 6,200만원)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국정평가관리사업의 세부 사업별 담당자 지정, 예산집행계획 제출(1.31), 매월 진도관리 등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조치완료

□ 2017회계연도 (총 10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준수 필요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각 분기별로 6%, 30%, 30%, 34%룰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분기별로 14.5%, 17.6%, 14.2%, 53.7%를 집행하여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에 편중되게 집행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산취득비를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19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말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 연가사용 활성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적정 편성 필요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년도 연가보상비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2,1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8,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43.4%에 불과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수행하기 위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연가사용을 권장하는 문화가 정착 시 향후 연가보상비 집행도 연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직원들의 연가사용일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연가보상비의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 19년도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시 연가보상일수를 작년보다 축소하여 편성하였음(10일→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 국정평가관리 사업 집행실적 부진	○[지적사항] 2017년도 동 사업 예산 38억 6,800만원 중 23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0.7%에 불과하며,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5.4%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2017년도 예산 23억 1,700만원 중 12억 8,1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5.3%에 불과함(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은 78.1%).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등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19년 동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18년 6,158백만원 → '19년 4,491백만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 확대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의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2억 7,0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전 정부가 2,69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 정부는 3,690만원을 집행하여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가 추진한 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1건은 공개하고 있으나, 나머지 3건은 용역 집행내역은 물론 연구과제명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18년도 수행한 총 10건 중 공개 가능한 2건에 대하여 대국민 공개 완료하였으며 - 법령상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국민 공개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 사이버교육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업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교육내용으로 구축된 사이버교육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해 전액 집행하였음. - 2017년 동 사이버교육원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인원이 1,166명으로 월 평균 97명만이 활용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관 내 업무전상망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안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매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직원들에게 안내·홍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시 중에 있음 ※ '18년 연간 이용인원(1,329명)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6)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필요	○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에 2017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러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컨텐츠 업데이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인원과 비교하면 방문인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의 컨텐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18년 12월에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였음 - 상식·과학·문화유산·전래동화 등 어린이 교육용 컨텐츠 및 기능 강화 등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7) 도메인 사용개수 축소에 따른 도메인사용료 적정 편성 필요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터넷 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등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이를 비방·조롱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관련 도메인을 구입·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 및 대통령과 관련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여 관리·운영함. - 2017년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44만원으로 집행률이 34.9%에 불과함. - 이는 당초 예산을 도메인 200개를 1개당 35,000원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관리하는 도메인 수량을 과거 대비 50% 수준인 106개로 축소하였으며 1개당 평균 단가도 23,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지속적인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메인 관리수량 및 단가에 따라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19년도 예산은 변경된 수량과 단가에 맞추어 절감 편성함 (17년·18년 각 700만원 → 19년 350만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8) 국민청원 게시판의 법적성격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게시판에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청원, 민원, 고충민원 등과 혼동의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되는 의견의 법적성격이 타 법령상의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제도개선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신문고(권익위)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청원 제출 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지 않고 제출된 의견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며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만 답변하는 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타 법령에 규정된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나 o 19년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통해, - 타 법령상의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더욱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FAQ메뉴를 신설하여 - 청와대 국민청원의 이용방법과, 운영원칙을 사례를 제시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타 법령상 청원, 민원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있음 - 또한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하여, 법령상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9) 국가안보실의 적정 인력운용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2017년말 기준 국가안보실의 현원(37명)은 정원(43명)대비 6명이 결원상태이나, 실제로는 다수의 파견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견인력 규모는 대략 80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바, 정원의 2배에 이르는 파견인력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확한 기관별 파견인원 현황에 대해 국가기밀, 보안 등의 다루는 대통령비서실 업무 특성상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함.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의 파견인력 운용현황을 소관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한편, 적정한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국가안보실은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긴급현안 대응 및 국가위기관련 상황관리(24시간 근무체계 구축) 등을 위해 최소한의 파견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 파견 인력 직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파견인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의 과정에서 파견인력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 및 설명 실시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th></tr>
<tr><td>(10) 특수활동비 축소 및 내외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td><td>○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124억 8,800만원 중 88억 1,200만원(70.6%)을 집행하였음.

- 특수활동비가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되거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특활비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감액하고, 기밀성이 부족한 사업은 최소화하거나 투명성이 높은 비목으로 전환하는 등 특활비의 불투명성과 오용가능성을 제거할 것</td><td>시정</td><td>○ 현 정부 출범 시 특수활동비 절감계획('17.5.25)을 마련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였음

특수활동비 예산
<table><tr><td>'16년</td><td>'17년</td><td>'18년</td><td>'19년</td></tr><tr><td>147억원</td><td>125억원</td><td>97억원</td><td>97억원</td></tr></table>
○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집행내용을 포함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임</td><td>조치완료</td></tr>
</table>

2019년도 예산 개요

2018.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목 차 -

Ⅰ. 일반 현황

Ⅱ. 2018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Ⅲ. 인건비 및 기본경비

Ⅳ. 사업비

1. 업무지원비

2. 국정평가관리

3. 시설관리 및 개선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 정보화 추진

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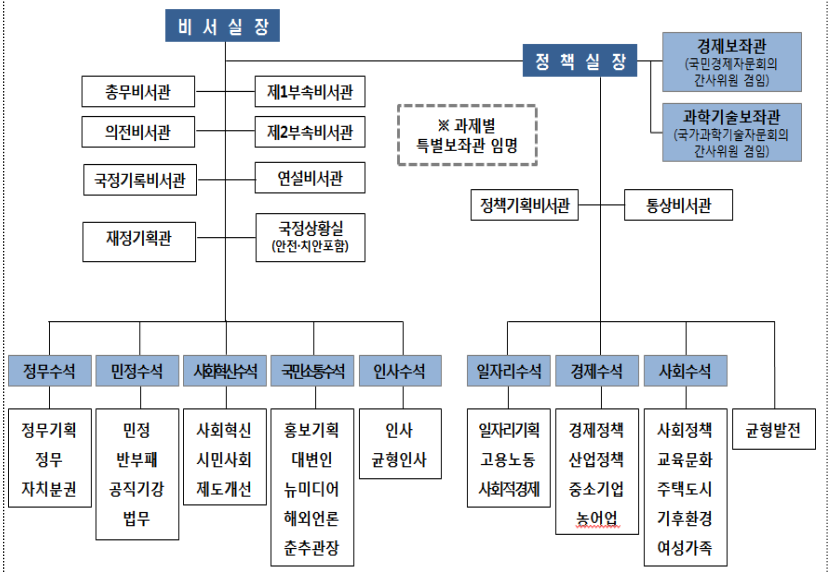
Ⅰ. 일반현황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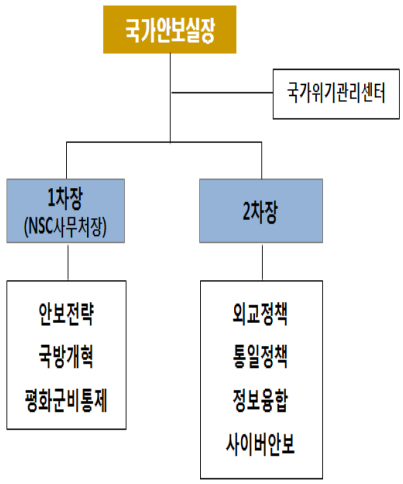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8수석, 2차장, 2보좌관으로 구성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국가안보실 조직도>



□ 인원(정원) 현황

총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행 정 관	행정요원
490	15	95	218	162

Ⅱ. 2018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1. 편성 기본방향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하되, 기관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

2. 세입 예산 총괄표

□ ‘18년 세입 예산은 **79백만원**으로 ‘17년 세입예산 76백만원 대비 **3백만원(3.9%) 증가**

< 2018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 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 감		비 고
			(B-A)	%	
총 계	76	79	3	3.9	
건물대여료	45	48	3	6.7	경내 입점업체 (은행, 카페, 매점 등) 임대료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1	-	-	과년도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10	-	-	임대건물 전기료 · 상하수도료, 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3. 세출 예산 총괄표

□ ‘18년 세출 예산은 **898억원**으로 ‘17년 세출 예산 880억원 대비 **2.0%(18억원) 증가**

○ 인건비는 전년대비 8.4% 증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2% 감소

○ 사업비는 전년대비 △0.3% 감소

< 2018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 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총 계	88,063	89,868	1,805	2.0
인 건 비	34,691	37,606	2,915	8.4
기 본 경 비	19,532	18,518	△1,014	△5.2
사 업 비	33,840	33,744	△96	△0.3
·업무지원비	19,856	16,392	△3,464	△17.4
·국정평가관리	3,868	6,158	2,290	59.2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정보화 추진	4,625	5,680	1,055	22.8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476	23	5.1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 종료사업 : 해당 없음

□ 신규사업 : 해당 없음

5.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7예산	'18예산	증가율
합 계	8,946	12,314	37.6
· 국정평가관리	3,868	6,158	59.2
· 정보화 추진	4,625	5,680	22.8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476	5.1

Ⅲ.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8년 인건비는 **376억원**으로 ‘17년 347억원 대비 **29억원(8.4%) 증가**

□ ‘18년 기본경비는 **185억원**으로 ‘17년 195억원 대비 **△10억원(△5.2%) 감소**

< 2018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인 건 비	34,691	37,606	2,915	8.4
기 본 경 비	19,532	18,518	△1,014	△5.2

Ⅳ. 사업비

□ ‘18년 사업비는 **337억원**으로 ‘17년 338억원 대비 **△1억원(△0.3%) 감소**

○ 국정평가관리 2,290백만원, 정보화 추진 1,055백만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23백만원 증가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시설관리 및 개선은 ‘17년과 동액

○ 업무지원비 △3,464백만원 감소

< 2018년 사업비 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총 계	33,840	33,744	△96	△0.3
· 업무지원비	19,856	16,392	△3,464	△17.4
· 국정평가관리	3,868	6,158	2,290	59.2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 정보화 추진	4,625	5,680	1,055	22.8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476	23	5.1

1. 업무지원비 (계속)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 업무지원비	19,856	16,392	△3,464	△17.4
· 특수활동비(230)	12,488	9,650	△2,838	△22.7
· 업무추진비(240)	5,657	5,657	-	-
· 직무수행경비(250)	1,711	1,085	△626	△36.6

① 특수활동비 : ('17예산) 12,488 → ('18예산) 9,650백만원

○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2,838백만원 감소

② 업무추진비 : ('17예산) 5,657 → ('18예산) 5,657백만원

○ 각 부서별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과 동액

③ 직무수행경비 : ('17예산) 1,711 → ('18예산) 1,085백만원

○ 인사검증, 대통령 순시현장 사전답사, 민심동향 파악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626백만원 감소

2. 국정평가관리 (계속)

□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 국정평가관리	3,868	6,518	2,290	59.2
· 인건비(110)	104	-	△104	순감
· 운영비(210)	934	1,379	445	47.6
· 업무추진비(240)	502	502	-	-
· 연구용역비(260)	2,317	2,788	471	20.3
· 민간이전(320)	11	-	△11	순감
· 유형자산(430)	-	1,489	1,489	순증

① 인건비(일용임금) : ('17예산) 104 → ('18예산) -

○ 전직 대통령 기록물 이관 사업 완료에 따라 '18년에는 미편성

② 운영비 : ('17예산) 934 → ('18예산) 1,379백만원

○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720백만원),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110백만원), 대통령메시지 운영(80백만원),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410백만원), 영상제작 소모품(42백만원) 등 '17년 대비 445백만원 증가

③ 업무추진비 : ('17예산) 502 → ('18예산) 502백만원

○ 주요 정책현안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여론 파악 등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17년과 동액

④ 연구용역비 : (‘17예산) 2,317 → (‘18예산) 2,788백만원

○ 여론조사(1,794백만원), 국정평가 및 성과콘텐츠 제작(663백만원), 정책과제 연구용역(300백만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17년 대비 471백만원 증가

⑤ 민간이전(고용부담금) : (‘17예산) 11 → (‘18예산) -

○ 전직 대통령 기록물 이관 사업 완료에 따라 ‘18년에는 미편성

⑥ 유형자산(자산취득비) : (‘17예산) - → (‘18예산) 1,489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 등 영상 기자재비 1,489백만원

3. 시설관리 및 개선 (계속)

□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	-
· 운영비(210)	2,680	2,690	10	0.4
· 건설비(420)	2,102	2,092	△10	△0.5

① 운영비 : ('17예산) 2,680 → ('18예산) 2,690백만원

○ 청와대 내 시설·기계·전기·통신설비 등의 유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10백만원 증가

② 건설비 : ('17예산) 2,102 → ('18예산) 2,092백만원

○ 본관, 여민관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10백만원 감소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계속)

□ 청와대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 및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운영비(210)	227	227	-	-
・업무추진비(240)	29	29	-	-

① 운영비 : ('17예산) 227 → ('18예산) 227백만원

○ 직원 등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과 동액

② 업무추진비 : ('17예산) 29 → ('18예산) 29백만원

○ 직원 등의 교육 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서 '17년과 동액

5. 정보화 추진 (계속)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 정보화 추진	4,625	5,680	1,055	22.8
· 운영비(210)	2,970	3,043	73	2.5
· 연구용역비(260)	1,110	1,078	△32	△2.9
· 유형자산(430)	545	1,559	1,014	186.1

① 운영비 : ('17예산) 2,970 → ('18예산) 3,043백만원

○ 전용회선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73백만원 증가

② 연구용역비 : ('17예산) 1,110 → ('18예산) 1,078백만원

○ 전산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32백만원 감소

③ 유형자산 : ('17예산) 545 → ('18예산) 1,559백만원

○ 전산 관련 노후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 대비 1,014백만원 증가

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계속)

□ 위기관리센터(상황실)내 정보망 유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476	23	5.1
• 운영비(210)	247	270	23	9.3
• 업무추진비(240)	166	166	-	-
• 연구용역비(260)	40	40	-	-

① 운영비 : ('17예산) 247 → ('18예산) 270백만원

○ 상황실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용역 비용으로 '17년 대비 23백만원 증액

② 업무추진비 : ('17예산) 166 → ('18예산) 166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년과 동액

③ 연구용역비 : ('17예산) 40 → ('18예산) 40백만원

○ 국가안보 관련 정책연구비로 '17년과 동액

2019년도 예산 개요

2019.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목 차 -

Ⅰ. 일반 현황

Ⅱ. 2019년 세입·세출 예산 개요

Ⅲ. 인건비 및 기본경비

Ⅳ. 사업비

1. 업무지원비

2. 국정운영관리

3. 시설관리 및 개선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 정보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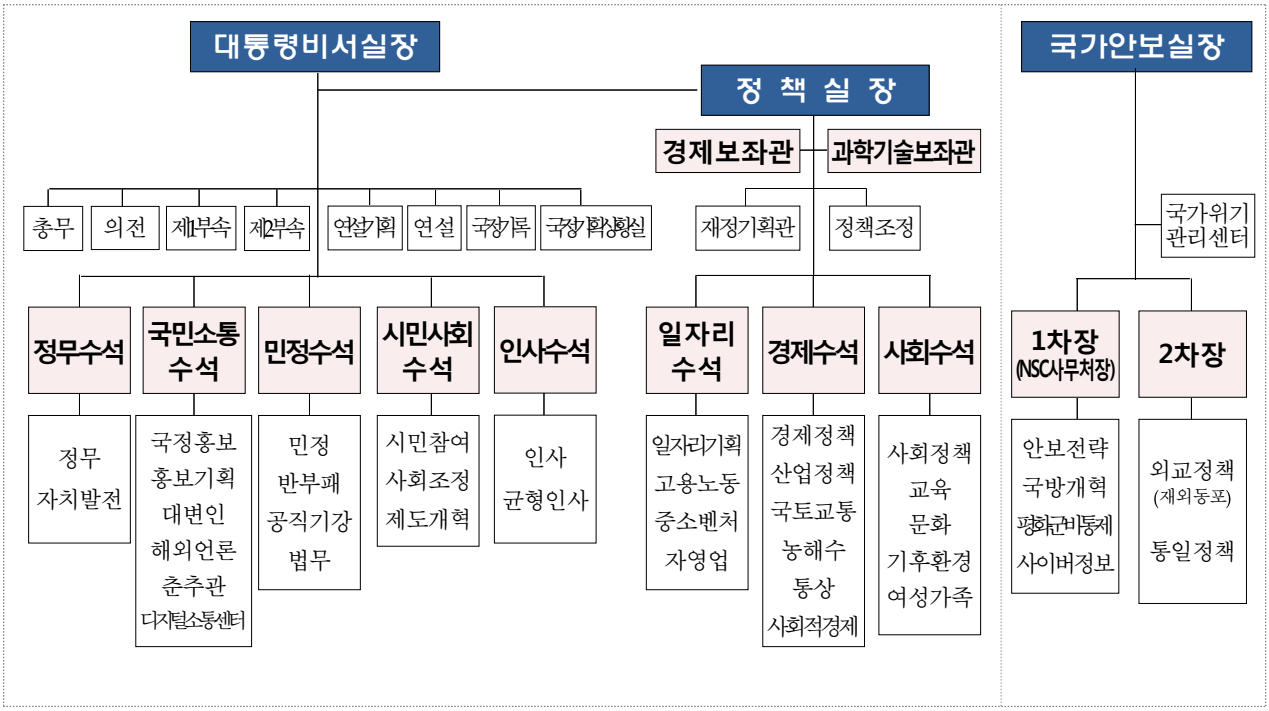
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Ⅰ. 일반현황

□ 조 직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8수석, 2차장, 2보좌관으로 구성



□ 인원(정원) 현황

총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행 정 관	행정요원
490	15	95	218	162

Ⅱ. 2019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1. 편성 기본방향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하되, 기관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

2. 세입 예산 총괄표

□ ‘19년 세입 예산은 **94백만원**으로 ‘18년 세입 예산 **79백만원** 대비 **19.0%(15백만원) 증가**

< 2019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 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비 고
			(B-A)	%	
총 계	**79**	**94**	**15**	**19.0**	
건물대여료	48	53	5	10.4	경내 입점업체 (은행, 카페, 매점 등) 임대료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1	-	-	과년도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10	20	10	100.0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3. 세출 예산 총괄표

□ ‘19년 세출 예산은 **936억원**으로 ‘18년 세출 예산 **898억원** 대비 **4.2%(38억원) 증가**

○ 인건비는 ‘18년 대비 7.5%(28억원) 증가, 기본경비는 ’18년 대비 4.9%(9억원) 증가

○ 사업비는 ‘18년 대비 0.1%(0.5억원) 증가

< 2019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 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B)	’19예산 (B)	증감	
			B-A	%
총 계	89,868	93,669	3,801	4.2
인 건 비	37,606	40,443	2,837	7.5
기 본 경 비	18,518	19,431	913	4.9
사 업 비	33,744	33,795	51	0.1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
·국정운영관리	6,158	4,491	△1,667	△27.1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정보화 추진	5,680	6,378	698	12.3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1,496	1,020	214.3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 종료사업 : 해당 없음

□ 신규사업 : 해당 없음

5.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8예산	'19예산	증가율
합 계	6,156	7,874	27.9
· 정보화 추진	5,680	6,378	12.3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1,496	214.3

Ⅲ.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9년 인건비는 **404억원**으로 ‘18년 **376억원** 대비 **7.5%(28억원) 증가**

□ ‘19년 기본경비는 **194억원**으로 ‘18년 **185억원** 대비 **4.9%(9억원) 증가**

< 2019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인 건 비	37,606	40,443	2,837	7.5
기 본 경 비	18,518	19,431	913	4.9

Ⅳ. 사업비

□ ‘19년 사업비는 **338억원**으로 ‘18년 **337억원** 대비 **0.1%(0.5억원) 증가**

○ ‘18년 대비 정보화 추진은 7억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는 10억원 증가

○ 업무지원비, 시설관리 및 개선,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은 ‘18년과 동액

○ ‘18년 대비 국정운영관리는 17억원 감소

< 2019년 사업비 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총 계	33,744	33,795	51	0.1
·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
· 국정운영관리	6,158	4,491	△1,667	△27.1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 정보화 추진	5,680	6,378	698	12.3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1,496	1,020	214.3

1. 업무지원비 (계속)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
· 특수활동비(230)	9,650	9,650	-	-
· 업무추진비(240)	5,657	5,657	-	-
· 직무수행경비(250)	1,085	1,085	-	-

① 특수활동비 : ('18예산) 9,650 → ('19예산) 9,650백만원

○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과 동액

② 업무추진비 : ('18예산) 5,657 → ('19예산) 5,657백만원

○ 각 부서별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과 동액

③ 직무수행경비 : ('18예산) 1,085 → ('19예산) 1,085백만원

○ 인사검증, 대통령 순시현장 사전답사, 민심동향 파악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과 동액

2. 국정운영관리 (계속)

□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국정운영관리	6,158	4,491	△1,667	△27.1
· 운영비(210)	1,379	1,336	△43	△3.1
· 업무추진비(240)	502	502	-	-
· 연구용역비(260)	2,788	2,653	△135	△4.8
· 유형자산(430)	1,489	-	△1,489	순감

① 운영비 : ('18예산) 1,379 → ('19예산) 1,336백만원

○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130백만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츠 제작(150백만원),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91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27백만원), 대통령 메시지 운영(80백만원) 등 '18년 대비 △43백만원 감소

② 업무추진비 : ('18예산) 502 → ('19예산) 502백만원

○ 주요 정책현안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여론 파악 등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18년과 동액

③ 연구용역비 : ('18예산) 2,788 → ('19예산) 2,653백만원

○ 여론조사(1,794백만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츠 제작(528백만원), 정책과제 연구용역(300백만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18년 대비 △135백만원 감소

④ 유형자산(자산취득비) : ('18예산) 1,489 → ('19예산) -

○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라 '19년에는 미반영

3. 시설관리 및 개선 (계속)

□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	-
· 운영비(210)	2,690	2,700	10	0.4
· 건설비(420)	2,092	2,082	△10	△0.5

① 운영비 : ('18예산) 2,690 → ('19예산) 2,700백만원

○ 청와대 내 시설·기계·전기·통신설비 등의 유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 대비 10백만원 증가

② 건설비 : ('18예산) 2,092 → ('19예산) 2,082백만원

○ 본관, 여민관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 대비 △10백만원 감소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계속)

□ 청와대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 및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운영비(210)	227	227	-	-
・업무추진비(240)	29	29	-	-

① 운영비 : ('18예산) 227 → ('19예산) 227백만원

○ 직원 등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과 동액

② 업무추진비 : ('18예산) 29 → ('19예산) 29백만원

○ 직원 등의 교육 준비 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18년과 동액

5. 정보화 추진 (계속)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정보화 추진	5,680	6,378	698	12.3
· 운영비(210)	3,043	3,243	200	6.6
· 연구용역비(260)	1,078	840	△238	△22.1
· 유형자산(430)	1,559	2,295	736	47.2

① 운영비 : ('18예산) 3,043 → ('19예산) 3,243백만원

○ 전용회선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 대비 200백만원 증가

② 연구용역비 : ('18예산) 1,078 → ('19예산) 840백만원

○ 전산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 대비 △238백만원 감소

③ 유형자산 : ('18예산) 1,559 → ('19예산) 2,295백만원

○ 전산 관련 노후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 대비 736백만원 증가

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계속)

□ 위기관리센터(상황실)내 정보망 유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1,496	1,020	214.3
• 운영비(210)	270	312	42	15.6
• 업무추진비(240)	166	166	-	-
• 연구용역비(260)	40	40	-	-
• 건설비(420)	-	570	570	순증
• 유형자산(430)	-	408	408	순증

① 운영비 : ('18예산) 270 → ('19예산) 312백만원

○ 상황실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용역 비용으로 '18년 대비 42백만원 증액

② 업무추진비 : ('18예산) 166 → ('19예산) 166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8년과 동액

③ 연구용역비 : (‘18예산) 40 → (‘19예산) 40백만원

○ 국가안보 관련 정책연구비로 ‘18년과 동액

④ 건설비 : (‘18예산) - → (‘19예산) 570백만원

○ 비상대비시설 개보수비 570백만원

⑤ 유형자산 : (‘18예산) - → (‘19예산) 408백만원

○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등 408백만원

2020년도 예산안 개요

2019. 9.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목　　차 -

Ⅰ. 일반 현황

Ⅱ.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Ⅲ. 인건비 및 기본경비

Ⅳ. 사업비

1. 업무지원비

2. 국정운영관리

3. 시설관리 및 개선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 정보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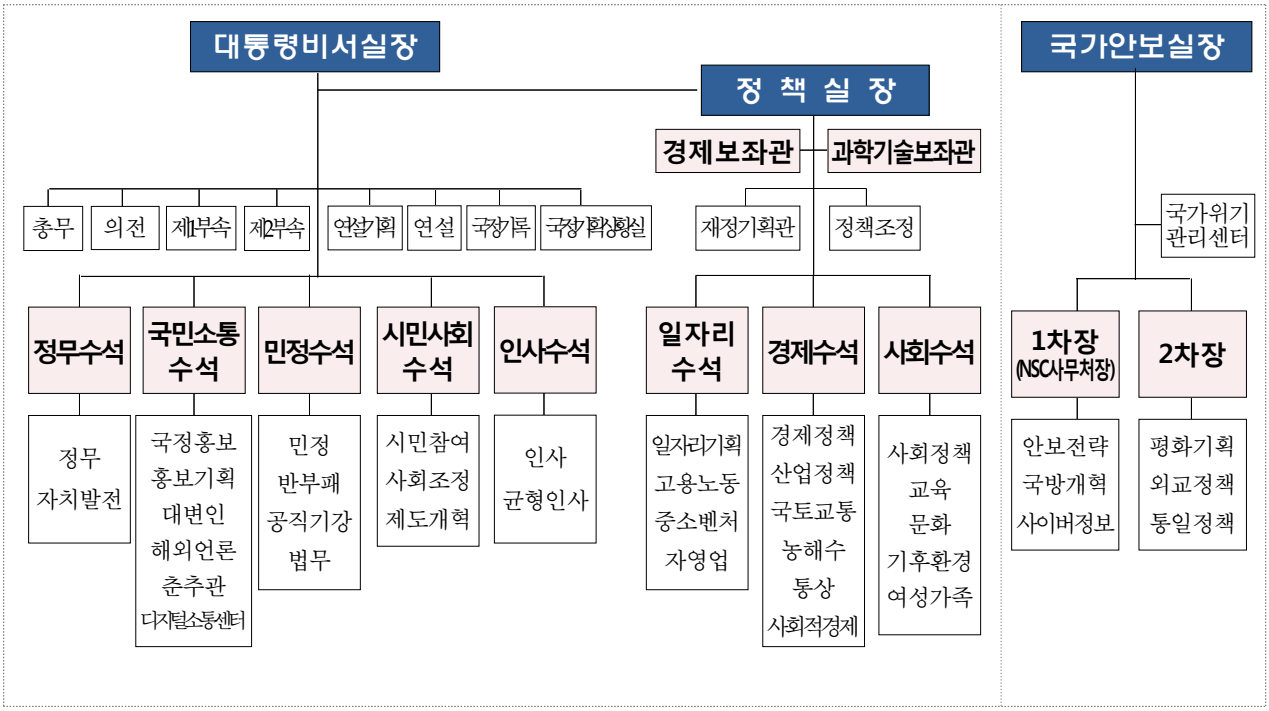
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Ⅰ. 일반현황

□ 조 직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8수석, 2차장, 2보좌관으로 구성



□ 인원(정원) 현황

총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행 정 관	행정요원
490	15	95	218	162

Ⅱ. 2020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1. 편성 기본방향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하되, 기관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

2. 세입 예산 총괄표

□ ‘20년 세입 예산안은 243백만원으로 ‘19년 세입 예산 94백만원 대비 158.5%(149백만원) 증가

< 2020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 감		비 고
			(B-A)	%	
총 계	94	243	149	158.5	
건물대여료	53	202	149	281.1	경내 입점업체 (은행, 카페, 매점 등) 임대료
기타 경상이전수입	21	21	-	-	과년도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20	20	-	-	임대건물 전기료·상하수도료,전산소모품 재활용 매각대 등

3. 세출 예산안 총괄표

□ ‘20년 세출 예산안은 991억원으로 ‘19년 세출 예산 937억원 대비 5.8%(54억원) 증가

○ 인건비는 ‘19년 대비 4.0%(16억원) 증가, 기본경비는 ’19년 대비 3.9%(8억원) 증가

○ 사업비는 ‘19년 대비 8.9%(30억원) 증가

< 2020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93,669	99,063	5,394	5.8
인 건 비	40,443	42,066	1,623	4.0
기 본 경 비	19,431	20,197	766	3.9
사 업 비	33,795	36,800	3,005	8.9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
·국정운영관리	4,491	4,912	421	9.4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6,593	1,811	37.9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정보화 추진	6,378	8,170	1,792	28.1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1,496	477	△1,019	△68.1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 종료사업 : 해당 없음

□ 신규사업 : 해당 없음

5.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9예산	'20예산안	증가율
합 계	15,651	19,675	25.7
· 국정운영관리	4,491	4,912	9.4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6,593	37.9
· 정보화 추진	6,378	8,170	28.1

Ⅲ. 인건비 및 기본경비

□ ‘20년 인건비는 421억원으로 ‘19년 404억원 대비 4.0%(16억원) 증가

□ ‘20년 기본경비는 202억원으로 ‘19년 194억원 대비 3.9%(8억원) 증가

< 2020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인 건 비	40,443	42,066	1,623	4.0
기 본 경 비	19,431	20,197	766	3.9

Ⅳ. 사업비

□ ‘20년 사업비는 368억원으로 ‘19년 338억원 대비 8.9%(30억원) 증가

○ ’19년 대비 국정운영관리는 4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은 18억원, 정보화 추진은 18억원 증가

○ 업무지원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은 ‘19년과 동액

○ ‘19년 대비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는 10억원 감소

< 2020년 사업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33,795**	**36,800**	**3,005**	**8.9**
·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
· 국정운영관리	4,491	4,912	421	9.4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6,593	1,811	37.9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 정보화 추진	6,378	8,170	1,792	28.1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1,496	477	△1,019	△68.1

1. 업무지원비 (계속)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
· 특수활동비(230)	9,650	9,650	-	-
· 업무추진비(240)	5,657	5,657	-	-
· 직무수행경비(250)	1,085	1,085	-	-

① 특수활동비 : ('19예산) 9,650 → ('20예산안) 9,650백만원

○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과 동액

② 업무추진비 : ('19예산) 5,657 → ('20예산안) 5,657백만원

○ 각 부서별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과 동액

③ 직무수행경비 : ('19예산) 1,085 → ('20예산안) 1,085백만원

○ 인사검증, 대통령 순시현장 사전답사, 민심동향 파악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과 동액

2. 국정운영관리 (계속)

□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 국정운영관리	4,491	4,912	421	9.4
· 운영비(210)	1,337	1,768	431	32.3
· 업무추진비(240)	502	502	-	-
· 연구용역비(260)	2,652	2,592	△60	△2.3
· 유형자산(430)	-	50	50	순증

① 운영비 : ('19예산) 1,337 → ('20예산안) 1,768백만원

○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130백만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츠 제작(150백만원),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1,33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38백만원) 등 '19년 대비 431백만원 증가

② 업무추진비 : ('19예산) 502 → ('20예산안) 502백만원

○ 주요 정책현안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여론 파악 등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19년과 동액

③ 연구용역비 : ('19예산) 2,652 → ('20예산안) 2,592백만원

○ 여론조사(1,794백만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츠 제작(528백만원), 정책과제 연구용역(240백만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19년 대비 △60백만원 감소

④ 유형자산(자산취득비) : ('19예산) - → ('20예산안) 50백만원

○ 국민소통 플랫폼 영상 기자재 50백만원

3. 시설관리 및 개선 (계속)

□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6,593	1,811	37.9
· 운영비(210)	2,700	2,711	11	0.4
· 건설비(420)	2,082	3,882	1,800	86.5

① 운영비 : ('19예산) 2,700 → ('20예산안) 2,711백만원

○ 청와대 내 시설·기계·전기·통신설비 등의 유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 대비 11백만원 증가

② 건설비 : ('19예산) 2,082→ ('20예산안) 3,882백만원

○ 본관, 여민관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 대비 1,800백만원 증가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계속)

□ 청와대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 및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	-
· 운영비(210)	227	227	-	-
· 업무추진비(240)	29	29	-	-

① 운영비 : ('19예산) 227 → ('20예산안) 227백만원

○ 직원 등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과 동액

② 업무추진비 : ('19예산) 29 → ('20예산안) 29백만원

○ 직원 등의 교육 준비 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19년과 동액

5. 정보화 추진 (계속)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 정보화 추진	6,378	8,170	1,792	28.1
· 운영비(210)	3,243	3,740	497	15.3
· 연구용역비(260)	840	910	70	8.3
· 유형자산(430)	2,295	3,520	1,225	53.4

① 운영비 : ('19예산) 3,243 → ('20예산안) 3,740백만원

○ 전용회선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 대비 497백만원 증가

② 연구용역비 : ('19예산) 840 → ('20예산안) 910백만원

○ 전산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 대비 70백만원 증가

③ 유형자산 : ('19예산) 2,295 → ('20예산안) 3,520백만원

○ 전산 관련 노후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 대비 1,225백만원 증가

6.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계속)

□ 위기관리센터(상황실)내 정보망 유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1,496	477	△1,019	△68.1
• 운영비(210)	312	271	△41	△13.1
• 업무추진비(240)	166	166	-	-
• 연구용역비(260)	40	40	-	-
• 건설비(420)	570	-	△570	순감
• 유형자산(430)	408	-	△408	순감

① 운영비 : ('19예산) 312 → ('20예산안) 271백만원

○ 상황실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용역 비용으로 '19년 대비 △41백만원 감소

② 업무추진비 : ('19예산) 166 → ('20예산안) 166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9년과 동액

③ 연구용역비 : (‘19예산) 40 → (‘20예산안) 40백만원

○ 국가안보 관련 정책연구비로 ‘19년과 동액

④ 건설비 : (‘19예산) 570 → (‘20예산안) -

○ 비상대비시설 개보수 완료

⑤ 유형자산 : (‘19예산) 408 → (‘20예산안) -

○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완료

국민청원 답변 현황 (2019.10.20. 기준)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2017.9.25	조국 민정수석 + 김수현 사회수석	- 청소년보호법 폐지 어려움 - 청소년 범죄 예방 필요, 보호처분 활성화, 실질화로 학생들 사회복귀 도와야	<해당없음> - 조치불가
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2017.11.26	조국 민정수석	-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 여가부 건가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전문상담 실시 -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진행 중,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19.4.11.)	<조치완료>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완료 -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6.21. 검찰, 헌재결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기소 유예 방침 밝힘 <입법사항>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19.4.11.) ※ 법 개정 시한 : '20.12.31. - 법안 작성을 위해 사회 각 계 의견 수렴 중 ※ 관계법령 : 형법, 모자보건법 관계부처 :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3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2017.12.6	조국 민정수석	- 일률적 감경금지 조항 삭제는 곤란 - 2011년 만취상태 성범죄자 양형기준 강화, 의도적인 경우 형의 가중요인으로 적용 - 현행법 원칙 준수, '음주'를 심신미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 국회 몫으로 논의 기대	<조치완료> <입법사항> - 형법 개정('18.12.18.)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12.18.) ※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 상향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4	조두순 출소반대	2017 .12.6	조국 민정수석	- 현행법상 재심 불가	<해당없음> - 조치불가
5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2017 .11.1 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 소방헬기 권역외상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 다듬을 계획. - 중증외상센터 의료수가 적정 수준 인상, 의사 인건비 지원액 상향 - 외과 수련의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 거쳐가도록 하겠음. - 권역외상센터 의료진3교대에서 5교대 편성 기준 마련 - 권역외상센터 점검 지원 전담인력 보강으로 정부 관리감독 강화	< 조치완료 > - **닥터헬기** 이송 환자에 대한 **수가 적용**('18.7) - 경기도(아주대병원)에서 **24시간 운항 시범사업** 실시 예정('19.8)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19.7)하여 외상환자 이송에 정부부처 헬기 효과적 활용 - 외상 수가 신설 등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개선***, 고시 개정('18.7) * 외상환자 관리료·전문의 진찰료 신설, 수술·전담전문의 가산 등 - **의사** 인건비 지원 20% 확대(1.2→1.44억원) 및 **중환자실 간호사 인건비** 신규지원('18.1)* * 전담전문의(179→184명) 및 중환자실 간호사(457→621명) 증원('17.12.대비 '19.4.) - 비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8명) **외상센터**(3개소)로 **파견·수련**('18.9~'19.2) - 365일 24시간 외상환자 내원 대비 대기를 위해 외상팀 3개팀 이상 구성 지침 -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 인력 증원('18, 5명→10명) - 2018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3회 실시** - 2019년 권역외상센터 **평가**('18.10.~'19.9) **질 지표* 강화**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 내원~대면진료 평균 소요시간·전담전문의 등 의료인력 교육 적정성 지표 신설, 부적절 전원사례 평가기준 강화 등
6-1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2018.1.25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 9.4 정부와 여당, 안전우려 낮은 제품에 대해 인증 면제하도록 개정안 발의. - 12.29 개정안 국회 통과, 12.30 국무회의 공포	<조치완료> - 9.4 정부와 여당, 안전우려 낮은 제품에 대해 인증 면제하도록 개정안 발의 - 12.29 개정안 국회 통과, 12.30 국무회의 공포
6-2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2018.1.25			
7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2018.2.1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강화 조치 진행 - 가상통화 취급업소 불공정, 불투명 행위 정부 엄정 대응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 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논의 - 가상통화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블록체인 기술 포함 혁신 지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예정	<조치완료> - 가상통화 실명확인서비스 시행('18.1월~) - 가상통화 취급업소 정보보안인증('18.12월)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18.6월) - 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 가상통화 국제논의 참여(FATF, IOSCO 등) <진행중> - 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논의중 <입법사항> -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특금법 개정 추진
8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2018.2.20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법관이 징계는 사업부 독립적 권한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9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2018.2.27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통합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부 주관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내 실시(2011년 이후 7년만) -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 제정, 교육과정 개편 등 검토 -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 보급(교육부 2018 예산 12억 활용) - 2019 교원연수중점추진방향 결정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과정 개설 강력 권장	<조치완료> □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범교과 학습주제(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초·중·고 각1종) 개발 및 보급 완료('19.2) * 성 평등 지수, 성 역할 고정관념 깨기, 양성 평등한 진로 선택, 일·가정 양립 문화와 양성평등 등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계도 개발 및 보급 완료('19.2) ○ 학교·교육청에서 활용 가능한 여가부·인권위 원격연수 프로그램(인권·양성평등 15종) 안내 완료('18.5.) <진행중> □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 ○ 초중고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방안 연구('18.10~12), 초중고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설문) 및 정책연구('19.5~12) <'19년 초·중·고 인권교육 설문조사 계획(안)> o 규모 : 초/중/고 각각 100개교 o 대상 : 초6/중3/고2 학생, 교사 o 시기 : 9월 초 (개학 직후) o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교육부·여가부·인권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18.3~)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법 제정 등 후속조치 검토('20년~)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진행중> □ 교원 양성과정 내 교육 강화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반영 · 배포('19.2월)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수립 시 인권·양성평등 교육 포함 권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배포('19.하)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 필수요건으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추진(~'19.하) <진행중> □ 인권교육 관련 교원 연수 강화 ○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18.10.) * 다양한 인권 영역, 인권실태 정보제공 및 학생 중심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법 등 포함하여 시도에 안내 ○ '인권교육'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1종 개발·중앙교육연수원 탑재 및 시도 안내('19.6.) - 17개 시·도별 교원 대상 인권교육 관련 직무연수 추진(시·도 자체 또는 교원대 연수 활용) ○ 교장자격 연수 시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운영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 통합적 인권교육 관점의 교육현장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할 '인권 현장지원단(관리자 포함)' 양성 연수 추진(19.7~8, 시도별 10명, 170명)
10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	2018 .3.2	박상기 법무부장관	- 중대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견지 -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과 동시 출동체계 구축, 신속대응 - 보호관찰인력 충원 계획 수립 중, 부족인력 체계적 충원위해 최선 노력 - 절단 어려운 강도 세 배 전자발찌 개발, 하반기부터 부착 예정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11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8 .3.6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	-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만들어 스포츠비리에 대한 정책 대안 만들 것 - 여자팀추월 사태 진상조사 벌이겠다 - 국가대표 선발 관리문제도 함께 살피겠다	<조치완료> - 2019.1.25. 체육계 비리전담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12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2018 .3.6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	- 조직위 위원에 대한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 권한	<해당없음> - 조치불가
1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2018 .3.8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 - 입법부 월급 조정은 현행법상 입법부 스스로의 몫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14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018 .3.8	정혜승 디지털소통 센터장	- 청원 접수 다음날인 2.19 네이버, 경찰에 수사의뢰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 부적절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15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2018 .3.14	이철성 경찰청장	-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 부여 조항 및 제재조항 신설 적극검토(도로교통법 27조, 156조)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속30km 속도제한 권한 부여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 형사 처벌 조항 신설 -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간 긴말하게 협의하여 2018년내 법개정 목표, 내년(2019) 시행 노력	<입법사항>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16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2018 .3.23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일베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 신중하게 지켜봐야 - 불법정보는 무관용원칙하에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 표현의 자유 중요하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해당없음> - 조치 불가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17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2018.3.23	김형연 법무비서관	-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 표현의 자유 보장, 다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음. - 정정보도나 삭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가능 -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	<해당없음> - 조치 불가
18	경제민주화	2018.4.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국민 참여 없이는 경제민주화 달성 어려워, 경제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야 -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경제민주화 불가능 - 이번에도 경제개혁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반드시 성공해야	<해당없음> - 응원 청원
19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2018.4.13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2010. 4.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 후 이루어진 24건의 강제추행은 처벌 가능, 이에 따라 3. 23. 구속.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곧 구속기소될 예정 - 여성가족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 구성해 대책 마련	<조치완료> - 검찰 보완주사 후 구속 기소, 징역 7년 구형 (2019.4.9. 2심 징역 7년 선고)
20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2018.4.13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4. 2. 법무부 소속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 - 검찰 진상조사단이 사전 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됨	<조치완료> - 2019.5.20. 검찰 과거사위 심의결과 발표 : 장씨가 문건에 기재한 피해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장자연 리스트 실물 확인 불가, 진상규명 불가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	: 검찰 과거사위,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추진, 검찰공무원간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 검찰에 권고
21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요	2018.4.13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 개발,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할 예정 -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	<조치완료> - 진상조사TF(3.28~5.8)를 통해 재수사 가능성 및 성폭력 존부, 수사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재수사 불가('11.11. 공소시효 완성) · 강간·추행 여부는 기록폐기 등으로 한계 · 수사 적정성 관련 제도개선(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 정신질환 의심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제도 도입,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조성 등)
22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2018.4.24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 양육비대지급제, 2004년이후 꾸준히 관련법 발의되었으나 통과 못됨 - 2월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시작, 11월 결과 나오면 실효성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계획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 대폭 늘리는 것 협의 중 - 한부모 자립 대책 준비 중, 국회와 지속 협의	<조치완료>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만 14세 미만→18세 미만) 및 금액 인상(월 13만원→20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19.4.1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신규 시행, 주거환경 개선, 청소년 한부모 위탁 교육기관 확대 등 자립 지원 강화
23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2018.5.2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대통령 헌법 개정안지지 진심으로 감사 - 개헌 약속 지키지 못한 것 송구 -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다면 헌법 개정 가능한 일, 지지와 성원 부탁	<해당없음> - 응원 청원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24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2018 .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중재안 철회 - 향후 신축 지상공원화 아파트 택배차량 지하 출입가능하도록 지하층고 높이는 방향 제도 개선 예정	<조치완료> -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중재안 철회
25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2018 .5.8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 GMO표시제 도입 - 완전표시제 도입시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소비자단체 의견 경청, 전문성과 객관성 보장된 협의체 구성하도록 하겠다 -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 마련 목표로 추진 - 연구과정에 청원에 참여한 소비자단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진행중>**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GMO 표시제 관련 직접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 등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대표 등 17인* * 위원장(1인), 소비자·시민·생산자·학부모단체(8인), 식품업계(8인) : **(운영)** 총 9회('18.12.12~'19.6, 1~2회/월)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19.4.18) 및 관계부처 회의('19.5.2, '19.5.17) **- 향후계획**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지속 운영 · GMO 표시개선 권고(안) 도출('19.12) : GMO 표시기준 개선(안) 마련('20.3) · GMO 표시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후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표시 개선(안) 마련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26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2018 .5.16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 6월경 한중환경협력센터 개소 예정, 한중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 추진 계획 - 5년간 한중일 3국 공동진행 미세먼지 연구결과도 6월중 매듭지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 - 외교적,정책적 수단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 줄이는 노력기울이며,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 규명 등 장기적으로 동북아다자협약 추진 계획 - 국내 미세먼지 대책 함께가야.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목표	<진행중> - 2019.4.29.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위원장 반기문) - 한중일 다자간 공조 강화 통한 국제 협력 방안 추진
27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2018 .5.21	이철성 경찰청장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피고소인 2명 출국금지, 스튜디오 자택 등 압수수색 진행, 22일 소환 조사 예정,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DNA 필터링 기술 내년 적용위해 개발 박차 - 불법촬영물 인터넷 유포 차단 조치 지속, 해외서버 사이트 대응 대폭 강화 - 3월 전국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신설 -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메뉴얼'개발, 조사 과정에서 2차피해 발생시 엄중 책임 물을 것 -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시 등록제 실시 등 관련해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이 함께 연구용역 진행 중 -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 개정, 앞으로 최소 6개 법률 제.개정	<조치완료> - 전국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신설('18.3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18.4.30) - 여상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시작, 불법촬영 일제 점검,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1천 여명 검거('18.5월) - 경찰,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서버업체 신상 정보 제공 방안 협의.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곳 단속('18.11월) - 변형카메라 등록제 관련 공동 연구 추진 완료('18.5월) 및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진선미의원, '18.8월) 및 과방위 상정('18.11월)
28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29	합정 ****스튜디오 불법 누드 촬영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필요	- 불법음란물 특징정보 DB(DNA값) 구축 완료('18.12월) * 불법촬영물 1,487건 등 불법영상물 DB 필터링 사업자 보급실시('19.1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8개 입법과제 중 6개 법안* 개정·시행 * 성폭력방지법('18.9.14.), 성폭력처벌법('18.12.18.), 정보통신망법('19.3.25.), 범죄수익은닉규제법('19.4.23.), 공중위생관리법('19.6.12.), 전기통신사업법('19.6.25.) <입법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8개 입법과제 중 2개 법안* 국회 계류 * 변형카메라관리법안(과방위),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행안위)
30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2018.5.25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조 대위 위증 의혹 관련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 - 향후 특검 자료 확보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방침 정하게 될 것	- 답변 이후 진전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31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2018.5.31	최종구 금융위원장	- 개인투자자 500명에게 4억5천만원 보상 완료 - 삼성증권과 임직원 대상 금감원 조사 마무리 단계 - 주식매도 직원21명 검찰 수사 진행 중 -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이도록 개선 계획	<조치완료> -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완료 ·(삼성증권) 업무 일부정지 6월,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임직원) 과징금 및 정직 등 제재조치 부과 * 법원, 임직원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18.5월)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 무차입공매도 위반자 제재 강화 방침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금감원, 거래소 상시전담 조사 체계 구축 <입법사항>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제재 강화(10년 이하 징역,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 과태료 강화)
32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2018.6.5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실시 -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중, 7월 발표 예정	<조치완료> - 2018.7.26.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 결과발표 : 국회의원 38명,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비 부당지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 권익위는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 최종확인을 거쳐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제 조치 권고 - 2018.8.14. 국회,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 예정
33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2018.6.11	민갑룡 경찰청 차장	- 실제 사건 아니라, 중국 제작 유포된 아동 음란물 캡쳐해 게신한 것으로 밝혀짐 - 경찰의 미진한 초기 대응 사과, 재발 방지 노력	<해당없음> - 허위 청원으로 답변 및 조치 불가
34	광주 택시탑승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2018.6.11	민갑룡 경찰청 차장	- 5.8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TF 구성, 법제도적 개선 추진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었고, CCTV 정밀분석, 관련자 진술 등 종합 판단결과 살인미수 아닌 특수중상해 적용해 기소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35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2018.6.14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언론 자유 보호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음 - 2017.3 방통위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감소 조건으로 재승인, 현재 두 건에 대해 심의 진행 중, 방통위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점검 중, - 조건 미이행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혹은 청문 등 절차 거쳐 승인 취소	<해당없음> - 조치 불가
36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2018.6.19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 한나네보호소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벗어나게 되어 곧 사용중지 명령 취소될 것. -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개정 위해 노력 - <동물보호법> 개정될때까지 한나네보호소가 더 이상 동물수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환경을 갖춰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음	<조치완료> -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벗어나 사용중지 명령 취소됨
37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2018.7.11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 전역 후 6개월까지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 지원, 전역 후(11.24') 국가보훈처 치료비 지원 지속 -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 진행 중. 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지원, 보상비 지속될 것	<조치완료> - 2018.9.7. 이찬호 병장.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 순직 군인들도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추서됨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38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합니다.	2018.7.13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일	<해당없음> - 조치 불가
39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7.19	박형철 반부패서관	- 무고죄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 제정은 부적절 - 억울한 사람 없도록 수사를 면밀하게 하는 것이 타당, -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있는 양형기준 개선 추진	<진행중> - '18.12.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성폭력 무고 사건 통계 정형화' 추진 · 실무협의회(7회), 전체 무고 사건 및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및 관계 분석 · '19.7.19. 대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포럼
40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8.7.24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개헌안 국회 통과 무산, 북미정상회담 중지 등 큰 속보가 전해지던 날 시작된 청원, 대통령님 힘내시라는 청원 -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정부, 국민의 뜻 받들겠다	<해당없음> - 응원 청원
42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개정	2018.8.1	박상기 법무부장관	- 재신청자, 불법체류 등 난민제도 악용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 미회부 적극 검토 - 불법행위 조장 난민브로커 처벌조항 명문화 - 난민 심사 인력 늘리는 방안 추진 - 난민심판원 신설, 심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 난민지정될 경우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우리 법질서 어길 경우 난민인정 취소나 철회 방안 검토	<조치완료> - 허위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 신청자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등 신원검증 강화 - 2018.12.14. 난민심사 대상자 74명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입법사항> - 난민법 개정안(정부안) 검토 중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 난민인정 후 중대 범죄 저지를 경우 본국 강제송환 난민법에 명문화 - 심사결정 후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사후 관리 시스템 도입	
43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2018.8.3	정혜승 국민소통센터장	-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최선을 다하고 있음	<조치완료> - 2018. 10. 2 보석으로 석방 - 오는 8.6과 8.27 재판 예정 - 필리핀 당국 고위관계자 면담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지속적으로 요청 - 가족에 대한 면담 및 법률자문 지원 - 대사관 법률자문관이 재판에 매회 참석하여 진행사항 파악 및 법률자문 중
44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2018.8.8	정혜승 국민소통센터장	-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 정부 개입 부적절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피해구제 가능	<해당없음> - 조치 불가
45	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원	2018.8.10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검토 - 개고기 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 발의되어 있는만큼 관련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	<입법사항> -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46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원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47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2018.8.2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형사처벌 않는 연령기준 14세->13세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 -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 노력도 병행 - 소년보호관찰관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 노력	<입법사항> -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진행 중 ※ 관계법령 : 소년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48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49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018.9.12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 사건 가해자 보육교사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사실 없음 - 원장이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주의감독 의무 소홀히 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 복지부가 실시하는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 마련 예정	<진행중> -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현황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 심사 중 (안 제46조) -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 마련 현황 ⇒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채용 확대,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중 * 개편안 세부방안 구체화 위한 시범사업 실시 (5~8월 집중모니터링, ~'20.2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20.3월~) - 학대가정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제공 추진 중 * ('19) 73개소 → ('22) 93개소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50	디지털 성범죄 산업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합니다.	2018.9.27	민갑룡 경찰청장	- 방통위,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삭제와 접속 차단의무 부과 법안 발의 - 방심위, 전자심의제도 도입 추진 - 향후 특별수사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에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	<진행중> - 8.1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 설치 - 536개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 집중수사 진행, 9월26일까지 1012명 검거, 63명 구속 - 해외음란사이트 51곳 단속, 35명 검거, 14명 구속 - 웹하드업체 30개중 17개 압수수색, 대표 5명 검거, 해비업로도 82명 검거, 5명 구속
51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곰탕집 성추행 사건)	10.12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재판중인 사안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 언급 부적절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5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8.10.21	박상기 법무부장관	-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 공감 - 윤창호법 등 관련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상습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 체포 후 구속수사, 최고형 구형 및 가석방 제한 방침 -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협박 시 법정최고형 구형, 법원도 최근 최고형 선고하는 등 변화 움직임	<조치완료> <입법사항> - '윤창호'법 입법 완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018.12.18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2019.6월 시행)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53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			-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법> 개정안, 유포 수익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등 개정 위해 노력	<조치완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18.12.18.) * 영리목적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 등 - 범죄수익환수법 개정·시행('19.4.23.)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대상 중대범죄에 추가
54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 소년범 처벌 강화	2018.11.16	김형연 법무비서관	- 소년법 개정 등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 요구한 세 번째 청원, 현행법과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 - 지난 8월에도 청원이 계기가 되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부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에서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입법사항> -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진행 중 ※ 관계법령 : 소년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55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2018.11.16	김형연 법무비서관	- 민사소송 시 피해자 개인정보가 판결문에 담긴 채 가해자에게 전달... 현재 관련 법 개정안 계류 중	<입법사항> -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진행 중 ※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56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2018.12.07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가정폭력은 심각한'범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 가정폭력 대책, 가장 강력한 변화는 실질적인 가해자 즉시 격리 방법이 마련 된 것 - 현행범 체포, 유치장 유치,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 대신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강화	<조치완료> - 11월 27일 정부, 가정폭력 대책 발표 -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영역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57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2018.12.11	김형연 법무비서관	- 11.29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형- 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 통과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	<조치완료> - 형법 개정('18.12.18.) (김성수법)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 <진행중> - 심신미약 판단사유 구체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대검찰청, 19.4.~19.10.)
58	왜소한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당해 숨졌습니다.				
59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60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61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2018.12.1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경찰수사 진행 중..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불가항력 의료사고'지원 및 손해배상 대불 가능 -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환자안전관리체계 체계적 구축 - - 2010년 치료 중 숨진 9살 고 정종현군이 남긴 과제, 환자의 건강권과 환전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법사항> - <환자안전법 개정안> 입법필요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환자안전활동 지원 근거 마련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19.4.4.) ※ 비영리민간단체의 환자안전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기재부 반대의견 존재 <진행중> -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자료 개발 중('18~'20) -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공공의료원 환자안전 실태파악) 진행 중('19.6~12)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62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2018.12.18	남요원 문화비서관	- 이스트라이트 폭행 경찰수사 진행 중..'청소년 인격권 보장'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새로 마련, 대표·임직원 청소년 (성)폭력 유죄 시 즉시 등록취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입법사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박인숙, '19.1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포함 <조치완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청소년부속합의서 제정('19.3월) -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19.9월)
63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작년 12월 61만명에 이어 26만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국민의 뜻이 심신감경 제도를 바꾸고 있음	<해당없음> - 조치불가
64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 소년법 개정 청원 벌써 네 번째, 가혹한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사회를 바꾸는 동력	<입법사항> -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진행 중 ※ 관계법령 : 소년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65	부하 여군 강간한 해군 간부 처벌			- 부하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사건은 대법원 판단 기다려야.. 피해자 보호방식 살펴볼 계기	<해당없음> 삼권분립 원칙 위배
66	사랑하는 23살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18.12.26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춘천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 청원, 2010년 이후 신상공개 18건..합당한 처벌 기대	<해당없음>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67	경찰은 일베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 경찰 10여명 수사중...관련 법 강화되어 동의 없이 유포시 강력 처벌	<조치완료> - 18. 11. 19. 신고 접수 후 일베사이트 게시자 13명 인적사항 특정 및 검거·조사한 결과 7명에 대해서는 기소,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68	이수역 폭행사건			- 약 40일간 여경 7명 등 19명 전담팀 수사, 남성 3명 여성 2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조치완료> - 18. 11. 13. 사건발생 이후 경찰은 피의자 5명, 참고인, CCTV, 휴대폰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수사를 한 결과 남성 3명, 여성 2명 모두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으며, 이후 검찰은 수사결과 19. 7. 30. 남녀 각 1명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였음
69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2019.1.7	민갑룡 경찰청장	- 과속차량 돌진으로 억울한 사고...가해자 구속송치..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데 과속사고는 증가 -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지속	<조치완료>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 과로, 과적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 제한,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
70	국회의원 셀프인상 즉각 중단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각종 국회의원 수당은 2019년 전년 대비 1.8% 증액.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답 한계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71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72	중국 알루미늄 공장 막아주세요	2019.1.18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광양알루미늄, 환경오염 유발 공정 없어 환경오염 물질 거의 발생 안해...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 - 언론사 팩트체크 등 통해 충분한 설명 이뤄져 - 광양알루미늄, 생산량 90% 수출계획...수요처 달라 국내시장 잠식 우려 수준 아니야	<해당없음> - 조치불가
73	도살장 망치로 머리 맞던 개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며 죽었습니다. 개도살을 멈추게해주세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개 망치 도살 영상 가짜뉴스로 밝혀짐. 답변불가	<해당없음> - 허위 청원으로 답변 및 조치 불요
74	위탁모에게 맞아죽은 15개월 딸 얘기좀 들어주세요	2019.1.30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아동권리보장원 출범으로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확대 방침 - 정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가사서비스 제공기관'직접 인증 - 아동학대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시키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진행 중> - 기존 아동관련 업무 위탁 기관(입양, 학대 등)을 통합하여 아동권리보장원('19.7.16)으로 출범, 아동관리 통합서비스 실시 예정 -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시군구 담당으로 전환하여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추진 *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5.23) - 아동학대 대책 개선을 위한 월간 포럼 개최(복지부, '19.6~)
75	카풀반대	2019.1.3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출범... 본격 대화 시작 큰 의미 - 사회적 대타협기구 첫 합의안...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 먼저 논의키로 -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진행중> - 택시-카풀 대타협(3.7)을 통해 정부·택시·카카오간 택시월급제 시행 및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 합의 - 카풀시간 명확화와 택시월급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계류(3.27)중인 상황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법 통과 이전이라도 7월 중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발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활성화 추진
76	조재범 코치 강력처벌해주세요	2019.2.13	양현미 문화비서관	- 조재범 전 코치, 상습폭행件 항소심 1년 6개월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件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국가인권위원회주도'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오는 25일 공식발족,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및 독립적 상시 국가 감시 체계 마련 계획 - 민간 주도'스포츠혁신위원회'... 지난 11일 첫 회의, 공론화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 도출, 이행 권고 및 실적 점검 계획 - 스포츠 윤리센터'설립 및 성폭력 범죄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 처벌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 통과 위해 노력	<입법사항> - 독립적 상시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등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논의('미투' 관련 11개 법안 통합 문체위 대안, 법사위 계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논의(법사위 계류) 등 추진 중 <조치완료>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 개정(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완료('19.1월) - 진천선수촌 여성관리자 배치('19.1월) 및 인권상담센터 설치 완료('19.2월), 사각지대 CCTV 및 비상벨 설치('19.7월) -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19.2월), 개혁과제 권고 완료(총 7차, '19.5~8월) - 스포츠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확대 프로그램 개발 완료('19.8월) <진행중>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조사단' 발족('19.2월) 및 운영 중(~'20.2월) - 권고 이행점검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계속(~'20.1월)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77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2019.2.2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음	<해당없음> - 조치 불요
78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2019.2.22	조국 민정수석	-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 -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함. 국회가 답할 차례	<입법사항> - 국회(사개특위→법사위)에서 논의 진행 중
79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판사 사퇴	2019.3.15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는 내용. 답변 한계 양해	<해당없음> - 삼권분립 원칙 위배
80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81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82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 촉구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83	(버닝썬) 관련 경찰 뇌물 조사	2019.3.18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수사당국과 관련 부처는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진행중> - 경찰청, 경찰유착방지 대책 준비 중(7월 중 발표 예정)
84	여성대상 약물범죄 클럽(버닝썬), 유흥업소 경찰간의 유착에 대한 수사 및 처벌				
85	고 장자연씨 증언한 윤지오씨 신변보호 요청				<조치완료> - 2019.5.20. 검찰 과거사위 심의결과 발표 : 장씨가 문건에 기재한 피해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장자연 리스트 실물 확인 불가, 진상규명 불가 : 검찰 과거사위,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추진, 검찰공무원간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 검찰에 권고
86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87	심신미약 피의자에 죽게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2019.3.20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해당없음>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88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2019 .4.1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 윤지오씨 거주지 관할 동작경찰서 신변보호 요청 접수 즉시 긴급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 △스마트워치 제공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 결정하고 시행	<조치완료> -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하여 지급 - 증인 새로운 숙소로 이주 조치 - '신변보호 특별팀' 구성. 증인 24시간 동행, 밀착 보호 조치 - 스마트워치 전체(2,050대) 긴급점검 실시
89	비리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직무정지 시켜주세요	2019 .4.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이광호 교육비서관	- 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 간 학교장 임기와 관련 소송 진행 중. 1, 2심 교육청 승소, 현재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 -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정조치 해나갈 것	<조치완료> ○ 대법원 판결('19.4.25. 2019두31662)에 따라 해당 학교장 당연퇴직 완료, 후임 교장 임용 ※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 학생인권 보장 촉구 권고(5.20)→학교측 이행계획 제출(6.12)→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6.19) 및 조치결과 보고일(~7.20)까지 보완 요구
90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2019 .4.19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	<해당없음> - 삼권 분립 원칙 위배
91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2019 .4.24	정문호 소방청장 +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 꼭 필요 - 고성·속초 산불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소방청독립' 그리고 '출동지침 개정'	<입법사항> - 관련법 국회 계류 중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92	정부아이돌보미 영유아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부탁	2019 .4.26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 여성가족부 김희경 차관 브리핑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내용으로 갈음	<조치완료>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19.4월) -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행사 개최(5.11) -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5.27.) 면접 표준 평가항목 마련(5.21.),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대처 요령 안내(6.11.) 등 세부과제 완료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 신고창구(4.8~6.30)" 운영 및 결과 발표 * 총 86건 접수(아동학대 신고 6건, 제도개선건의 66건, 단순문의 등 기타 14건) <진행 중> - 교육교재 개편,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 과제 추진 중 <입법사항> -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강화 등 아동학대 방지 관련 의원입법안 총 13건 발의(10월 기준)
93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2019 .5.3	정혜승 디지털소통 센터장	- 경찰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 - 3.29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 - 검찰,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 수사 진행 중	<조치완료>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불기소, 1억 7천만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94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5.17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 특별법 제정...국회에서 논의해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여야 특위구성 추진, 특별법안 발의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6월 중 본감사 착수 계획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출범... 부지 안전 복구 및 관리 구체적 방안 마련 계획 - 총 5,848억 원 지원 확정...추경안 1,131억 원 추가로 담겨, 추경안 통과 시 총 7천 억 규모 지원	<입법사항> - 현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 * 김정재 의원 2건('19.4.1), 하태경 의원('19.5.10), 홍의락 의원('19.7.23) 등 - 한편, 지역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 <진행중> - 지역지원을 위해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 1,691억원(국회 증액 560억원) 반영 -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복구를 위한 TF*를 출범(5.8), '19.10월 현재까지 6회 회의 개최 * 구성 : 국내전문가 11, 해외전문가 3, 시민대표 3 * 추경예산 활용 심부지진계 등 설치 예정('19.12) - 산업부의 공익감사 청구('19.3.25) 등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중('19.4.25~) - 흥해 특별재생계획('18.11, 2,257억원 규모)에 따라 전파 아파트 등의 부지매입절차 진행중
95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재수사 청원	2019.5.27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 세월호 진상규명 현재진행형...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 - 세월호 특조위 고발·수사 요청 시 검찰 수사... CCTV 영상 저장장치 훼손 관련 수사 중	<진행중>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와 고발·수사 요청 시 검찰 수사 예정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96	서울대 수의대 실험중인 퇴역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오	2019.6.3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 '페브','천왕'2마리 복제 검역탐지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안 협의 중 - 3마리 복제견,'사역견'신분을 인정..."「동물보호법」위반 여부, 검찰 수사 결과 기다려봐야" -'동물복제 연구'최종 중단은'검찰 수사 결과'등 검토하여 결정..."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현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하고, 노후견 분양 후 정기적 관리 실태 점검하는 등,'사역견'복지증진 추진	<진행중> - 6.5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의 윤리성 및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예우 제고 추진」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실시 - 6.7 국민청원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와 면담을 실시하여 정부대책 설명 - 서울대, 검역본부와 복제견 2마리 이관 관련 협의(6.17, 25)를 거쳐 검역본부로 이관 추진(7월 중) - 6.27 비글구조네트워크와 2차 면담 실시 - 검역탐지견 운영 및 관리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안 검토 중 ※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사역견 장례절차는 '19.5월부터 기추진 중 - 9.16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시행(관련 법령 준수 서약서 의무 제출 등) - 동물복제 연구개발 방향 정립을 위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 수립 추진(12월)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19.10월 개정(안)마련, 관계기관 의견 조회 중)) - 사역동물 실험 요건 제한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20.3월 공포 예정)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97	연합뉴스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 전면 폐지 청원		정혜승 디지털소통 센터장	-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 - 뉴스리더사용비용 등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으로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	<입법사항> - 구독료 계약시 뉴스리더 사용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
98	김무성 의원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2019 .6.11	강기정 정무수석	- 혐오 표현과 막말 등에 대해 국회,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 적극 검토필요	<해당없음> -조치 불요
99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구			-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	<해당없음> -조치 불요
100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구				
101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합니다.	2019 .6.12	복기왕 정무비서관	-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람	<입법사항> - 국회 계류 중
102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원칙 필요합니다.	2019 .6.14	정혜승 디지털소통 센터장	- 재판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해당없음> - 삼권 분립 위배 <조치완료> - 경남지방경찰청, 6.13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5.1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10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구합니다	2019.6.28	디지털소통센터장	-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해당없음> - 삼권 분립 원칙 위배
104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	2019.7.4	디지털소통센터장	-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답변 어려움. 향후 재판결과 지켜봐야	<해당없음> - 삼권 분립 원칙 위배
105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2019.7.4	디지털소통센터장	-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 구성'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조치 완료> 7. 27. 경찰청은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 및 수사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동조치 미흡 사항 및 수사 미진 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수사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중이고 교육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중
106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9.7.4	농수산식품부 동물복지팀장	-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 허점 개선 -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	<진행중> -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20.2.28일 시행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을 상향(2년, 2천만원 →3년,3천만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12월 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 수립 T/F*를 통해 동물학대 처벌 및 범위 개선 방안,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분과위 8회 운영)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반 등 6개반, 70명(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연말까지 운영 예정
107	버닝썬 VIP 6인을 수사해주세요	2019.7.10	경찰청장	- 수사결과 미흡 국민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약물 이용 여성대상 범죄 국내외 관련 기관과 긴밀 협력 통해 발본색원 할 것”	<조치완료> - 종합대책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약물이용 여성대상 범죄 단속 중임
108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2019.7.11	디지털소통센터장	- 검찰, 황군 성폭력 혐의 재수사 진행 중 - 상장 및 장학금 지급 사유로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조회 제한됨 - 장학증서와 장학금 모두 환수, 강남경찰서 장학금 전달 주관 책임자 전보조치함 - 행후 대상자 선정시 정밀 면담 등 통해 재발 방지약속	<조치 완료> - 상장취소 및 장학금 환수는 조치 완료 -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109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9.7.12	문화비서관	-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 필요 -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 ‘차량용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 지원	<진행중> - ‘체육교습업’의 범위, 운영형태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19.12월 완료) - ‘차량용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위해 R&D 지원 절차에 따라 선정평가 후 지원 예정(‘19.11월) * 지원규모 : 27개월간 9억원 지원 <입법사항> - ‘체육교습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이정미 의원(‘19.6.27), 안민석 의원(’19.8.30) 각각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조치완료> -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체육교습업' 신설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 마련
110	아동 성폭행범을 강혐한 판사*** 파면하라	2019.8.7	디지털소통센터장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재판결과 지켜봐야 - 사법권은 독자적인 국가권력...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어 -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해당없음> - 삼권 분립 원칙 위배
111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경력 처벌해주세요	2019.8.30	농수산식품부 동물복지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7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 마련 및 정책과제 발표...조금씩 개선 이뤄지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 빨리 이뤄져야 - 현장 지도·단속 등 동물보호 전반 업무 협조 강화 필요...농식품부와 경찰청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 모색 계획	<진행중> -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20.2.28일 시행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을 상향(2년, 2천만원 →3년,3천만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12월 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 수립 T/F*를 통해 동물학대 처벌 및 범위 개선 방안,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분과위 8회 운영)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반 등 6개반, 70명(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연말까지 운영 예정 <입법 사항> - 경찰청과 농식품부 협의체 운영은 진행 중임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112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2019.9.6	디지털소통센터장	-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 - 판매사이트를 점검·단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 -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검토 -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 - 성인 리얼돌에 대해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진행중> - 대법원 판결건 외에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 보류 중(별도 소송을 통해, 승소 시 통관허용) - 리얼돌 판매 사이트 성인인증 및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여부 등 주기적 실태 점검, 제도 미이행 사업자 시정요청 등 조치(9월 말) * 리얼돌 판매사이트 163개 확인 및 점검, 33개 업체에 대한 시정요구(30개 시정조치 완료, 3개 재시정 요구) - 아동형상 리얼돌 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추진 중(9~12월), 법체계 비교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20년 상, 예정) - 성인형상(특정인물 형상 포함) 리얼돌 규제 및 형사처벌 관련 연구용역 추진('20년, 예정) <입법사항> - 아동형상 성기구 제작 금지를 주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발의('19.8, 정인화 의원)
113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2019.9.6	디지털소통센터장	- 언론사 폐간, 방송사 허가 취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의 심판청구 권한은 시도지사 -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	<진행중> - 방통위는 3년마다 종편PP에 대해 재승인중으로, TV조선은 '20.4월에 방송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 조선일보 폐간 등 신문의 등록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별도 조치 없음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114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2019.9.9	국민소통수석	- 유 씨 비자발급 및 입국금지....향후 법원 판결 확정 결과에 따라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할 것 - 병역면탈자 방지위한 제도 개선...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 감소, 병역면탈자 277명 검찰 송치 -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 제도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진행중>**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11.15) 예정
115	동물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단속강화 청원	2019.9.27 2019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 해당 유튜버 검찰 송치. 반려견은 보호단체에서 보호중. - 처벌강화(2년, 2천만원 →3년,3천만원) 및 학대를 차등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국회처리필요 - 2016년-2019.8월까지 5,188심의/3,625시정요구 하였음. 유튜브 유해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및 엄중 대응 계획 - 국회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 관련 법안 발의되어 있어 국회 논의 필요. - 정부도 국민의견 수렴 위해 노력할 것	<진행중> -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20.2.28일 시행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을 상향(2년, 2천만원 →3년,3천만원)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18.12월 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 수립 T/F*를 통해 동물학대 처벌 및 범위 개선 방안, 「동물보호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분과위 8회 운영)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반 등 6개반, 70명(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연말까지 운영 예정 - 동물학대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방심위 모니터링 강화 및 엄중 대응 계획

연번	청원명	답변일	답변자(담당)	답변내용	조치 진행경과
					<입법사항> -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규제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처리 필요
116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2019.9.27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 '그것이 알고싶다'예고방송 후 과거 여자친구 김모씨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하여 법원이 '인용'결정한 경우임. -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는 알권리,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 -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 가짐. 인용에 불복할 경우 방송사는 이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함	<해당없음> -조치 불요

<별첨 2>

감사원 및 외부기관 감사결과 및 이행 내역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o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통보) o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o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o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o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o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 o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o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예정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o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지난 정부 관련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2/15(금) 14:20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조국 민정수석·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김의겸 대변인 : 주된 말씀은 조국 수석께서 해 주실 것이고, 저는 앞에 개요만 간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 검찰, 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순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뒤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 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들으셨던 모두말씀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원론이었다면 이 마무리 말씀은 구체적인 각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강조점은 오늘 회의를 한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 이 문장 속에서 대통령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 제가 작년 3월인가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때문에 온 이후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개혁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저희가 이 부서, 그리고 위원회와 소통·협력하고, 국가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촉진·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수석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대통령 발언 중에 보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 보고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정수석 : 정식 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공석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습니다.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그 대상 범위가 대통령 및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실장, 수석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으로 통과된 이후에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제도나 현재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니라 사전 예방 작동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대변인 :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정수석 :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박영선 의원님이 에피소드, 국회에서 일종의 협상 과정, 야당과의 협상 대화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 부분에 법 제도 개혁 관련해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에 어떤 구체적인 참석자라든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그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것이 입법이거든요. 행정부 차원에서, 즉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를 하셨고, 그 점을 위해서 그러면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논의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 있는데, 구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간단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법에 기초해 있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도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기자 : 조금 지역적인 질문인데, 오늘 어쨌든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인데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총장님과 민갑룡 청장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정수석 : 그것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안을 작년 6월에 합의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민갑룡 경찰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개혁을 해 오셨습니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 성원을 해 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의 충실히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두 분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기자 : 아까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공조를 이끌어낼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 민정수석 :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적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인가요?

▲ 민정수석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자 : 나왔던 질문의 추가 질문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입법이 목표인데 입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수처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신지. 공수처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정수석 : 저는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및 그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보게 되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것을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시고, 위에 보면 공수처가 중요한데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 민정수석 : 그것은 아까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 기자 : 그래서 이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같은 공수처에 대한 말씀과,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시는 것인지. 약간 후퇴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보게 되면,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요.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의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욱 더 철저히 하는 것이죠.

또 아까 검찰 같으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제가 법률 개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모두 행정부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그 지시로 이해합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 개혁 잠깐 언급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농단 관련해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에 좀 기대를 하시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제 개혁 이상의 무엇을 주문하시는 발언이나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 민정수석 : 오늘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입장은 과거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때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끝>

[9/30(월)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대통령 말씀 별첨

또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습니다.

※ 별첨

[9/30(월)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대통령 말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끝>